

청년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동향의 메타분석을 바탕으로

고함20 청년연구소

김선기 구승우 김지수 정보영 박경국 채태준

이 보고서는 2016년도 서울시청년허브 연구/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 례

| | |
|------------------------------------|----|
| 1. 연구의 개요 | 1 |
|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1 |
| 2) 연구방법 | 4 |
| (1) 젊은 연구자들의 ‘청년’ 연구 학습모임 | 4 |
| (2) 청년연구자 콜로키움 커리큘럼 개발 및 실행 | 7 |
| (3) 청년연구 메타분석 | 9 |
| 3) 연구팀 소개 | 10 |
| 4) 본문의 구성 및 연구의 활용 방안 | 11 |
| 2. 국내 청년연구 분야별 동향 | 15 |
| 1) 세대 및 ‘청년’에 관한 이론적 연구 | 17 |
| (1) 시론적인 논의 - 세대 개념의 명료화 필요성 | 18 |
| (2) 방법론 차원에서 구체적인 접근의 필요성 | 20 |
| (3) 세대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재검토 | 22 |
| 2) 청년실업 및 노동 문제에 관한 연구 | 23 |
| (1) 청년실업 실태 중심 연구 | 23 |
| (2) 청년실업 원인 중심 연구 | 28 |
| (3) 청년실업 해소 대책 중심 연구 | 35 |
| (4) 청년들의 노동 경험에 관한 연구 | 43 |
| 3) 청년의 빈곤화 현상에 관한 연구 | 46 |
| (1) 청년 부채에 관한 연구 | 48 |
| (2) 청년 주거에 관한 연구 | 53 |
| (3) 청년 빈곤에 관한 연구 | 60 |
| 4) 청년세대의 정치 및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 64 |
| (1)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 65 |
| (2) 청년세대의 정치행동에 관한 연구 | 69 |

| | |
|--|-----|
| 5) 청년세대의 문화에 관한 연구 | 76 |
| (1) 청년들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 76 |
| (2) ‘청년’ 담론을 분석하는 연구 | 80 |
| (3) 청년세대 관련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 | 86 |
| | |
| 3. 청년연구 비판 혹은 청년연구의 빈틈 | 92 |
| | |
| 1) 젠더 관점의 결여 | 94 |
| (1) 청년연구 속 성별의 표면적 범주화 | 96 |
| (2) 일반명사 ‘청년’의 남성중심성 | 97 |
| (3) 청년연구의 ‘젠더화’를 위하여 | 100 |
| 2) 분석범주의 단순성 | 102 |
| (1) 하나의 동일 범주로서의 청년세대? | 103 |
| (2) 통시적/역사적 관점의 결여 | 106 |
| 3) 방법론의 편향 | 109 |
| (1) 양적/통계적 방법론 중심성 | 110 |
| (2) 기존 청년연구의 영토주의와 엄밀성 문제 | 113 |
| 4) 당사자성의 문제 | 117 |
| (1) 당사자주의의 필요성과 그 한계 | 118 |
| (2) 당사자성의 재구성 - 성찰적 당사자성의 필요성 | 121 |
| | |
| 4. 앞으로의 청년연구를 위한 제언 | 124 |
| | |
| 1) 청년연구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위한 제언 | 125 |
| (1) 20대/30대에서 ‘청년’ 담론과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계로 | 126 |
| (2) 경제 불평등에서 상징 불평등으로 | 127 |
| (3) 사회 전체에서 개별 장(field)으로 | 132 |
| (4) 진단적 연구를 넘어서 수행적 연구로 | 135 |
| 2) 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 | 137 |
| (1) 기존 연구(자) 지원 제도의 패러다임 | 139 |
| (2) 청년연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143 |

| | |
|------------------------------------|-----|
| 5. 요약 및 결론 | 147 |
| 참고문헌 | 154 |
| 〈부록1〉 청년연구자 콜로키움 질의응답 모음 | 171 |
| [1회차] 청년X젠더 | 171 |
| [2회차] 청년X담론 | 174 |
| [3회차] 청년X정책 | 176 |
| [4회차] 청년X주거 | 180 |
| [5회차] 청년X진단 | 183 |
| [6회차] 청년X운동 | 185 |
| [7회차] 청년X대학 | 190 |
| 〈부록2〉 어머 이 책은 읽어야 해! (추천도서) | 195 |
| 〈부록3〉 어머 이 논문은 읽어야 해! (추천논문) | 198 |

〈표 차례〉

| | |
|-------------------------------|-----|
| 표 1. 발제 문헌 목록 | 5 |
| 표 2. 청년연구자 콜로키움 진행 사항 | 8 |
| 표 3. 연구진 목록 | 11 |
| 표 4.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내용 | 140 |
| 표 5. 신진/중견 연구자 지원사업의 내용 | 141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분석대상 연구들의 분야별 분류 | 16 |
| 그림 2. 분석대상 연구들의 젠더적 관점 포함 여부 | 95 |
| 그림 3. 분석대상 연구들의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 111 |
| 그림 4. 분석대상 연구들의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분야별) | 114 |
| 그림 5. 분석대상 연구들 중 대학원생 연구의 비중 | 117 |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청년’¹⁾ 담론은 지난 10여 년간 그래왔듯 앞으로도 한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IMF 이후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급격하게 대두되면서 청년실업 해소, 즉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청년정책들이 도입됐다. 2016년 1월 일간지들은 일제히 신년 기획으로 ‘청년’에 관련된 기사들을 내놓았고,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은 청년기본법이었다.

그러나 정책적 연구나 입법안들을 살펴보면 청년정책을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불쌍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시혜적인 복지정책이나 일자리 제공 정책으로만 여기는 등 ‘청년정책’이나 ‘청년’, ‘청년세대’, ‘청년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의미론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도 정책 관련자들 사이에서 청년정책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또 여기에서 정책 대상이자 정책도입의 필요성을 구성하는 ‘청년’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 수준이 높지 않다. ‘청년’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난립하고 있다. 청년정책 개발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정책 연구자들 역시 ‘청년’을 정의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정리되지 못한 ‘청년’ 개념은 청년정책 개발자, 연구자, 정책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상황의 가능한 원인 중의 하나로,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담론을 생산하는 관련 연구의 부재 혹은 편향을 지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 담론이 홍수를 이루고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도입되는 등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년’이라는 문제설정이나 청년의 삶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 양과 질이 아직까지 부족한 형편이다. ‘청년문제’가 중

1) 한국사회에서 ‘청년’이라는 기표에 관해 이루어져 온 논의들은 연령이나 출생 코호트를 기준으로 한 특정 연령층, 즉 청년층에 관한 논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다른 연령층과 상호배타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노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청년’ 담론에서 ‘청년’이 갖는 상징적인 기표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이 글에서는 기표로 사용되는 ‘청년’에 따옴표를 붙여서 표기할 것이다. 청년이 주로 20대-30대의 인구학적 집단을 지칭하는 기표로 사용될 때는 따옴표를 붙이지 않고 표기할 것이다.

요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은 급격하게 성장한 반면, 그렇다면 ‘청년’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나 구체적인 청년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지체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세대 연구에는 매우 특수한 부류의 ‘청년’ 담론’에서 그 문제의식이 거꾸로 시작된 탓에, ‘청년’에 대한 연구이지만 오히려 청년을 타자화하는 식의 세대주의(generationalism)적인 혐의를 부과할 수 있는 종류의 글들이 많다(Cf. 김선기, 2014).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과 관련한 개념들이 사회적, 정책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고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학문적 개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현재까지 2000년대 이후의 한국에서 이루어져 온 ‘청년’에 관한 연구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로, ‘청년 연구’란 무엇인가 혹은 어떠한 종류의 연구들을 ‘청년연구’라고 부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현재 ‘청년’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참조하고 있는 ‘청년문제’와 ‘청년’의 정의는 상호 이질적인 상황이며, 연구의 동력이 되는 문제의식,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꽤 많은 요소들이 연구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어떠한 연구 기획은 20대, 30대에 걸친 연령 코호트에 대한 연구를 청년연구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는 정도에서 진행되기도 하고, 일부 연구는 ‘청년문제’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청년연구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어렵게 되는 현상은 ‘청년’이라는 단어가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을 때 연구의 독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탓에, ‘청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각자의 연구에서 ‘청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에서부터 마땅한 준거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 씨름해야 하는 상황에도 있다. 청년연구라는 연구의 분야를 설정하는 문제도 요원해진다. 예컨대, 누구를 청년연구자라고 지칭할 수 있는가? 어떠한 종류의 연구자가 자신을 청년연구자로서 정체화할 수 있는가?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청년문제를 연구해나가는 연구자 집단이 존재할 수 있을 때, 청년연구라는 일정한 연구 분야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청년연구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청년’에 대해 연구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연구

전체를 청년연구라고 통칭하는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둘째로, 우리는 청년연구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편향이 ‘청년’이라는 기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혹은 만들어지기를 요구받고/기대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이나 청년운동의 상상력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청년문제’라는 언어가 한국사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정책이 취업률 지표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나(신윤정 외, 2015), ‘청년’ 관련 법안/조례의 도입에서 끊임없이 ‘불쌍한 청년세대’라는 의미만이 선택적으로 청년정책의 근거로 채택되고 있는 까닭은 일정 부분 ‘청년’에 관한 연구들이 관련된 연구 주제(일자리 창출 문제), 관련된 연구 관점(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의 청년문제)만을 편향적으로 반복 재생산하는 경향성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청년’은 청년층 연령/출생 코호트를 실정적으로(實情的; positively) 지칭하는 기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복지, 경제정책, 인구문제, 정치 이념 등과 관련된 특수한 이해들이 응축된 기표이다(김선기,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정책’이 꼭 ‘불쌍한 세대’로 의미화된 청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복지정책에만 국한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이는 청년고용정책 외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청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적인 구조들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서, ‘불쌍한 청년’들 개인들을 마치 정책이 ‘구제해 주는’ 식의 청년정책 의미론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는 다수 청년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열악해지는 구조 자체를 오히려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며, 일부 청년에게만 ‘베타적으로’ 공적 재원이 집중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정책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그간의 청년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일정한 연구편향과 연구의 빈틈을 실증적으로 발견해보고자 하는 야심찬 시도를 이 연구에서 진행하려고 한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정책 담당자나, 청년정책과 관련한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단체 활동가들, ‘청년’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청년’, ‘청년문제’, ‘청년정책’ 등 관련 개념들이 기존에 사용되어 온 방식들을 정리하고, 또 효과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그러한 개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년’ 담론, 청년정책 등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갖는 젊은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그들 스스로가 청년층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을 연구하는 청년연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구성하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과 청년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연구를 생산하는 청년연구그룹을 구성해 청년정책연구그룹/청년정책연구소(가칭) 설립 가능성을 타진해 볼 예정이다. ‘청년’에 관한 기존 연구물들을 읽고 정리하고 또 ‘청년’ 문제에 이해관심을 갖는 많은 젊은 연구자들 간에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연구자들의 연구관심에서 주목받지 못해왔던, 향후 더욱 자세하고 면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청년’ 관련 연구주제들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 연구의 커다란 목표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포함한 수행적인(performative)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청년연구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 각자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자료들을 읽고 많은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청년연구’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관점을 구체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음의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였다.

(1) 젊은 연구자들의 ‘청년’ 연구 학습모임

-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에 관한 연구주제 리서치

2016년 8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7일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연구진은 총 12회에 걸쳐 ‘청년’ 연구 학습모임을 진행하였다. 2016년 7월 한 달에 걸쳐 ‘청년’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 경력이 있거나 ‘청년’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팀을 꾸렸다. (학습모임 참여자들에 관한 정보는 이어지는 3절에 소개해두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에 나와 있는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논문 및 정책 연구, 법률 자료 등을 함께 읽으면서 연구보고서 작성과 향후의 연구주제 발견을 위해 기존의 연구 동향을 함께 습득하고, 공통의 인식 기반을 만들어 가

려고 시도했다.

표 1. 발제 문헌 목록

| 순 | 일자 | 주제 | 문헌 | |
|---|--------|-----|---------------------|---|
| 1 | 8월 13일 | 정책 | 서울시청년허브 (2015) |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 서울이 만드는 다음 세대의 여지, 청년이 만드는 다음 사회의 공공 |
| | | | 기획재정부 (2015) |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
| | | | 박영정(2015) |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
| 2 | 8월 20일 | 담론 | 전상진(2002) |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
| | | | 전상진(2004) |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
| | | | 전상진(2006) | 청소년 연구와 청소년상 |
| | | | 박재홍(2009) |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 | | 전상진(2010) |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 독일 세대논쟁의 88만원세대론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3 | 8월 31일 | 일자리 | 노혜진(2012) |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
| | | | 이승렬(2015) |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 과정 연구 |
| | | | 류기락(2012) | 노동시장제도와 청년 고용 |
| | | | 김중성, 이병훈, 신재열(2012) |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 |
| | | | 김영재, 정상완 (2013) | 한국 역대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비교연구 |
| 4 | 9월 9일 | 창업 | 김진수 외(2011) | 청년창직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 | | | 하규수 외(2013) | 국내 창업정책의 변화 및 평가 |
| | | | 김정주(2015) | 청년창업: 모두가 자본가가 되는 유토피아? |
| | | | 채태준, 김선기, 박경국(2016) | 청년상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대안 모색 |
| | | | NemoPartners (2011) | 창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
| 5 | 9월 19일 | 노동 | 이창순(2007) | 한국사회 임시직의 분화와 이질성 |
| | | | 박성재, 반정호 (2012) | 청년 취업자의 저임금근로 진입과 탈출에 관한 연구 |
| | | | 문혜진(2013) |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
| | | | 김영, 황정미 (2013) |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
| | | | 박수명(2013) |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고용, 실업,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
| | | | 김영(2016) | 일본 블랙기업 노무관리 연구: 청년 노동자 같아서 버리기 기법과 확산배경 |
| 6 | 9월 26일 | 주거 | 정민우(2012) | 〈자기만의 방〉 |
| | | | 황서연(2014) | 서울지역 주거부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사업 모델과 당면과제: 청년 주거빈곤을 중심으로 |
| | | | 이수욱 외(2015) |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
| | | | 대학내일연구소 | 대한민국 대학생 지금 살 만합니까? - 수도권 거주 |

| | | | | |
|----|---------|-----|-----------------|---|
| | | | (2015) | 대학생 주거실태 분석 보고서 |
| 7 | 10월 10일 | 부채 | 이필남, 김정년 (2012)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
| | | | 최계연(2014) | 빚쟁이 청년들: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대안제시 |
| | | | 백진영(2014) |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경험을 통해 본 신용과 부채 인식의 형성 |
| | | | 천주희(2015) | 대학생은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가? |
| | | | 곽민주, 이희숙 (2015) | 학자금대출상환으로 인한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
| | | | 국회토론회 자료 | 한국사회 대표 을, 청년들의 부채문제 |
| | | | 서울복지재단 토론회 자료 | 부채절벽 벼랑 끝에 선 120만 청년을 구하라 |
| 8 | 10월 17일 | 주체성 | 한운형(2010) | 월드컵 주체와 촛불시위 사이, 불안의 세대를 말한다 |
| | | | 김세균(2010) | 한국의 정치지형과 청년세대 |
| | | | 소영현(2012) | 한국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
| | | | 박권일(2012) | 세대와 정당정치: 정치적 세대동맹의 역사와 의미 |
| | | | 오혜진(2013) | 순응과 탈주 사이의 청년, 좌절의 에피그램 |
| | | | 이기형 외(2015) | 청년주체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중심으로 한 구직 경험의 문화적인 분석 |
| | | | 김홍중(2015) |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
| | | | 김수미(2016) | '자원봉사 시민(volunteer-citizen)' 되기 |
| 9 | 10월 24일 | 운동 | 홍명교(2011) | 대학의 위기와 대안적 학생운동의 전망 |
| | | | 최철용(2011) | '청년운동'의 정치학 |
| | | | 이광석(2011) | 인터넷 한국의 사회운동: 청년세대들의 미디어 문화정치 |
| | | | 김소연(2013) | 청년세대 문화정치운동: 자립음악생산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
| | | | 류연미(2014) |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활동가의 실천 연구 |
| | | | 유형근(2015) | 청년 불안정노동자 이해대변 운동의 출현과 성장: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
| 10 | 10월 31일 | 젠더 | 김효진(2011) | 서울 대학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연애 |
| | | | 김혜경, 이순미 (2012) | '개인화'와 '위협':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성인기 이행'의 불확실성과 여성 내부의 계층화 |
| | | | 김현아(2015) | 청년 여성의 불안정 노동 경험과 '가족 실행' 전략에 관한 연구 |
| | | | 배은경(2015) | '청년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
| | | | 장민지(2016) | 유동하는 세계에서 거주하는 삶: 여성청년 이주민의 장소 만들기 |
| | | | 천정환(2016) |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 '페미니즘 붐기'와 한국 남성성의 위기 |

공부 모임 1회당 2시간 반에서 3시간가량이 소요되었으며, 당일 할당된 자료

분량에 대한 논의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날짜로 이월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12회에 걸쳐 55개에 달하는 문헌을 함께 읽고 논의했다. 모임에서는 각각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청년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주로, 읽은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다.

(2) 청년연구자 콜로키움 커리큘럼 개발 및 실행

2016년 11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10일까지 총 7회에 걸친 연속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콜로키움의 제목은 〈청년연구자 콜로키움: 청년연구, 하지?〉로 정했다. ‘청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청년연구를 누가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정한 제목이었다. 전체 연구가 시작되기 전 원래 이 행사는 ‘청년사회학(sociology of youth) 세미나’의 형태로 기획될 예정이었다. 이는 청년연구에 관심이 있는 젊은 (예비) 연구자들을 고정 세미나원으로 모집하여 같은 연구 결과를 읽어 나가면서 공부를 해 가는 그룹을 만드는 것을 중심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청년’ 연구에 대한 학습모임을 진행하면서, 청년연구(혹은 청년사회학)라는 영역 자체로 커리큘럼을 만들기에는 아직까지 관련된 연구나 학제적 문제의식이 발달한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청년연구, 그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조형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풀기 위해서는 ‘청년’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석자들의 청년연구에 대한 의식과 희망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유용하리라 판단하게 됐다.

회당 진행시간은 2시간 정도로 기획했으나 대부분의 세션에서 토론이 이어지면서 조금 더 길어졌다. 시간 배분은 두 명의 발표자가 20~30분 정도 발표를 해서 앞의 1시간을 채우도록 한 후, 나머지 1시간은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으로 운영했다. 참석자의 수는 서울청년주간과 동시에 진행된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의 경우 25~40명 정도, 나머지 세션의 경우에는 10~20명 정도였다. 소규모로 진행된 만큼, 전체 참석자들의 소개를 듣고 시작함으로써 활발한 토론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참석자들은 ‘청년’ 문제에 관심을 두는 대학원생과 예비

대학원생들, 자신을 청년활동가로 일정 부분 정체화하는 사람들, 직장인으로서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참석자들의 다양한 구성은 청년연구에 관한 논의를 이론적 차원 혹은 그것을 넘어서 현학적 차원에서만 다루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삶에서 ‘청년’이라는 범주의 부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균열 지점들을 포착하여 논의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표 2. 청년연구자 콜로키움 진행 사항

| 순 | 일시 및 장소 | 주제 | 발표 내용 | |
|---|---------------------------------|---------------|-------------------------------------|--|
| 1 | 11/12(토) 13:00-15:00 청년허브 | 청년 X 젠더 | 장민지 (영상학 박사) | 젠더 감수성과 여성 청년, 젠더 무의식에 대하여 |
| | | | 김현아 (실천여성학 석사) | 청년 여성의 불안정 노동 경험과 ‘가족 실행’ |
| 2 | 11/12(토) 16:00-18:00 청년허브 | 청년 X 담론 | 김선기 (고함20 청년연구소) | ‘청년세대’ 담론에 대한 질문들 |
| | | | 김예은 (언론학 석사과정) |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청년 연애 |
| 3 | 11/19(토) 18:00-20:00 중앙대 | 청년 X 정책 | 박경국, 채태준 (고함20 청년연구소) | 청년정책 들여다보기 |
| | | | 천주희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저자) | 부채로 본 청년/세대 |
| 4 | 12/3(토) 15:00-17:00 서강대 | 청년 X 주거 | 마민지 (〈버블패밀리〉 감독) | 도시/공간의 고현학(考現學) |
| | | | 구승우 (언론정보학 석사) | 도시 이주 청년들의 ‘방살이’ 경험과 감정 구조 |
| 5 | 12/3(토) 18:00-20:00 서강대 | 청년 X 진단 | 김지수 (언론정보학 석사) | 냉소로 생존하기: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경험 분석을 토대로 |
| | | | 최태섭 (문화평론가, 〈인여사회〉 저자) | 10년 간의 ‘청년질’은 무엇을 남겼나 |
| 6 | 12/10(토) 15:00-17:00 중앙대 | 청년 X 운동 | 류연미 (사회학 박사과정) | 시민성 학습 기획으로서의 청년활동: ‘서울시청년허브’의 경우 |
| | | | 정보영 (사회학 석사과정) | 사회운동의 프레이밍 전략에 따른 제도담론의 변화: 청년유니온의 사례 |
| 7 | 12/10(토) 18:00-20:00 중앙대 | 청년 X 대학 | 김선기 (영상학 박사과정) | 국내 대학에서 문화연구 전공 대학원생으로 산다는 것 |
| | | | 김민섭 (작가, 〈대리사회〉 저자) | 청년연구자와 대학 노동 |

이상의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청년연구에 대한 우리 나름의 입장과 관점을 발전시켰다. 뒤이어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간단한 수준에서라도 청년연구를 메타분석하고 이 결과를 통해 청년연구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글을 쓰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메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들이 각자 원래 가지고 있던 연구관심과 학습모임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문제의식들을 포괄하여 향후 중요하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청년’ 문제 관련 연구주제들을 도출하고 이 연구들의 실행 방안을 고민하였다.

(3) 청년연구 메타분석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진 글라스(Gene Glass)에 의해 1976년 처음으로 소개된 연구방식으로, “동일한 영역에서 전체 연구를 조망하고, 특정한 이론이나 방법론을 누적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황상재, 박석철, 2004). 로저스(Rogers)는 “연구에 대한 연구이자 분석에 대한 분석”, “기존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요약정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메타분석이 가진 효용성으로 꼽고 있기도 하다(성욱제, 2012).

메타분석은 “기존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계량적 연구방법”(Petitti, 2000, 정세훈, 2012, 305쪽에서 재인용)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단지 기존 연구를 요약정리하며 통계적으로 나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메타연구는 “연구 성과에 대한 진단과 비판적 성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간주된다(강진숙, 2008). 메타분석은 “지난 연구를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데 유용하며, “향후 연구에 길잡이”가 될 수 있다(정인숙, 2006). 메타분석은 종합적 메타분석과 분석적 메타분석으로 그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류준호, 윤승금, 이영주, 2010), 종합적 분석은 연구 전반에 관해 분석하며, 통계적으로 정리된다. 이후의, 분석적 메타분석은 한 가지 개념이나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동일 주제를 다룬 연구를 분석 단위로 삼아 측정된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경우다. 우리는 아직 ‘청년’ 관련 연구의 연구동향에 관한 메타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시론적, 탐색적인 작업을 통해 앞으로 계속될 ‘청년’ 연구들에 필요한 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일차적으로는 연구자료들을 분류하기 위한 유목들을 설정하여 코딩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총 216개의 연구논문이 표집되었으며, 우리가 설정한 분석 유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자료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따라서 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청년’ 문제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 일자리 관련 연구(실업/창업/노동 등), 빈곤화 관련 연구(주거/부채/빈곤 등), 정치/사회운동 관련 연구, 문화 관련 연구. 2) 자료의 서술에서 젠더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3) 자료 저자의 직업상 지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활동가/공무원/기타. 4) 연구의 성격을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학술연구, 정책연구, 비평연구. 5) 자료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연구방법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양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 문헌 연구방법이 각각 자료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한 기술통계를 내 청년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청년연구 학습모임과 청년연구자 콜로키움을 통해 형성된 청년연구 전반에 관한 문제의식과 접합시켜서 코딩 유목에 대한 기술통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연구의 경향 혹은 편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시도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년연구가 현재 어떠한 빈틈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앞으로의 청년연구가 내용상으로 보완해야 할 지점들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3) 연구팀 소개

연구의 진행을 총괄한 모임은 고함20 청년연구소다. 고함20은 ‘20대의 소란한 공존’, ‘20대가 만드는 20대 언론’이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언론이다. 2009년 8월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올해 8년차가 되었다. 고함20은 20대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치언론’을 지향하며, 구성원 모두가 전부 20대로 이뤄져있다. 고함20은 ‘경찰할 의무 대신 고함칠 권리’를 외치며 사회에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사를 통해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기성세대의 청년에 대한 타자화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한국사회 ‘청년’ 담론의 지형에 개입하고자 한다. 고함20은 2009년 만들어진 이후 기사의 형태로 ‘청년세대’ 담론에 개입하는 일을 계속해 왔으나, 이후 조금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담론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면서, 관심 있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팀의 이름인 [청년연구소]는 2014년부터 고함20을 통해 정기적으로 게재되어 온 ‘청년’에 관한 연구 논문, 단행본 등을 소개하는 연재물의 제목에서 따온 이름이다.

연구진은 고함20 청년연구소에서 함께 공부와 연구를 진행해 온 팀원들 세 명과, 이번 연구를 위해서 섭외한 팀원들 세 명까지 총 여섯 명으로 구성되었다. 고함20 청년연구소는 2016년 5월부터 월간 청년정책리포트를 작성해 왔으며, 청년정책 일반, 주거정책, 창업 및 청년장사꾼 정책, 부채정책, 평생교육정책 등에 관

하여 별도의 리포트로 다루어왔다. 책임연구자인 김선기는 ‘청년’ 담론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을 썼으며, ‘청년’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김지수와 구승우는 청년층의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을 문화적으로 분석한 논문의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바 있으며, 구승우는 청년들의 ‘방살이’를 다룬 청년 주거 관련 석사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 정보영은 한국사회학회 학술행사에서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을 사례로 한 논문 발표를 진행했던 바 있다.

표 3. 연구진 목록

| 성명 | 소속 | 연구수행시 역할 | 경력 및 연구경력 | 학력 |
|-----|-------------|--------------|--|-----------------------|
| 김선기 | 고함20 청년 연구소 | 연구총괄 담론 | · 고함20 대표 역임 · ‘청년’ 담론, 대학원생 관련 연구논문 발표 · 청년허브 공모연구(2014)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박사과정 |
| 김지수 | 경희대학교 | 젠더/공간 | · 청년층의 자기소개서 경험 학술논문 발표 · 안산 공간 연구 석사학위논문 발표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
| 구승우 | 경희대학교 | 주거 | · 청년층의 자기소개서 경험 학술논문 발표 · 청년 주거 관련 석사학위논문 발표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
| 정보영 | 중앙대학교 | 노동/ 사회운동 | · 청년유니온의 청년운동 관련 학회 발표 · 최저임금 관련 석사학위논문 작성 예정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
| 채태준 | 고함20 청년 연구소 | 청년정책 및 청년연구자 | · 고함20 청년연구소 팀장 · 자유인문캠프 기획단 · 경기도 시흥시 월간 청년정책리포트 작성 |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과정 |
| 박경국 | 고함20 청년 연구소 | 콜로키움 실무담당 | · 고함20 청년연구소 팀원 · 아주대 세계시민성연구 연구조교 · 경기도 시흥시 월간 청년정책리포트 작성 |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사과정 |

4) 본문의 구성 및 연구의 활용 방안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청년연구 학습모

임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청년연구의 분야별 동향을 정리한다. 우리는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논문DB에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 연구들을 커다란 주제(테마)에 따라서 다섯 개의 덩어리로 분류하였다. 1) 세대 및 ‘청년’에 관한 이론적 연구, 2) 청년실업 및 노동 문제에 관한 연구, 3) 청년의 빈곤화 현상에 관한 연구, 4) 청년세대의 정치 및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5) 청년세대의 문화에 관한 연구.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청년연구가 어떤 종류의 문제의식들 아래에서 진행됐는지, 다음 청년연구를 고민하는 연구자들이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작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고, 각각의 연구 분야에 존재하는 일정한 경향성과 연구의 빈틈을 탐색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2장에서 수행한 청년연구 동향 정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청년연구 전반에 존재해 왔던 분석의 결여지점(비판지점)이나, 방법론적 혹은 인식론적인 문제 지점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이로써 ‘불쌍한 청년세대에 대한 시혜적 지원의 필요성’으로만 귀결되지 않는 혹은 청년세대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반복 재생산하지 않는 식의 청년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 어떠한 참조점들이 필요한지에 관해 화두를 던져보고자 했다. 우리는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모든 연구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1) 젠더 관점의 결여, 2) 분석 범주의 단순성, 3) 방법론의 편향, 4) 당사자성의 문제 등에서 논의할 지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동 연구의 과정을 통해 공유하게 되었다.

4장에서는 앞으로의 청년연구에 대한 연구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제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청년연구의 내용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연구라는 분야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지원 사업 정책에 관한 것이다. 먼저 우리는 아직까지 청년정책이나 ‘청년’과 결부되어 있는 한국사회 내의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청년연구’라는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고 ‘청년에 관한 연구’들만 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청년연구’라는 연구 영역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식 기반이 필요한지에 관해 전문화와 다양화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한편, 특히 당사자성을 겸비한 연구자들이 청년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재의 학계 상황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최근 생겨나고 있는 광범위한 청년연구에 관한 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후 5장에서는 간단하게 결론을 정리하였다. 부록에는 연구 과정에서 진행했던 청년연구자 콜로키움에서 나왔던 토론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두었다. 또한, 본문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단행본들을 추가로 정리해 두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생산된 ‘청년’ 관련 단행본들을 철저히 모조리 조사하여 쓴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한계를 작게나마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연구 중 특정한 연구분야에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2장의 해당하는 절을 활용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청년연구 전체를 메타적으로 비판하고 새로운 청년연구의 경향을 모색하는 본고의 핵심내용에 관한 궁금증이 더 큰 독자들은 2장을 건너뛰고 바로 3장과 4장의 논의를 읽으면 더 효율적으로 이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글이 각자의 이유로 청년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읽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선 당연히 가장 중요한 독자는 ‘청년’에 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 집단이다.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잠재적인 청년연구자는 어느 정도 ‘청년’으로서의 당사자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청년연구자라는 명칭 안에는 ‘청년’을 연구하는 연령상의 당사자성이 없는 연구자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당사자성(당사자-연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3장 4절에서 논의해 두었다.) 우리가 청년연구에 대해서 하는 주장이 ‘청년’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지켜나가야 하는 기준인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우리는 이 글에서 제시하는 문제의식을 통해서 ‘청년’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다.

우리는 우리의 글이 몇 가지 측면에서 청년연구자들에게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 청년연구의 분야별 동향에 관한 우리의 정리가 ‘청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자기 연구에 대한 위치 감각을 찾도록 도와줄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둘, 우리는 현재까지 진행된 청년연구들의 경향성을 정리함으로써, 어떠한 종류의 청년연구가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분야인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려고 한다.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의 문제의식을 설계하는 데 이 연구의 제언들이 도움되기를 바란다. 셋째, 이 글이 많은 연구자들에게 ‘청년’에 관한 연구관심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후 ‘청년’과 관련한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많이 발굴되어 청년연구가 조금 더 생산적인 방

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을 연구자로 정체화하지는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진 개인성이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에게도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으로서의 ‘청년’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청년층 개인이나 집단이 있다면, 이 글이 정리해 둔 연구동향은 어떤 글을 먼저 읽으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안내 지도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활동의 폭과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넓히는 일로 고민하고 있을 청년활동가들이나 여전히 ‘청년’에 대한 이러저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과도 이 글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의 글이 미약하게나마 ‘청년’이라는 문제, 청년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 공동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기를 원한다.

2. 국내 청년연구 분야별 동향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이미 단순히 연령상의 20대나 30대, 즉 청년층 연령 코호트만을 가리키는 방식으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단어나 개념, 연구대상에서 출발하는 연구논문들은 폭은 매우 넓고, 몇몇 학문 분과나 몇몇 주제에만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기존에 진행되어 온 청년연구의 동향을 정리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청년연구고 무엇이 청년연구가 아닌지를 조작적으로나마 정의하는 일이 필요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년’이라는 검색어로 논문DB를 뒤져서 나오는 다양한 연구들을 청년연구의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포괄하되, 논문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격 사유가 보이는 것들은 제외했다. 첫째, 오늘날 한국사회의 ‘청년’에 관해서 다루는 연구가 아니라 과거의 ‘청년’ 혹은 해외의 ‘청년’에 관해 다루는 논문은 제외했다. 둘째, 연구의 제목에 ‘청년’이 들어가더라도 연구내용상 오늘날의 ‘청년’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연구라기보다는 인구통계상에서의 의례적인 연령대별 차이 분석 정도에서 그치는 연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연구논문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논문DB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라면 정부 정책보고서나, 국회 토론 자료집, 잡지에 실려 있는 청년운동/활동가들이 작성한 에세이들 가운데 그것이 청년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 총 216건의 연구자료들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청년연구를 각각의 자료가 청년연구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인식의 결이나 연구대상 자체의 성질, 주된 연구방법 등의 차이를 바탕으로 5가지 연구분야로 범주화하였다. 1) 세대 및 ‘청년’에 관한 이론적 연구. 이 범주에 분류된 연구의 편수가 적다는 것은 국내 문헌들 중에서 세대 혹은 ‘청년’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사유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몇 편 안 되는 2000년대 초반의 세대사회학적 이론화 작업이 오늘날의 다양한 ‘청년’ 문제를 사유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틀이 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2) 청년실업 및 노동 문제에 관한 연구. 원래는 청년실업 및 일자리 문제에 관한 연구와 청년들의 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를 분리하여 논의하고자 했으나, 청년의 노동에 관한 문제들은 대부분 청년실업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실업(일자리)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노동 관련 문헌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탓에 범

주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청년실업 문제를 가장 중요한 ‘청년’ 문제로서 다루며, 청년실업의 실태나 구조적 원인, 청년 내의 취업 취약 계층에 관한 분석,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3) 청년의 빈곤화 현상에 관한 연구. 청년실업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청년’이라는 연령/출생 코호트가 빈곤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연령상의 청년층을 새로운 취약(precaious) 계층으로 논의하고 있는 연구들이 해당된다. 특히 청년층의 빈곤화 문제는 새로운 종류의 청년문제로 논의되어 온 대표적인 주제인 청년 주거 문제나 청년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4) 청년세대의 정치 및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정치와 사회운동에 있어서 청년세대를 동원할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운동의 주체로서 청년세대의 집단 조직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들이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청년세대의 정치성향(정치적 지향성)이나 참여에 관한 의식 등을 다루며,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운동 실천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5) 청년세대의 문화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들이다. 청년들의 문화나 정체성(주체성)에 관해서 탐구하는 논문들이 많고, 한편 ‘청년세대’ 담론들을 바탕으로 청년문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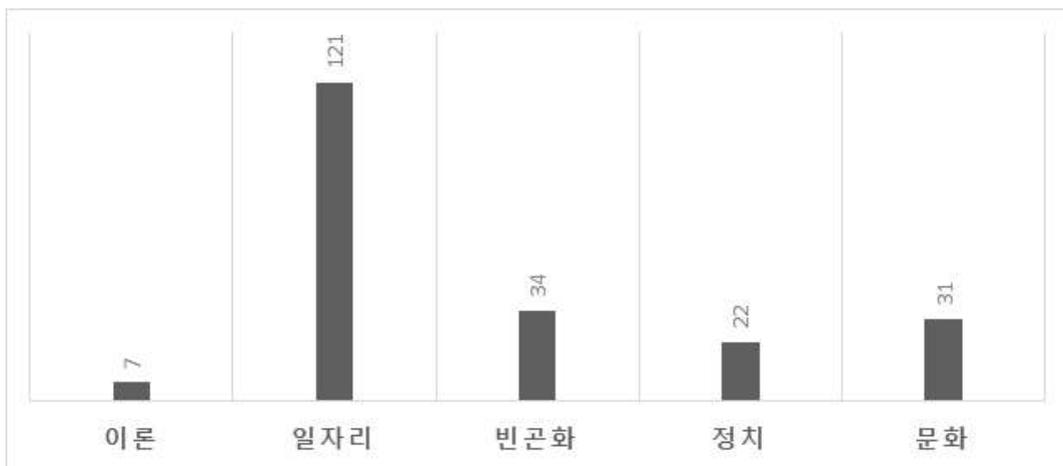


그림 1. 분석대상 연구들의 분야별 분류

선별된 연구 자료들을 이러한 범주에 따라 코딩하여 분류한 결과는 위의 <그림 1>과 같은데, 216건 중 121건(56.0%)의 자료가 일자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빈곤화, 정치 및 사회운동, 문화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편중은 그 자체가 한국사회에서 ‘청년’을 문제화하는 방식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지금까지 만들어져 시행돼온 청년정책의 결이 주로 청년실업 해소의 문제에만 집중된 것과도 일정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논문DB에서 검색되지 않는 자료나, ‘청년’이라는 검색어로 찾을 수 없지만 분명히 ‘청년’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연구들, 단행본 자료, 그리고 국내 자료 외에도 참고할 수 있는 해외 문헌 자료까지 폭넓게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한 것은 이 글이 갖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록2〉에는 ‘청년’과 관련되어 읽어볼 만한 단행본 목록을 간단하게 정리해두었다.

1) 세대 및 ‘청년’에 관한 이론적 연구

청년연구는 ‘청년’을 연구한다. 따라서 ‘청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느냐의 문제는 연구의 방향 및 결론뿐 아니라, 연구가 ‘청년’이라는 언표를 둘러싼 담론들에 미치는 효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명징하게 ‘청년’을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청년’은 특정한 연령/출생 코호트를 지칭하는 인구학적인 범주이기도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3포세대’ 혹은 ‘88만원세대’ 등과 같이 특정 역사적 계기와 조건을 공유함으로써 동류의식을 지니게 된 집단을 가리키는 특수한 다의적 언표이기도 하다. ‘청년’ 혹은 ‘청년세대’의 개념은 다의적이지만 빈번하게 명징한 정리 없이 각각의 담론주체들이 가진 정치/경제/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연구는 그 연구대상인 ‘청년’이라는 언표가 얼마나 모호하고 또 다의적인가를 충분히 고려하는, 세심한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청년’ 개념의 다의성과 모호성, 그로 인한 정의 과정에서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 중 하나는 세대사회학이다. 세대라는 개념은 마치 ‘청년’이 그렇듯 인구학적 연령/출생 코호트를 지칭하는 개념이면서도, 특정한 행동양식이나 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도 사용되면서 사회의 변화를 해석하는 틀로 기능해왔다. 따라서 세대사회학에서 세대 개념을 논의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청년세대’ 혹은 ‘청년’의 의미 규정을 명확하게 하거나 혹은 지금까지 많은 저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사용해 온 방식들을 분석적으로 구분해 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서 세대사회학을 바탕으로 한 세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주로 경상대 박재홍 교수와 서강대 전상진 교수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두 연구자는 세대 개념의 모호성 및 다의성과 세대 범주화의 신중함에 대해서는 합의하면서도, 세대 연구가 봉착한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과 세대 문제 자체에 대한 접근법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이들의 연구(박재홍, 2001; 2003; 2009; 전상진, 2002; 2004), 그리고 최근 세대 이론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하면서 발표된 몇몇 연구(김선기, 2014; 허석재, 2015a)는 국내에 매우 희소한 세대사회학 이론에 관한 문헌이다. 청년연구를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해 위 연구들의 내용과 시사점을 간략히 소개 및 설명하고자 한다.

(1) 시론적인 논의 - 세대 개념의 명료화 필요성

한국 필자들의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국내외를 불문하고 세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 1929/2013)의 논의에서 출발하고 이를 더욱 면밀하게 읽어 내거나 혹은 비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각자의 세대 연구의 근거 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번역본을 기준으로 64쪽에서부터 세대 현상에 관한 만하임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1929년 쓰인 것으로 만하임의 세대현상에 대한 궁극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먼저 만하임은 세대에 관련된 용어를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세대위치(Generationslagerung)는 실제 세대(Generationenzusammenhang)와 동일하지 않다”(64쪽)고 언급하면서, 단순히 생물학적 속성에 근거한 세대 개념과 거리를 둔다. “역사적-사회적 통일성이라는 공동 운명에 대한 참여”(65쪽)가 있어야만 세대위치에 있는 개인들이 실제 세대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만하임은, 같은 실제 세대 안에서도 다른 세대단위들(Generationseinheiten)이 존재하며 이것을 “단순한 실제 세대가 구성했던 유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유대”(67쪽)로 정의하였다. 세대단위들은 “다양한 개인들이 공통적인 사건들에 느슨하게 참여하기는 하지만, 주어진 사건 관계를 다르게 해석”(71쪽)한다. 만하임이 이러한 개념들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은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현상들과 사회적-정신적 힘들의 산물인 현상들을 뒤섞지”(79쪽) 않기 위해서이다.

번역본의 역자 해제에서 이남석(2013)은 만하임의 세대론의 가장 중요한 시사

점으로 다음을 열거한다(132쪽). ① 만하임이 세대를 수직적 이해에서 수평적 이해로 바꾸어놓았다. ② 동시대에 서로 다른 세대단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해, 동일 세대가 더 분자화되고 구체화되어 분석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③ 실증주의적 세대론과 낭만주의적 세대론이 정태적 분석, 즉 과거의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만하임의 세대론은 당대의 변동하고 있는 세대론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박재홍(2001)의 연구는 국내 세대사회학 이론/방법론에 관한 시론적인 연구로 여겨진다.²⁾ 그는 켈쩌(Kertzer)의 1983년 연구에서 세대 개념이 일상과 연구에서 사용되는 4가지 용례 - ① 친족계보(kinship descent)에서 동일항렬에 속하는 사람들 ②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출생 코호트 ③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 ④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 - 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용(73-74쪽)하면서 세대 개념이 지닌 다의성을 세대연구의 중심 문제로 제기한다. 따라서 논문은 ‘어떻게 다의적인 세대 개념을 정리할 것인가? 혹은 통제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한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2년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사회학자 전상진의 논문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역시 국내 세대사회학 연구 초기에 나온 이론적 논문이다. 이 글은 저자가 말하듯 “세대개념의 개념적 교통신리”(197쪽)를 위한 시도이다. 저자는 세대개념을 미시 수준의 가족적 세대, 미시와 거시에 모두 해당하는 교육학적 세대, 거시 수준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 세대 등으로 분석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대사회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만하임의 글을 비롯해 특히 독일어권에서 나온 세대 개념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다.

국내의 초기 문헌들이 제기하고 있는 바는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 하나는 세대 개념이 매우 복잡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세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개념은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세대연구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세대요인의 중요성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이해하려는 유혹”이 존재하지만(박재홍, 2001, 74쪽), “세대개념 자체에 내재된 다의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생기는 혼란을 빌미로 이 개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또한 문제적이다(전상진, 2002, 223쪽). 이러한 ‘세대’ 개념을 명료하게 분석적으로 구분해서 한국

2) 본고에서는 그의 논문이 다시 편집되어 있는 단행본 <한국의 세대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2005)를 기준으로 인용 쪽수를 밝혔다.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2) 방법론 차원에서 구체적인 접근의 필요성

박재홍의 2003년 연구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는 만하임의 ‘세대’ 개념에 대한 비판과 ‘세대’ 개념의 재개념화를 시도한다. 박재홍은 만하임의 세대 개념은 매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비판한다(박재홍, 2005, 84쪽). “첫째, 그의 세대개념은 사회운동의 함의를 강하게 갖기 때문에 사회운동과 직접적 관련을 갖지 않는 세대현상(세대 차이, 세대 갈등 등)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둘째, 만하임의 세대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이기에 경험적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비판은 이후 사회학자 김홍중(2015)의 만하임 비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사회역사적 세대’로 ‘세대’를 만하임의 개념에 비해 다소 느슨하게 다시 정의한다(85-86쪽). 그에게 “세대란 ①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해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② 공유된 경험에 기초해 다른 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가지며, ③ 자신이 속한 코호트에 대해 최소한 느슨한 수준에서라도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을 뜻한다.

세대 개념에 대한 재정의를 바탕으로, 박재홍은 세대 개념을 일종의 연령/출생 코호트로, 세대 연구를 코호트에 대한 분석으로 대체하는 식의 연구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세대사회학의 주요 연구 과제를 “역사적/문화적 경험의 공유(세대 경험)가 어떠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 상의 공통점(세대 특성)을 낳고, 나아가서 다른 세대와의 차이를 인지하며(세대차이 인지), 세대 내부적으로는 동류의식이나 연대감(세대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명시한다(95쪽). 그는 “동일세대 내에서의 경험의 차이”가 세대연구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라고 인식하면서도, “다른 코호트와의 ‘큰 차이’와 견주어 볼 때 동일한 코호트가 보여주는 의식과 행위양식 면에서의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코호트 분석을 통한 세대연구를 정당화한다(92쪽).

(이후에도 박재홍은 2009년 연구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세대에 대한 “집합적 평가를 금기의 영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밝힌다. 박재홍은 “세대가 다차원적이고 특정 연령층이

동질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하지만 “그 문제와 '하나의 세대' 문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가 보기에는 계급이나 젠더 범주 같은 다른 영향력 있는 범주들 역시 다차원적이며, 그 구성원들은 이질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과 '단일한 세대의 가정'은 분리해 보아야 하며, '단일한 세대의 가정'을 문제 삼아 논의를 금기 영역으로 지정하면 “세대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풍요로운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상진의 2004년 논문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 연구의 빈곤”은 이러한 코호트 분석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쓰였다. 전상진은 코호트 분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의심하는데 첫째로는 “확정의 문제(identification)”를 든다. 각각의 변수(연령효과, 코호트효과, 기간효과)가 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나타나기에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각각의 변수들 - 연령, 코호트, 기간, 세대 특성 등 - 이 '가설'일 뿐이며, “가설의 대립적인 검증을 통해서 인과적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러한 변수들을 전제하는 것 자체가 이념형적이라서 실제 분석에는 무리를 준다. 예컨대, “연령효과라는 변수의 전제는 동일한 연령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찰 시점에서 동일한 행동유형을 보여줄 것이라는 가설”(40쪽)은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전상진이 문제로 삼는 것은 ‘코호트효과의 과대 강조’이다. 이는 청소년기 공유된 경험에 대한 과대 강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① 청소년기에만 세대형성의 기본적 계기가 작동한다고 보고, ② 경험하는 방식 및 사건의 가공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그 사건이나 역사적 단계 자체에만 집중하며, ③ 세대형성 과정에서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41-42쪽)는 점에서 코호트효과를 과대하게 강조하는 세대연구는 문제적이다. 저자는 “세대의식이 단순히 청소년기에 각인된 경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가, 아니면 세대 간의 관계에 의해서 경험과 기억이 가공 재구성(reconstruction)되어 '의식화'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전상진은 세대에 대한 객관주의적 입장과 주관주의적/문화사회학적/해석학적 입장을 구분하면서,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르디외의 계급이론을 통해서 탐색한다. 그는 부르디외의 계급이론을 세대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객관주의나 주관주의의 한쪽을 쫓지 않고 양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입장”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세대의 문제에 적용하여 “세대는 곧 세대단위의 정치적 구성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들이 실천적인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뭉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적 상황 및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46쪽)고 이론화한다. 그에 따르면 주관주의적 입장은 “객관적 사회상황의 결정적 역할에 대한 고려”를 유념해야하고, 객관주의적 입장은 “세대 의식형성이 객관적 상황의 자연적-필연적 결과”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관적, 객관적 세대연구의 양 극단을 중재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세대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재검토

김선기의 2014년 연구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세대를 말하는 연구자들에게 성찰성을 요구한다. 해당 논문이 발행된 시기는 ‘88만원세대’ 담론 이후 ‘실크세대, N포세대’ 담론 등 ‘청년’에 관한 다양한 세대담론들이 축적된 시기였다. 저자는 “일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세대담론의 근거가 되는 가정들을 기존의 많은 세대연구들이 학문적으로 승인하면서, 세대 개념의 무정부적인 재생산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문제의식을 통해 청년, 혹은 세대연구를 성찰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그는 ‘세대주의 (generationalism)’라는 개념을 통해 “세대의 개념을 사회과학적으로 다시 사유하려는 시도”를 진행한다. 세대주의는 저자가 지적한 세대연구의 내적 문제들 - 단일한 세대의 가정, 세대의 실재성에 대한 검증 부재, 세대연구 스스로의 성찰성 부족 - 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기 위한 개념적 도구이기도 하다.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김선기는 앞에서 논의했던 전상진(2004)의 시도와 마찬가지로 만하임과 부르디외로 다시 돌아간다. 우선 만하임이 세대를 논하면서 복수로 존재하는 “세대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세대 내부의 ‘이질성’을 이미 논의했으며, 이러한 논의가 세대에 대한 주관주의적 접근과 구성주의적인 접근과 친밀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세대 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르디외의 계급 이론을 통해 ‘집단형성을 위한 실천’을 중요하게 본다. “‘세대’ 역시도 계급과 마찬가지로 주술적 현실로서의 현실 위에서 수행된 ‘세대형성 작업의 결과’”라는 주장은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이를 승인하거나 때론 생산에 협조하는 ‘세대연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허석재(2015a)의 연구 “세대연구의 경향과 쟁점” 역시 세대연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최신 연구의 하나다. 저자는 ① 세대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혼란스럽고, ② 특정 시점에 고정된 분석으로 인해 세대 정체성의 변화와

지속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③ 정치적 세대와 사회문화적 세대의 차이점이 간과되어 왔다는 점을 기존 세대연구의 한계로 지적한다. 여기에 더해,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세대현상의 동학(dynamic)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연령/출생 코호트로 여겨지는 세대 내에서 엘리트 수준과 대중 수준을 구분하는 하나의 쟁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지점이다. 또한, 저자는 “한국사회의 특성에 맞는 세대에 대한 인식”과 맥락적 세대연구가 부족하며, “한국의 세대연구는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문제적이라는 지적으로 글을 마무리한다(42쪽).

2) 청년실업 및 노동 문제에 관한 연구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이십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용난으로 인해 기업과 정부부처, 학계를 아울러 방대한 관심이 투여되고 있는 주제이다. 일자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은 특정 주제를 다루는 비중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주요 통계자료나 연구자 스스로가 조사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실업의 구체적 현실을 조망하는 ‘실태 중심 연구’가 있다. 둘째는 청년실업을 추동하는 요인들이나 문제점에 본격적인 초점을 둔 ‘원인 중심 연구’로, 청년들의 취업결정 요인이나 직업시장의 미스매치(전공불일치)의 원인에 주목하는 연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정한 일자리 창출 방안 자체에 초점을 맞춘 ‘대책 중심 연구’들로, 대표적으로 ‘청년 창업(창직)’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청년의 노동 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청년실업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지만, 최근에는 청년의 노동 경험에 관한 ‘두껍게 쓰기’ 작업이나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쓰기’ 위한 작업,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하고 경험하는 과정까지를 폭넓게 청년들의 노동 과정으로서 논의하는 연구들이 생겨나고 있다.

(1) 청년실업 실태 중심 연구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들 대다수는 통계자료를 통해 청년실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실업의 원인을 진단한 후, 연구자의 입장이 견지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개괄적인 형태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청년실업의 실태만을 중심 주제로 상정하고 분석하는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실태 중심 연구’는 청년실업의 현상 자체에 주목하여 고용과 구직에 있어서 청년들이 어떠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로 정의했으며, 전반적으로 청년실업자/취업준비자들의 인적 특성 및 노동시장의 현안 분석에 비중을 많이 둔 연구들은 이 범주에 모두 포괄하였다.

실태 중심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실태는 단순히 청년층의 실업률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청년층의 실업 및 노동시장 실태가 어떠한 상황인지(문혜진, 2012; 2013; 최지원, 2015),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 대체가 일어나고 있는지(강다슬, 2013), 청년들이 변화한 경제 상황에서 어떠한 진로 행동을 하고,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의 타협을 하고 있는지(고지영, 2005; 박성재, 2004; 신운철, 2012; 유은정, 2004) 등 폭넓은 차원에 걸쳐 있다. (강다슬(2013)의 연구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관계가 비대체관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청년의 실업 문제와 관련한 실태들의 다양한 측면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저널인 <노동정책연구>와 <노동리뷰>에서 거의 매년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금재호, 2012a; 2012b; 2013; 김주섭; 2005, 김유빈, 2015; 남재량, 2006; 2011a; 2011b; 반정호, 2006; 이병희, 2002; 이우진, 김의준, 2016; 정성미, 2009; 2010; 정재우, 2014; 정현상, 2015; 2016; 조문경, 2015; 홍서연, 안주엽, 2002). 여기에서는 두 저널에 실린 자료분석형 글들을 제외하고, 이외에 청년실업의 실태를 다룬 몇몇 문헌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박수명(2013)은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가 갖는 특성과 이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취업형태나 업종과 같은 노동시장의 특성과 연령, 성별, 학력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변수로 규정한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의 경우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사회적 배제를 높게 겪었으며, 여성/비정규직/1차 산업 및 건설업 종사자/단순 노무직일수록 사회적 배제를 많이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연구는 여성/노인/저학력/실업자를 포함한 전통적인 빈곤층 이외에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단순 노무직/자영업자와 같은 집단들까지 새로이 사회적 배제의 위기에 포함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 속에서 배제를 겪는 집단 자체가 확장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으로 환원하여 분석했다는 점과 정책제언으로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촉진을 추상적으로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송부용, 김영순, 김기영(2011)은 경남지역 구직 청년과 사용자(수요자), 전문가의 세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서 학력, 전공, 직종, 임금과 같은 미스매치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구직자들이 전공을 중시하는 반면 사용자들은 크게 전공을 고려하지 않았고, 구직자들의 자격증 소지 여부가 결과적으로 크게 취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구직자와 사용자 간의 희망임금이 상당히 차이나는 등 전반적으로 학력, 전공, 자격증을 포함하는 약 12개 요인에서 모두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난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강순희, 안준기(2010)는 전문대 이상 대졸자를 대상으로 ‘실업 낙인효과’의 존재여부와 그 특징들을 검증했다. 그 결과 과거의 미취업경험이 다음 해의 미취업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미취업기간이 1개월 증가할 경우 평균적으로 다음 해의 미취업기간은 약 0.2개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실업의 낙인 효과가 더 컸지만, 그 차이는 점점 성별을 막론하고 비슷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현재 청년세대에게 초기 실업의 낙인 효과가 크다는 효과를 검증했으며 실재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전통적 노동공급의 측면보다 구조적 차원에서 실업문제에 접근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책제언의 파트에서 초기실업을 막기 위해 결국 단기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다수의 연구들이 단기적 일자리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소 기계적이며 미흡한 제언으로 보인다.

이지은(2014)은 외환위기 이후 청년세대의 학교-직장 이행과정이 탈표준화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서, 불안정한 직업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시도하여 이들의 구체적인 삶에 관한 목소리와 생애전망을 듣고자 했다. 인터뷰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현재의 직업을 가지기까지 빈번한 구직 실패와 직장 정착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불안’이라는 정서에 기반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다. 한편으로 생애전망에 있어서는 현재의 전략을 지속하거나 전환, 유보하는 다양한 대응방식을 보여주었는데 이 과정에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났다. 이지은의 연구는 불안정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청년세대의 생애전망에 대해 사회적 관계망이 결정요인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이들이 겪는 ‘불안’을 단순히 현상적인 요소로 간주해 이후의 생애과정과 분절시키고자 한다는 혐의를 낳는다.

제주지역 청년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김민선(2014)의 석사학위논문도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청년실업의 실태가 청년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적 불안정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연구한 사례다. 연구자는 청년들이 “유동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삶의 양상을 이루는 노동의 변화를 경험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 정도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으며, “유동하는 삶 속에서 개인들은 자기 의지의 표출을 미루거나 유예하며, 유예된 시간을 자기관리의 실천으로 조직하거나 소비생활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려” 하지만, 결코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보다 종합적인 소재를 다루면서 취업에 직면한 청년세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주목한 연구로는 서울시청년허브(201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일자리, 노동, 주거, 신용과 같이 청년세대를 둘러싼 중심 주제들과 관련된 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재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에 대한 청년들의 기피 인식을 청년의 입장에서 일종의 낙인 효과로 분석했으며 취업률이라는 성과 자체에만 주력하는 대학체계가 오히려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기 위한 ‘능력 개발’에 실패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의 양적 창출에만 주력하여 질적인 접근은 제한되는 현안과 직업훈련-고용서비스라는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소득안정이라는 사회정책을 병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정책적 제언으로는 취약상태의 청년에 대한 생활지원정책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게 될 청년들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적절한 복지정책수단의 투입을 주장했다.

한편 청년들의 이직과 관련된 현황은 성지미, 안주엽(2016)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들은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1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이직의사 및 이직 결정요인을 양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이직의사가 있는 표본은 전체의 약 20%이었으며, 일자리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제 이직이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형태일수록, 소규모 기업일수록, 노동조합 비조합원일수록, (여성의 경우) 기혼자일수록, 인문계 전공일수록 이직의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발적 이직은 성차가 없는 반면 비자발적 이

직은 (미혼) 여성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청년이 고용 이후 회사의 위계서열에서 남성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년실업 실태 중심 연구들의 대다수는 성별을 범주화시키지 않은 청년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세대 내부의 성별 차이로 인한 실업과 고용의 문제에 주목하거나 특수하게 청년 여성의 일자리 현실에 주목하는 소수의 연구들이 존재한다(이수정, 2010; 신선미, 민무숙, 권소영, 2013; 이현욱, 2013; 이선민, 2016)

신선미, 민무숙, 권소영(2013)은 실업자와 취업준비자를 포함한 미취업 청년층 인구를 대상으로 인적자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고졸자 비율이 절반 이상인 반면, 여성은 전문대졸 이상이 65%에 이르고 있음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청년고용정책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자'보다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성별, 전공계열, 희망 직업분야에 따라 취업지원정책이 특성화 및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 연구는 '여성 미취업 청년층'을 연구제목으로는 이용하고 있으나 주로 '미취업 청년층'의 하부적 범주로만 여성을 다루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현욱(2013) 역시 중횡단조사 자료와 여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청년들의 고용과 취업이동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신규 취업 여성의 40%가 첫 취업 시 불안정 고용형태(비정규직)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력이동이 취업자들의 대학 진학지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드러냈다. 이 연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 인구이동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여성청년이라는 범주를 동원한 연구로, 청년층 여성이 실태 분석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드러내지 못했으며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취업 위계구조에 있는 청년층 여성의 실태를 충분히 조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선민(2016)은 나아가 청년 여성의 현실에 주목하기 위하여 청년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비교한 실태조사자료를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청년 여성은 청년 남성에게 비해 구직활동/취업준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편이 많았고, 2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으며 종사분야에 있어서도 서비스계열 중심으로 낮은 질의 고용현실에 직면해 있음이 드러났다. 이선민은

청년고용정책 및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대다수가 청년 여성보다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통해 경력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청년 여성들을 위해 고용불평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청년 여성에게 특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수정(2010)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청년 여성의 고용현실을 분석한 후 정부의 청년 여성 일자리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당시 정부의 일자리정책에는 젠더 문제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특히 주로 도우미, 간병인과 같은 서비스중심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의 저임금직종 집중을 유발하는 청년 여성 지원정책의 이면을 조명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과 단기직 중심의 인턴제와 근무제 개선,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재구성과 같은 방향들이 제안되고 있다. 이선민과 이수정의 연구는 모두 여성의 불평등한 고용현실과 정부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학술연구의 형태가 아닌 짧은 보고서와 비평형식의 글로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내기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2) 청년실업 원인 중심 연구

청년실업의 원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취업과 실업을 결정하는 구체적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김경모, 2002; 김종성, 이병훈, 신재열, 2012; 김종성, 2013; 김진주, 2016; 김혜경, 이순미, 2012; 김혜정, 2005; 노혜진, 2012; 박나연, 2014; 윤주영, 2015; 이경은, 2006; 이계형, 2008; 이시균, 양수경, 2012; 이지미, 2011; 임유진, 2016; 장기영, 2008; 정미나, 임영식, 2010; 조막래, 2005; 채창균, 김태기, 2009; 최준호, 2007; 한성민, 문상호, 이숙중, 2016; 한승훈, 2014; 홍서연, 2002; 홍석영, 2016)들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다양한 주제 - 전공과 직무불일치(미스매치)등 - 들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진단을 내리는 연구(김기희, 2006; 김영배, 2016; 김용성, 2012; 민주홍, 2012; 이동희, 2010; 이병희, 2011; 이시균, 2011; 이창순, 2007; 최율, 이왕원, 2015) 등이 존재한다.

① 취업결정 요인 분석 연구

청년층의 취업결정 요인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김혜정(2005)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전반적인 입장에서 인구학적 요인과 인적자본요인, 가구적 요인에 따라 어떠한 요인이 청년층의 취업 결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지 탐색한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인적자본 요인(학력, 일자리 경험여부, 자격증 취득 수), 가구적 요인(가구소득, 가족 구성원 수) 일부가 취업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직업훈련경험의 경우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막래(2005)의 연구 또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주로 인구학적인) 구조적 차원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를 출신대학, 젠더, 지역노동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여성이고, 연령이 많으며, 이공계열을 전공하였고, 지역 내 총생산의 규모가 작은 경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민, 문상호, 이숙종(2016)도 청년층의 취업과 개인특성 변수, 가족환경 변수, 취업준비 변수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 구직자들의 성별, 학력, 가족환경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직업훈련경험이 미경험자에 비해 2배 이상의 취업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혜정(2005)의 분석과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 취업의 주요 변수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인다.

청년실업자 중에서도 대졸자를 대상으로 취업결정 요인을 분석한 채창균, 김태기(2009)는 취업결정 요인에 있어서 출신대학 특성, 전공과 더불어 복수전공 여부, 해외연수, 자격증과 같은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가구소득과 수도권(비-지방)대학, 전공과 같은 요인들에 비해 대학 재학 중의 취업활동(일자리 경험, 어학연수, 자격증)은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김종성, 이병훈, 신재열(2012)는 위 연구들과 비슷한 요소를 ‘하향취업’이라는 현상에 접목시켜 인적자원, 일자리, 개인적/제도적 사회자본과 같은 다양한 변수 중 어떠한 요인이 청년들의 하향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일수록 하향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해당 직종이 정규직일수록, 제도적 연결망을 통해 구직활동을 할수록 하향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책적 제언으로 과잉학력 해소를 위해 기술집약적 산업 위주로 대학구조를 재편하고 부실대

학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고용서비스의 강화, 대학을 넘어선 중고등학교 과정으로의 산학연계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취업결정 요인을 분석한 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결론을 - 1) 청년층이 타 연령 계층과는 달리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2) 여전히 학력이나 가정의 경제적 배경 등 청년 구직자의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성공적 취업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3) 대학 내부에서 학생이 자체적으로 이루는 취업준비활동으로는 취업난의 장벽을 상대적으로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점 - 시사한다. 노혜진(2012)은 고소득가구 자녀의 경우 전문직이나 사무직 정규근로자로 이행하는 반면, 빈곤가구 자녀의 경우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탈, 직업의 이동이 빈번하게 나타나 사회적 계층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생애소득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한다. 김종성(2013)은 사회적계층별로 자녀의 노동시장 이행에 개입하는 가족적인 전략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것이 전문 관리직 및 고용주, 고소득 자영업자 부모들의 자녀들이 다른 사회적계층에 비해 높은 노동시장 성과를 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성별 차이와 여성내부의 차이화를 만드는 젠더 범주(김혜경, 이순미, 2012)나 고졸과 대졸을 가르는 학력 변수(임유진, 2016; 최준호, 2007) 등도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경제적 자립도(윤주영, 2015), 미취업기간을 포함한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시균, 양수경, 2012), 희망임금(홍석영, 2016),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김현동, 한용석, 2012), NEET여부(박나연, 2014) 등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로도 취업 결정 요인을 연구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들도 사실상 그러한 개인의 특성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사실상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들은 연구마다 취업결정(또는 노동시장 이행)에 있어 동일한 이름의 요인을 통해 분석했음에도 연구마다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못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지은(2014)이 지적하듯이 좋은 일자리(decent job)의 기준으로 연구자들이 상정하는 요인들이 “임금, 취업 여부, 대기업 취업 여부, 정규직 취업 여부, 미취업 탈출 확률, 직업훈련 경험” 등으로 상이한 데다,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방법론 역시 다양하여 일관된 형태의 결론을 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취업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다소 단순한 형태로 나열 및 검증했기 때문에 청년계층 실업현상의 본격적인 원인을

진단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② 청년실업 원인 진단 연구

청년실업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많은 일자리 관련 문헌에서 적지 않게 할애되어 있는 사안이다. 김용성(2012)과 한성민, 문상호, 이숙중(2016)의 분류를 참고하면, 청년실업의 ‘원인’을 다루는 선행연구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여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고용 창출능력이 저하되어 기업 입장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인데, 크게 청년층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학력과 잉’을 수급불일치의 주요 원인으로 삼는 연구와, ‘미스매치’라는 용어범주 안에서 설명되는 전공과 일자리 내용의 불일치를 주요 원인으로 삼는 연구, 그리고 시장에 일자리 자체가 없기보다는 제안받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불만족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업원인을 청년 구직주체의 ‘눈높이(의중임금)’로 분석하는 연구들로 나뉜다. 셋째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을 문제로 삼는 연구로,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 및 불안정성에 주목하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함께 개진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노동시장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고용지원서비스의 질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포괄하는 노동시장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있다.

우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측면을 잠시 살펴보면, 김기희(2006)는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비정규근로 확산과 청년층 내부 노동시장의 변화를 꼽고 있다. 노동시장이 비정규화, 임시직화 되는 문제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가장 극적으로 바꾸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임시직에 관해 연구한 이창순(2007)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시직은 소득, 근로시간 형태, 직종 모든 측면에서 불안정하고 취약한 특성”을 보이는데, “임시직 중에서도 중고령 단순노동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더욱 열악한 임시직 층이 확인”된다고 지적한다. “임시직의 최하위층에는 학교를 마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미미한 소득을 올리는 거의 실업에 가까운 청년층과 최하위 임금을 받고 주로 전일제로 일하는 중고령의 단순노동층”이 존재하

며, 이들은 거의 여성들이다.

선행연구 중 적지 않은 문헌들이 전반적으로 희망임금과 시장가능임금의 불일치라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를 청년층의 '취업 눈높이'의 문제로 진단해 왔으나, 이러한 진단은 최근 연구로 올수록 그 경향이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지광수, 수홍걸, 송송이(2009)는 통계자료를 통해 청년실업의 원인과 실태를 주목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연구로, 청년층의 주된 실업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나 주관적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그중 하나를 '청년들의 눈높이 문제'에 할애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 외의 원인으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직무 및 교육불일치(미스매치), 사회변화에 맞추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증설되는 "백화점식 학과"의 확장 등을 지적하였다. 김안국(2003) 역시 비슷한 측면에서 미취업자의 시장가능임금과 희망임금을 비교하고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선택 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저연령, 저학력일수록 희망임금과 시장가능임금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서 정확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희망임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실업원인의 일정 부분을 미흡한 직업 정보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기대하는 청년 구직층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은재(2006)는 청년실업의 발생 원인이 기업의 경력직 우선 경향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진단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의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로 인해 불가피한 결과이기 때문에 경력직 선호 문화는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으로는 미스매치 현상과 청년들의 중소기업 생산직 기피문화 및 부족한 인프라가 최우선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이동희(2010)의 연구는 취업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직 실패의 원인에 대해 설문함으로써 이러한 실패와 취업에 대해 청년들이 견지하는 믿음(진로신화)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다. 분석 결과, 구직에 실패한 청년들은 대부분 실업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능력과 경험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 한편, 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면 취업을 결정하지 않으려는 신념(완벽성 신화)에도 깊게 천착되어 있음이 나타났다. 이동희의 연구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청년실업자 스스로가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설문 질문이 각각의 진로신화를 설명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는 점, 진로신화를 이용

하여 결국 청년실업의 원인을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 비합리적인 신념 탓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용성(2012)은 고학력 청년층 미취업의 원인을 탐구하기 위하여 이들이 미취업시 자신의 소득과 일자리 제안확률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실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고학력 미취업 청년의 의중임금(취업을 위해 주관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은 기대임금(모든 임금의 기대치)의 77%로 나타났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동안 양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제안받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이나 진단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원인이 단순히 청년들의 높은 의중임금과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자리의 제안과 수락과정(고용지원서비스)이 순탄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 노동시장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조건보다는 한정된 시장 안에서 공급자(대졸자)가 많고 특정 직업에 대한 기피문화가 발생한다는 현상 자체를 표면적으로 주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원인 진단에 있어서도 고학력 과잉 및 전공/학력/직업 불일치라는 현상에만 논의의 다수를 할애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병희(2011)와 안홍순(2016)이 지적하듯이, 이러한 방향의 논지들은 고용문제의 원인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전가할 위험이 있으며 그 대책으로 인력수급정책이나 정보제공, 하향취업 장려와 같은 한정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좀 더 이들을 둘러싼 총체적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시균(2011)과 이병희(2011), 김영배(2016)의 연구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원인으로부터 찾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시균은 특히 미취업기간, 첫 일자리 속성, 초기 노동이동 경험과 같은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들의(향후) 일자리 질’과의 상관성을 탐구한다. 분석 결과 노동이동(직장이동횟수)이 많을수록, 초기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경험을 했을수록, 미취업기간(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있었고, 인적 자본은 일자리의 질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않았다. 이시균은 결과적으로 첫 일자리 탐색을 위해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현 상황은 청년들의 초기 일자리 경험이 ‘괜찮은 일자리’의 초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일자리의 질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병희(2011)의 연구 역시 미취업기간과 일자리의 질 및 매칭 간의 상관성이 없는 반면 초기 일자리의 질은 이후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드러내어 이시균(2011)의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눈높이 조절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진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한다. 실증 분석 결과 의중임금이 높은 청년층 중 약 70%가 최근 10년간 의중임금보다 훨씬 낮은 수락임금을 가지고 있어 시장임금을 고려해서 ‘눈높이’를 조정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후 연구에서 김종성, 이병희, 신재열(2012)은 청년층의 하향취업 행동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동원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하향취업 행동이나 눈높이 조정은 이전에 비해 대학교육의 ‘교육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민주홍, 2012)과도 연관된다. 이병희는 첫 일자리를 일찍 얻을수록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기에 구직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결국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필연적임을 주장했다.

최근 나온 최윤희와 이왕원(2015)의 연구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잠재집단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취업선호도가 높을수록 대기업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은 높은 데 반해 중소기업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던 것처럼 ‘높은 취업 눈높이’가 청년들을 실업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 차원에서 좋은 직장의 취업에 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구자들은 “취업선호도 또는 취업눈높이를 단순히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 취업기준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청년층이 가지고 있는 취업 목표와 희망, 나아가 전략까지도 담고 있는 복합적인 가치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김영배(2016)는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자리 및 기능의 미스매치와 직종별 인력 불일치가 근본적으로 청년층의 기대를 반영한 적정수준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높은 임금의 직종보다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 직종을 보장하는 현재 청년들의 상황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확대되는 현재의 노동시장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입장이 견지된다. 이에 따라 저자는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정규직 일자리 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해소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과 구직자 사이의 직무 불일치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청년실업 해소 대책 중심 연구

청년실업 해소 대책 중심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업 해소 대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 연구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세부주제와 연구방법을 드러낸다.

첫째로 연구소재의 차원에서는 정부의 특정한 정책적 사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권혜영, 2016; 김용집, 2014; 김정목, 2016; 김정주, 2015; 류장수, 2015; 박재환, 박명수, 김대엽, 2012; 산업통상자원부, 2011; 양지윤, 전희정, 최석현, 2016; 채태준, 김선기, 박경국, 2016; 유보배, 2016; 하규수 외 6명, 2013; 한국창업경영연구원, 2011)와 그 밖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주된 정책사업으로는 창업과 관련한 내용들이 주된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주제의 차원에서는 특정한 관점을 중심으로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거나(강창용, 2006; 기획재정부, 2015; 김의성, 2015; 지광수, 수홍걸, 송송이, 2009; 지은재, 2006), 이론적 관점에 의거한 정책모델을 제안하고 해당 모델과 실업 해소의 상관성이나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김영재, 2012), 보다 메타적인 차원에서 각 정부나 단체들의 실업 해소 정책들을 비교하여 보완책을 진단한 연구(김삼열, 2016; 김영재, 정상완, 2013),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이 갖는 기초방향에 대해 비판적 검토 및 인식론 수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류기락, 2012; 김성희, 2015; 안홍순, 2016; 정준영, 2016)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청년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와 사회안전망 논의까지가 청년실업 대책의 형태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① 창업

실업대책의 대표적 사례로는 선행연구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는 ‘청년 창업’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보고서와 창업정책사업 분석, 정책성과 및 효력에 관련된 다수의 메타 연구, 소수의 비판적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실업문제의 대책을 논의한 선행연구들 중 약 절반 가까이가 해당 사업을 중심주제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계와 기업을 아울러서 창업과 관련된 정책이 실업문제 해결

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창업경영연구원(2011)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창직 지원사업과 사업구상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역설되며 창직인턴제, 창조캠퍼스와 같은 다양한 국내사업과 해외사례가 언급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창조경제'로 요약되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경직된 이론 중심의 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으로는 대졸 공급자 과잉이라는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대학생 스스로가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창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한다. 이 연구는 '창업(창직)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창직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디어 생성/성장의 차원에만 머무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창업(창직)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보조정책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2011)의 보고서는 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들에 창직을 도입할 수 있으며 가능한 정책들은 무엇인지 모색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창직의 예시로 활용할 수 있는 직업들을 직접 거론한 후 해당 직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안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업 단위를 기준으로 기존 직업을 세분화/융합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망산업과 유망직업을 도출한 후 해당 분야 내에서부터 창직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른 창직 유망산업으로 에너지, 바이오, IT, 자동차/조선산업을 선정했으며 국내에서 창직 활성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으로 서비스업을 꼽았다. 이 연구는 선진국들이 창직과 관련하여 마련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을 일자리 창출의 제한성이라는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산업단위 중심으로 창직을 유도한다. 또한, 인력양성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유망 직종과 관련된 대학 프로그램에 많은 비중이 할당되었다는 점에서 취업양성의 정책 방향을 대학으로부터 찾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창직은 실제로 새로 개발된 직종이라기보다는 직업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현실에 존재하는 직업들을 단순히 세분화시킨 것에 가깝다는 한계를 갖는다.

하규수와 동료들(2013)은 전반적인 창업 지원정책 현황을 조망하기 위해 창업정책을 창업교육과 청년 사업화 분야로 세분화해 살피고, 이들 사업의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등의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정책의 경우 지원정책 자체보다도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고 창업실행이 지조한 사회적 실태로부터 문제가 비롯되고 있으며, 창업선도대학이나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청년사업화 지원정책들의 문제는 창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와 창업자들의 경험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이들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의 미비한 성과를 청년들의 ‘눈높이’ ‘경험 부족’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과 해결책으로 고등학생을 넘어 초중학교 및 유치원까지 이어지는 ‘기업가 정신 문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풍부한 보완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연구의 이러한 논의에는 기본적으로 청년세대를 ‘안정적인 것만 원하고’, ‘창업을 스펙으로 활용하기만 하려는’ 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사실상 그러한 원인들을 추동한 취업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드러난다.

김용집(2014)의 연구는 역대 정부의 창업지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각 정부의 정책을 고용률과 연관 지어 비교하는 창업정책에 대한 메타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청년들에게 무모한 도전을 조장하여 빈곤과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지난 3대 정부에 걸친 창업정책과 관련된 지원 및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각 정부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나 단기적 일자리 위주로 정책을 펴왔으나 창업기업의 사후관리와 회생 문제 및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 감각의 배양에는 상대적으로 그 관심이 미약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가 마인드’를 고양하고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화된 사전-사후 창업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박재환, 박명수, 김대엽(2012)의 연구 역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비판 및 새로운 정책 방향 제언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창업 유관기관 및 기업인과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많은 수의 응답자가 현재 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이 용이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답변했으며, 이와 관련된 원인으로 창업교육의 부족 및 실패했을 경우 재창업이 불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등을 꼽았다. 연구자들은 동일하게 정부의 용자중심, 양적 성과지표 중심 지원과 창업 실패자에 대한 중장기적 사후관리 부족, 네트워크 미흡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해결방안으로 창업가정신의 고양을 위한 중등 및 대학교육, 창업의 성공 및 실패사례 축적관리, ‘창업취업’의 활성화와 창업 장려수단으로서의 병역특

례제도 도입, 창업지원과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통합창업서비스기관의 육성, 창업정책 수혜자에 대한 엄격한 실적동향 분석과 투명한 이력관리 등을 강조했다.

보다 비판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청년 창업을 연구주제로 다룬 사례로 김정주(2015)와 채태준, 김선기, 박경국(2016)의 연구가 있다. 김정주의 비평은 ‘청년 창업’ 담론 자체의 이면을 고찰하고 보다 구조적 차원에서의 고민을 환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되는 ‘창업’이 근본적으로 ‘자영업자/자본가 되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내 지배적 담론이었던 ‘경제성장 담론’의 연속선에 있다고 평가한다. 불평등한 노동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창업 담론’은 노동시장 자체가 갖는 구조의 문제를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 떠안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채태준, 김선기, 박경국 역시 창직/창업 담론 속의 구체적 정책사례인 ‘청년상인 지원정책’이 청년창업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 비판적 관점을 경유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청년 장사꾼’으로 대표될 수 있는 청년상인 지원정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반면, 임대료 지원의 차원에 머무르거나 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책방향으로 인해 청년 창업 업종의 편향이 유발되고 창업자들의 장기적 생존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연구는 청년 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차원의 명암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특히 낙후된 상권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성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창업, 창직과 관련된 정책보고서와 연구들은 창업정책의 필요성 역설과 정책 제시에는 적극적인 반면, 청년 창업가들의 생존, 회생이나 중장기적 관리대책을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가 강조하는 ‘창업’ 담론은 청년실업의 문제 및 해결방안을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찾지 않고 구직자의 입장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알아서 역량강화를 하 게끔 만든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담을 청년에게 전가한다는 문제 역시 가질 수 있다.

② 창업 외 실업대책 연구

창업 주제를 제외한 청년실업 개선대책 연구는 특정한 세부주제가 아닌 실업현상 전반을 개인 연구자 중심의 시선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주제를 통한 명확한 분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연구자가 주장하는 실업대책의 성격을 중심으로 구분한다면 인력수급정보 제공이나 산학협력, 특정 사업프로그램의 개선과 같은 소극적 정책에 관련된 연구(권혜영, 2016; 기획재정부, 2015; 김정목, 2016; 류장수, 2015; 유보배, 2016; 지광수, 수홍걸, 송송이, 2009; 지은재, 2006)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혁, 고용안정성 보장과 청년세대에 대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 정책 관련 연구(안홍순, 2016;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정준영, 2016), 역대 정부정책을 메타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김삼열, 2016; 김영재, 정상완, 2013)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광수, 수홍걸, 송송이(2009)는 청년실업의 해소방안으로 직업훈련과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강화, 취업알선 프로그램 강화, 중소기업 강화정책과 같이 학교와 기업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산학협력을 주장하고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축을 제조업 중심에서 성장률이 높은 지식기반산업 및 복지산업으로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지은재(2006)는 청년실업 문제의 대책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청년취업확대기금 설립을 주장하며, 특히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가 취업알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한다. 이에 따라 대학 정원/학사의 유연화를 기초로 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운영과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의 취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편을 대책으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기획재정부(2015)에서 제시한 최근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보고서는 정부 관계부처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고용난을 해소할 기본방향을 정립한 후 세부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정부부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주로 공공부문에 대해 명예퇴직을 통한 신규채용의 양적 확대, 유명 성장 직종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확대, 기업과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청년창업과 서비스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선도대학(Prime)사업과 산업체와의 ‘계약학과’ 증설을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 기업 맞춤형 교육의 강화가 두드러진다. 그 외에는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여건 개선과 취업 분위기 조성, 동남아 신흥국과 중동, 중남미 등 15개국을 대상으로 한 청년 해외취업 촉진과 같은 정책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김영재(2012)의 <한국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는

정부와 대학, 기업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관리’ 모형을 구축하여 청년 실업을 유형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요한 집행주체인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의 입장에서 실업의 원인은 저마다 각자 상이하나 ‘외환위기에 따른 경영 악화’와 ‘기업이 원하는 교육 부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영재는 청년실업의 유형을 구조적/탐색적/마찰적/잠재적 실업으로 분류하면서, 전반적으로 3개 주체가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에 필요한 청년들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부터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유형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구조적 실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각자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기초 통계정보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탐색적 실업의 경우 기업과 정부가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마찰적 실업의 경우 인턴제도를 실질적인 숙련도와 연계 시키고, 잠재적 실업의 경우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지윤, 전희정, 최석현(2016)의 연구는 2009년 정부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하에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양적 데이터와 질적 인터뷰를 모두 이용하여 취업 달성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정책서비스 평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남성, 저학력 집단이며 경력직보다 신규 입사를 희망하고 희망임금이 낮은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공 고용서비스가 여전히 저임금과 저숙련 일자리에만 집중되어 고학력자의 취업난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부진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시행되었던 다양한 개별 정책들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제)의 효과에 대한 연구(권혜영, 2016),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연구(유보배, 2016),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에 관한 논의(류장수, 2015), 한국의 청년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연구(김정목, 2016) 등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정책들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류장수(2015)는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금 수준이나 정규직 전환율이 매우 낮은 기업들이 발견되는 등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김정목(2016)은 한국에서 진행된 청년 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몇몇 연구들은 청년실업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다소 실험적인 논의를 하기도 한다. 강창용(2006)은 청년실업 해소 대책으로서 공공직업훈련을 개선하고, 청년층 당사자에게만 초점을 맞춘 특화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김의성(2015)은 고령화 사회라는 조건 하에서 고령자와 청년이 분업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가능성에 관해서 논의한다.

역대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을 비교/분석한 후 대책을 논의한 연구로는 김영재, 정상완(2013)과 김삼열(2016)의 연구가 있다. 김영재, 정상완(2013)은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의 청년실업 대응 정책에 대한 유사비교연구를 시도했으며, ‘정책 목표’, ‘전달 체계’, (내용상의) ‘주요 특징’을 비교 변수로 설정하여 정리하였다. 연구 결과 세 정부는 구체적으로 각기 ‘외환위기 극복’, ‘양극화 해소’와 ‘고용친화적 성장’, ‘세계금융위기 극복’이라는 큰 문제를 속에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정부 간 정책 비교를 처음으로 시도한 메타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 반면, 단순히 시행된 정책을 나열하여 비교하였을 뿐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실효성이나 각 정책의 도입 배경이나 과정까지 심도 있게 정리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김삼열(2016)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청년실업정책과 정책 기조 및 배경을 비교하면서 위 연구보다 좀 더 나아간 형태의 논의를 개진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참여적 복지’의 측면에서 노동의무보다 노동권리를 강조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의 양적 성장 아래 ‘능동적 복지’를 통한 실용적 가치와 노동의무를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모든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 되었으며, ‘맞춤형 복지’를 통한 노동유연성과 양적 고용률 최대화가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김삼열은 3개 정부 정책의 성격이 모두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전략에 치우쳤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특히 정부가 직접일자리(단기 일자리)에 투여해온 예산이 최근으로 갈수록 증가한 반면 고학력 취업대상자의 실업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양적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 고용촉진 전략으로서 청년수당을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

정준영(2016)은 ‘청년 보장’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현 정부의 청년실업정책이

갖는 기초방향 및 청년에 대한 인식론을 수정할 것을 주장한다. 그간 청년인턴이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정부의 청년정책들이 단기직 중심의 일자리로 구성되고 고용유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청년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주체라기보다는 계량적 수치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청년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청년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된 비용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구직안전망’의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단계별 공공고용서비스와 같은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과 청년수당과 같이 구직청년에 대한 실업부조가 결합된 고용복지제도를 고려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안홍순(2016) 역시 양적으로만 청년 고용을 해결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업의 원인을 청년 구직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존의 진단들을 비판하면서, 청년세대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복지정책을 대안으로 직접 제시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청년고용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공급적 측면에만 치중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낮추고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한다는 한계를 가진 반면, 이러한 청년실업의 원인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구직-구인간 ‘미스매치’나 개인의 역량 부족과 같은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직업훈련과 전직훈련 강화가 제안되었다. 한편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년세대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삶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와 양육수당을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청년실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복지, 사회안전망 등의 접근법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2016)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년의 적정소득 수준을 산출하고, “19~24세 청년들의 적정생활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 최저소득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인 약 3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대상의 부분기본소득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청년실업 정책 기조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국가간 비교 연구인 류기락(2012)의 논문에서도 나타나는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 고용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은 제도의 직접 효과 또는 고용보호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 고용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희(2015)도, 정부가 ‘청년’을 위한 것이라며 선전해온 ‘노동시장구조개혁’이 본질적으로 청년 고용대책이 아니라 “장년 노동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며, 청년실업 정책은 여전히 “청년들에게 저임금 단기고용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턴채용 정책”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청년 고용 창출 정책은 ‘기업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 비용절감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분담 구조’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최소 생활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등 안정적 기반 마련”도 보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 일부는 청년실업에 대한 원인이나 대책 진단에 있어 질적으로 다소 표면적이거나 기계적인 차원에 머무른다는 한계를 보였다. 예컨대 청년실업의 전체적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편의적으로 인용하거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시하는 방안의 경우 기업과 정부, 대학의 입장이 혼재된 시선 속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대안의 초점이 ‘양적 일자리의 상승’과 ‘대학구조 재편’에 맞추어지고 있다. 정부대책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규제의 완화’나 ‘비효율적’인 분야들의 통폐합, 시간선택제/비정규직의 활성화, 해외취업장려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큰 틀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견지되고,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하여 기업과의 연결점을 확보하고 취업연계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실업정책 내지는 정책적 제언들의 상당수가 ‘교육’ 측면의 논의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실업 해소/취업과 관련된 세부 대책들의 정책 대상자들이 대졸자를 넘어서 대학 재학생, 비진학 인문계고 학생, 중학생과 같이 생애단계의 초반부로 계속해서 앞당겨지며 확대되고 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기업가 정신’을 견지할 것을 제언받고 있다.

(4) 청년들의 노동 경험에 관한 연구

청년 노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노동/경제 분야의 청년연구들은 대부분 청년실업이라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실업률

이나 취업 결정 요인,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 등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통계적인 평균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다양한 청년의 노동 문제들이 주목받기보다는 청년실업 문제나 비정규직화 문제 등 굵직굵직한 문제만이 청년 노동 연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흐름과 다르게 청년의 노동 경험을 다양한 층위에서 ‘두껍게’ 읽어 내려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김신아, 2016; 김철식, 김준희, 2016; 김현아, 2015; 박주연, 2010; 신연경, 2008; 우승현, 2015)

김철식과 김준희(2016)는 경기 남부에 소재한 시화공단과 그 배후 주거지역인 시흥시 정왕동에서 노동과 생활을 하는 ‘1인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 경험을 연구했다. 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행동의 전략은 이 지역을 단순히 벗어나는 ‘탈출’이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정주’와도 다른 “노동과 주거의 불안정성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부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연구자들은 진단한다.

김현아(2015)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증대가 청년 여성들의 ‘가족 실행’에 미친 영향을 읽어내고 있다. 청년 여성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자는 기존의 설명들과는 다른 청년들의 노동 경험의 맥락들을 발견하였는데, 청년 여성들은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면서 시장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을 이룰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되는 청년 여성들은 독립 욕구를 달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가족 실행, 즉 새로운 가족 만들기(결혼, 출산)를 선택하고 있었다. 가족형성기에 청년 여성들이 탈취업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남편의 소득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직접 육아를 포기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따져” 경제적 보상의 수준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박주연(2010)은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대안적인 일터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실제 청년 주도의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종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탐색하였다. 청년들은 “전 직장에서의 업무의 공허함, 상명하달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맹목적인 이윤추구 성향에서 벗어나 공동체적인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대안적인 성향이 청년 노동자들이 “문화산업 특유의 강도 높은 노동과, 그에 반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내하도록 하는 까닭이 되고 있었다.

청년 노동자들의 경험이 직접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청년 노동의 새로운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도 최근 진행되었다(김영, 2016; 정재우, 2015). 정재우(2015)는 노동조합 관련 각종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여 청년층의 노동조합 신규 유입이 줄어들면서 노동조합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것은 청년층의 절대적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탓도 있지만, 청년층 노동이 대부분 비정규직화되면서 청년이 노동조합에 참여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사실과도 유관하다. 연구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조합의 고령화는 노동시장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청년과 비정규직의 교집합이 커다란 만큼, 청년층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노동조합 참여 저조는 다시 한 번 청년층/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다시 순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글은 청년 노동과 관련한 새롭고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영(2016)은 일본 ‘블랙기업’의 노무관리 기법을 분석한다. 이를 요약하면, 블랙기업은 “청년노동자를 대량 채용해 과중노동, 위법노동으로 노동력을 폐질화시키고 점차 이직으로 몰고 가는 성장대기업”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블랙기업’ 담론이 노동저항의 용어로도 이미 쓰이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지만, 비슷한 노무관리와 노동 현실을 한국의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기업에서 어떠한 노무관리 기법이 실행되고 있으며 기업 안의 청년 노동자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추후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두드러지는 새로운 청년 노동 연구의 경향은 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만을 노동 경험으로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시작되기 이전인 입사 지원 단계에서의 경험부터 공식적으로는 노동이 끝나게 되는 이직 및 퇴사의 경험까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심희경, 2016; 연경진, 2009; 이기형 외, 2014; 이영룡, 2014; 이정수, 2013).

이정수(2013)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과 자기소개서 텍스트들을 분석하는데, 청년 구직자들은 “기업이 원하는 몇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복합적으로 표현하여 완성형에 가까운 인격체를 자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구직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며, 열정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있고 적극적인 실행력을 가진 동시에, 정직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재탄생한다. 이기형과 동료들(2014)의 연구

역시도 청년들의 자기소개서 작성과 구직 경험에 관하여 자기기술지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심희경(2016)은 청년연구 참여자들의 이직 행위를 분석하는데, 이들은 이직을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기는 모습을 드러냈다. 청년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일의 의미를 “돈을 벌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여겼다. 연구자는 “청년들이 직업과 일 사이에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계 유지만을 목표로 하거나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직업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한 것을 이 연구의 의의로 설명한다.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연경진(2009)은 IT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청년으로 연구대상을 좁혀서 이들의 이직 의도와 이직 행동 결정 요인에 관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영룡(2014)의 논문은 연구대상이 2010년대 현재의 ‘청년세대’는 아니지만, 이 연구는 ‘신세대’라는 세대 명칭으로 주로 호명되었던 90년대 초반~2000년대 초중반에 학창시절 및 20대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직장을 ‘탈출’하는 퇴사 행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들과 자본주의의 관계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일인지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일과 삶의 단절에서 오는 어긋남”이나 “열정과 기대가 착취로 전환”되는 상황은 젊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사회의 현실을 자각하고 노동에 대해 재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윤중심사회로부터 퇴거”하는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비자본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연구자는 주장한다.

3) 청년의 빈곤화 현상에 관한 연구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도시 내 주거비용의 과다한 상승 등의 충격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변화는 우리 사회 내 빈곤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빈곤집단을 부상시켰다(김수정, 2010). 특히 상당수의 청년층은 이와 같은 사회 구조의 전반적 변화로 인해 불안정고용, 저임금과 비정규 노동 등의 상황 속에 놓임으로써 새로운 빈곤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석훈, 박권일(2007)의 ‘88만원세대’ 담론 이후 제기된 청년과 관련된 담론 상당수가 ‘청년’을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호명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은 경제위기 이후 급변화한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마주한 경제적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수정(2010)이 지적하였듯 청년층의 빈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던 ‘청년’ 담론 중 상당수가 청년층을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호명하고는 있지만, 그 중 상당수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관련된 사회 구조에 입각한 노동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년관련 정부 정책 역시 일자리정책의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수정, 2010; 이태형, 2012). 따라서 청년들이 마주한 다양한 삶의 문제들, 특히 빈곤과 관련된 논의는 청년층 내부의 계급 다양성을 고려한 청년 내부의 불평등이나 그러한 불평등을 야기한 요인, 그리고 생활세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마주한 청년층의 경험을 탐구하고 그 함의를 조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각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청년의 빈곤/화에 대해 조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부채, 주거, 청년 빈곤의 상황과 그의 순환과 관련된 논의를 골자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부채 문제의 경우, 청년층의 빈곤 경험에 있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중 대다수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정책 연구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험 연구는 몇몇 학위논문을 제외하면 전무한 편이다. 그리고 청년 주거와 관련된 문헌 역시 대다수가 문제제기를 위한 시론/비평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들이 일상을 꾸리는 생활양식의 공간인 주거 경험에 대한 논의 역시 극소수에 미친다. 청년들이 마주한 빈곤이나 빈곤화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연구 역시 <문화/과학>의 지면에서 제기된 비평적 성격의 글을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 생태 속에서 청년의 빈곤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함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먼저 대다수의 연구들이 청년들이 마주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일자리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일자리 정책으로 단순화한 청년정책의 다각화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채, 주거, 빈곤 역시 청년들이 마주한 주요한 어려움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이 성취한 지점과 한계점에 대한 논의는 향후 진행될 청년연구와 청년 관련 정책에 있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나름의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청년의 빈곤화 현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

들의 함의와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부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일상의 공간인 주거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청년 빈곤을 중점적으로 다룬 문헌들을 검토할 것이다.

(1) 청년 부채에 관한 연구

청년 부채와 관련한 기존의 문헌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이 거의 필수화되면서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상승된 대학 등록금 상승이 맞물려 가계 부담이 증가된 환경과,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학자금 대출이 대학생 청년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억압으로 다가오는 문제적 상황에 기인한다(반상진, 2011; 이필남, 김경년, 2012).

이와 같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교육학의 영역에서 수행되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 관련 연구는 정책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학자금 대출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연구(김도기, 2005; 김안나, 2002; 남수경, 2004, 2008; 박정훈, 정용운, 2010)와 학자금 대출이 채무자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곽민주, 이희숙, 2015; 김안나, 김성훈, 2010; 김안나, 이병식, 2008; 김지하, 이병식, 2009; 백진영, 2014; 이필남, 김경년, 2012; 천주희, 2015)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김안나(2002)는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용자제도의 종류와 용자규모, 제도의 목적 및 정책적 특성을 검토하며 학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김안나의 작업은 당시 시행되던 학자금 대출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적 효율성을 검토하며, 학자금 대출 제도의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채무자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환 조건의 다각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하지만 이 작업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시론적 작업으로서, 정책적 방향 제시에 있어 그 구체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남수경(2004)은 소득 연동형 대여장학금 제도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남수경의 작업은 소득 연동형 대여 장학금 제도의 한계로 수혜대상의 한정성과 대여 상환액의 상환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운용의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했다. 하지만 남수경의

작업은 시행 측면에 있어서 상환 가능성과 효율성만을 고려했을 뿐,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 채무자의 관점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김도기(2005)는 2005년 당시 새로 시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의 목적과 현황을 검토하며 학자금 대출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김도기의 작업이 앞선 두 작업과 차별되는 지점은, 기존에 사용된 학자금 대출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분석 틀을 학자금 용자 대상자 선발 이전 단계를 고려하는 데까지 확장하여 공평성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김도기는 해당 작업을 통해 2005년 당시 새로 시행된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상자 선발 이전 단계에서 공평성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출 신청 자격 제한 조건보다 대출 이후의 유인가 마련을 통한 상환 가능성 향상을 모색, 가계 형편에 따른 차등적 이자율 적용과 각 대학의 학자금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남수경(2008)의 또 다른 작업은 학자금 지원 정책이 양적으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의 부족, 교육필요경비로서 학자금 지원 규모의 미흡과 학생 특성에 맞는 학자금 지원 정보 창구의 부재, 재원 규모의 제한성과 민간기금의 유치 부족,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지원체계 부족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정책의 재설계를 주문했다. 남수경은 이를 위해 우선 가구소득을 고려한 지원사업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맞춤형 학자금지원제도를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가장학재단의 독립운영체제 확립을 위한 단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박정훈, 정용운(2010)은 학자금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건전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형평성간의 갈등관계를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학자금 대출금리 변화가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자금 대출에 있어 낮은 금리는 수혜자 학생의 폭을 넓히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금의 재정위험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박정훈과 정용운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위한 재원 확보와 대출-손실 위험률 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다.

이상의 논의들은 정책적 관점에 입각하여 학자금 대출제도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고 학자금 대출제도의 방향에 대해 모색한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하

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청년 대학생들의 삶과 조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본 취지가 과도한 대학등록금 인상과 그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 가정할 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 대학생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논의는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제도적 관점에 입각한 논의들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만 조명될 뿐,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의 실제 삶은 논의에서 빠져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청년/대학생과 관련된 연구라 보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학자금 대출제도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 대학생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김안나, 이병식(2008)은 가계소득에 따른 학생들의 고등교육 선택과 학자금 지원의 예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김안나와 이병식의 연구는 가계소득 200만 원 미만의 계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교육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지점을 조명하였으며, 이들이 고등교육 선택과 진로에 다양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학자금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지하, 이병식(2009)은 학자금 대출제도가 청년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들은 한국교육고용패널의 2005~2007년도 패널 자료를 통한 분석모형으로 대학생 학자금 유형이 청년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청년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분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에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유용하고, 저소득 계층에는 장학금 지원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효과에 집중한 나머지, 청년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 구조적 맥락 - 대학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 학자금에 대한 가계 부담 등 - 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안나, 김성훈(2010)의 연구는 나름의 시사점을 던져준다. 김안나와 김성훈은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이 대학생들의 학비마련을 위한 휴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서울 소재 여자종합대학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 연구에서는 가계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집단의 휴학률이 44.4%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특히 저소득 집단에서 학비마련을 위한 휴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학자금 대출 제도가 청년 대학생들의 휴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지속에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을 조명하였다.

이필남, 김정년(2012)은 청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초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이필남과 김정년의 연구는 대학교육비용 마련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의존 여부가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 구직기간과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 및 첫 직장 임금으로 나타난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들의 연구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월평균 임금이 낮은 일자리로 빨리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에 따라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곽민주, 이희숙(2015)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청년 대학생들의 대출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분석했다. 그들의 연구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일상생활 영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관련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다는 점과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이들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이필남, 김정년(2012), 그리고 곽민주, 이희숙(2015)의 연구는 그간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연구가 대출 이용 학생들의 배경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 한 채 학자금 조달과정 자체에만 집중했던 것과는 다르게, 학자금 대출이 그를 이용하는 청년 대학생들의 이후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조명했다는 지점에서 함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역시 수치화된 데이터로 단순 인과관계만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학자금 대출 제도와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구조적 요인에 대한 언급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자금 대출 경험을 통한 대학(원)생들의 신용과 부채의식의 형성 과정에 주목한 백진영(2014)과 ‘학생-채무자’ 주체의 형성과정에 대해 탐구한 천주희(2015)의 연구는 기존의 계량적 연구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통찰을 던져준다. 먼저 백진영(2014)은 신용과 부채에 대한 인식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에 접근한다. 그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청년 대학생들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면서,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신용이란 무력함과 족쇄로 인식되며, 따라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스스로 소극적인 신

용관리주체가 되는 것을 택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또한 백진영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부채에 대한 인식과 관계 맺는 지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에 참여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대학생들은 대출을 가치 있는 부채로 만듦으로써 부채, 채무자의 이미지가 자신에게 덧씌워지는 것을 거부했다. 반면, 상환시기가 다가올수록 이들이 부여했던 학자금 대출에 대한 가치와 의미는 희석되는 양상을 보였다. 백진영의 연구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청년 대학생들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과 기존의 연구들이 등한시했던 ‘금융상품’으로서의 학자금 대출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학자금 대출 경험이 청년 대학생들의 신용 및 부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는 지점에서 그 함의를 갖는다.

천주희(2015) 또한 백진영(2014)과 같이 청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경험에 주목했다. 천주희는 보다 구조적인 맥락에서 학자금 대출에 주목했는데, 그는 사회 재생산의 구조를 부채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대학생들의 경험을 ‘채권-채무’의 관점에 입각하여 독해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천주희는 우리 사회에서 ‘학생-채무자’라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고, 이는 사회가 고등교육영역을 부채를 통해 재생산하고 있으며 청년 대학생들에게 ‘채무자의 삶’을 하나의 양식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원)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를 통해 천주희는 2000년 전후로 도입된 금융장치들이 국가적 경제 위기와 가족 재생산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내재하며, 이러한 금융제도는 ‘교육기회의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청년 대학생을 채무자라는 새로운 금융주체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제도적, 문화적 조건에서 청년 대학생은 ‘학생-채무자’라는 새로운 주체의 형상으로 전환될 것을 요구받는다고 언급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학생-채무자’ 주체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금융계약 과정을 매개로, 기존의 사적 영역에서 고등교육비용을 부담하던 ‘가족복지’ 형태가 국가와 시장의 복지적 요구가 혼합된 ‘신자유주의 복지’ 형태로 이행하면서 나타난 국가와 가족 사이에 끼어있는 주체라고 언급한다. 천주희의 연구는 보다 구조적인 맥락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한 연구이며, 학자금 대출 제도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주체성에 대해 탐구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존재한다.

백진영(2014)과 천주희(2015)의 연구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기존의 계량적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던 부분, 즉 학자금 대출 제도가 갖는 구조적 맥락과 그를

통해 파생되는 신용과 부채의식, 그리고 채무자 주체성을 조명했다는 지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역시 학자금 대출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청년 부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부가 대학생, 그것도 학자금 대출의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기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되는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청년 부채에 대한 연구는 최계연(2014)의 비평적 성격의 글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청년 부채에 대한 연구가 대학생, 그것도 학자금 대출이라는 측면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청년 주체들의 부채 문제를 포괄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2) 청년 주거에 관한 연구

지금 여기의 한국사회 청년들이 봉착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서울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14㎡에 미달되는 곳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36.3%에 달한다는 한 언론의 보도는, 상당수의 청년들이 주거 빈곤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³⁾ 2010년대에 들어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듯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학술적, 정책적 성격의 작업들이 수행되기 시작했지만,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청년 주거”, “1인가구” 등으로 검색했을 때 그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작업이 청년 주거 현실에 대한 실태보고에 그치는 등 양/질의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에 수행된 청년 주거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현황 및 정책 제안(권현정, 2016; 김서연, 2013; 배병우, 남진, 2013; 이수옥, 김태환, 황관석, 변세일, 이형찬, 2015; 이현정, 2014, 2015; 임경지, 2015; 최은영, 2014), 대안적 주거 모색(박은진, 2012; 이한솔, 2013; 황서연, 2014), 청년 주거에 대한 문화적 분석(구승우, 2016; 정민우, 2011; 장민지, 2015)의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 가장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연구는 청년 주거의 현황 및 정책 제안과 관련된 연구다. 먼저 배병우(2013)는 서울시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능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대학생들을 주거 불안 계층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주거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대

3) 시선뉴스 (2015, 06, 06). 민달팽이유니온 “서울 청년 36.3% 주거빈곤에 시달린다”.

학생들의 주거 실태와 주거비 부담 능력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병우에 따르면 서울시 대학생의 주거 부담능력을 측정한 결과, 소득 중 주거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숙사나 전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능력이 월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 출신일수록, 필수 생계비가 많을수록 주거비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는 청년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모집단이 서울, 그것도 서울의 일부 -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 에 국한되었다는 측면에서 대표성을 보이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김서연(2013)은 대학생 주거권 네트워크에서 2012년 서울시 거주자 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 조사 자료와 한국의 주택보급률 및 임차주택 구성비 통계 자료를 근거로 청년들의 주거 환경과 그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는 수집한 문헌을 근거로 청년들의 주거는 높은 임대료와 공공임대시장의 빈약한 규모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해 실제 수요를 고려한 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부담스러운 임대료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2014)은 비수도권 출신 예비 사회진출자의 졸업 후 주거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효과를 측정했다. 그는 청년가구의 주거 문제가 결혼, 출산, 부모 세대의 노후대비 저해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진출을 앞둔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비수도권 출신 예비 사회진출자 청년들은 졸업 직후 바로 독립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독립하여 거주할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바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독립하여 거주하지 않을 경우 부모나 형제, 친척 집에 거주할 것을 예상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들의 졸업 후 독립 거주에 있어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청년들의 독립 거주가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직장 선택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정부 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에 있어 연구의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저렴한 주거 공급 확대와 주거비의 금전적 지원이었던 반면, 저금리 대출이나 소득공제 혜택 등

에 대한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의 연구는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 통념에 가까운 내용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과 그를 통해 정책 지원의 방향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제안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청년 주거와 관련한 면밀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은영(2014)은 민달팽이 유니온과 협력을 통해 2014년 서울 청년가구의 주거 실태와 주거복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조사자료와 청년 주거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청년 주거와 주거복지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은영의 연구는 김서연(2013)과 유사한 작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실태 보고와 더불어 이들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민달팽이 유니온과 협력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근거로 상당수의 청년들이 현재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그로 인한 기대소득의 감소, 주거비 부담 등을 이유로 미래의 주거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측면은 한국 사회의 주거 상황 사다리가 붕괴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외의 청년 주거 관련 정책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존의 한국 청년 주거 관련 정책이 경제적 약자, 그리고 그 중 하나인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으며,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들의 정보 접근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은영의 연구는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청년 주거 정책이 청년들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시한다. 최은영의 작업은 비교적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청년들의 주거 실태에 대해 실증적으로 꼼꼼히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지점은 수도권 및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실태와 그에 대한 맥락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현정(2015)은 2012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청년 임차가구의 지역별 주거 실태 비교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군집을 나누어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 실태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수도권 거주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과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요청되지만, 현행 공공부문의 청년 주택 지원 정책이 대학생이라는 특정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서울 중심의 청년 주거 연구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사례까지 탐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연구자 스스로 밝혔듯이 주택문제의 지역적 비교에 있어서 수도권, 5대 광역시, 그 외 지역으로 나뉘었다는 점은 개괄적인 성격을 지닐 뿐, 보다 세밀한 맥락에서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수욱과 동료들(2015)은 정책적 차원에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실태분석부터 장래 불안요소까지 다양하고 세밀하게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주거불안정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꾀했다는 점과 청년을 (정책의) 시혜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과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와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후 다른 논의를 통해서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경지(2015)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의 원인을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공공의 역할부재로 진단하며,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이러한 방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차원의 정책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청과 민달팽이 유니온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근거로 청년 주거 문제의 원인을 도출해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량 저조로 큰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마주하여 정책 시행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권현정(2016)은 청년 1인가구의 주거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보급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불안, 실업률 증가 등 청년들이 봉착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주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주거 빈곤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에 대처하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비책들이 노인, 어린이, 장애 등에 맞춰진 기존 복지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저자는 '주택바우처 제도', '주거급여 지급' 등의 정책 제안을 하고 있으며, 소형주택의 공급 및 사업주체에 대한 법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청년 주거와 관련된 현황 및 정책 제안적 성격을 띠는 연구 대다수는 다양한

청년들의 주거 환경 반영, 청년 주거에 대한 맥락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는 대다수의 관련 연구들이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청년 주거의 실태 보고에 그친다는 점과 연계된다. 실제로 주거 빈곤에 처한 청년들의 삶의 맥락과 구조에 대한 언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역시 해당 연구들의 공통된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열악한 청년 주거 현실 속에서 대안적인 주거를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박은진(2012)은 유연화된 노동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어 안정적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삶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IMF 이후 심화된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조건 하에서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에 처한 청년들이 공공주거를 통해 일상생활의 물질, 정서적 결핍을 해결하고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하나의 사례로 해방촌의 게스트하우스 '빈집'과 그 초기 기획자들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자는 '빈집'의 사례를 통해 자생적 주거실험 모델의 가능성을 타진하며,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 청년들의 공동주거 공간의 구성과 일상을 해외 사례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 '빈집'의 사례에 대한 문화적 분석을 시도하여 대안적 공동주거모델로서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한솔(2013)은 대학생들의 주거권에 주목하여,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안적 활동 단체로서의 '민달팽이 유니온'의 형성 배경과 활동 내용,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 언급한다. 자신이 '민달팽이 유니온'의 활동가이기도 한 저자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설립 배경과 구체적 활동 내용을 언급하며 집에 대한 인식 변화 촉구와 청년 주거 문제의 해결에 대한 비평적 성격의 작업을 시도하였다.

황서연(2014)은 민간, 비영리 영역에서 진행되었던 주택 공급 과정을 검토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해당 단체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향후 청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를 언급한다. 그는 사회적 경제 주체를 청년 주체와 일반 주체로 나누어서 심층 면접을 통해 해당 단체들의 활동 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황서연의 작업은 운영주체의 개인적 희생 없이 대안적 주거공간 활동 단체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조명했으며, 특히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최소한의 기본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반 주체 활동 단체의 경우 청년 주체 활동 단체에 비해 역량은 뛰어난 편이지만, 이들 대다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이들 단체

들로 하여금 청년을 사업 대상으로 삼을 유무형의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황서연의 작업은 대안적 주거공간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해당 단체 소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 역시 추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점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 대안적 주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박은진(2012)의 작업은 하나의 대안적 사례에 대한 해당 주체들의 경험적, 문화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연구를 제외하면 청년들의 대안적 주거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이한솔(2013)과 황서연(2014)의 작업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 작업들은 비평적 성격을 지닌 활동 단체 소개에 그치고 있으며 뚜렷한 대안이나 활동의 의의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문화적 분석은 주로 학위논문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들은 구조적인 맥락 하에서 청년들의 주거 환경과 주거지 거주 맥락, 그리고 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고시원을 분석한 정민우(2011)의 작업은 청년들의 주거와 이동, 그리고 주거 경험을 통한 정체화의 불/연속적인 국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정민우는 청년들의 정체화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 '독립'의 서사가 구축되는 방식에 주목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이 고시원이라 불리는 공간에 거주하게 되는 구조적 맥락과 경험, 그리고 그를 통해 '집'이라는 개념이 의미화되는 방식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자면 청년들의 주거는 주거 불평등과 청년실업의 증대와 같은 구조적 조건하에 가족적 계급 유지와 이동의 전략이 작동하는 장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민우는 주거공간과 생애단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규범적 시공간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정민우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 생애전망에서 가족-이성애-재생산의 제도를 근간으로 한 규범성을 규범적 시공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반복적인 주거이동과 위치변경 속에서 청년들에게 있어 '집'의 의미가 균열되는 과정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정민우의 작업은 그간 공간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되어 온 '집'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고시원이라는 장소와 '집'을 통해 청년세대의 삶을 증층적으로 관찰하고자 했다는 점과 청년들의 구체적인 주거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을 둘러싼 욕망과 불안 그에 대한 의미 분열 등을 고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민지(2015)는 여성청년 이주민들의 ‘집’의 의미와 장소화 과정에 주목했다. 그는 집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가 젠더 편향적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청년들의 이주와 장소화 과정을 젠더적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실 청년들의 주거에 대해 논하는 문헌 중에서 젠더적 관점은 정민우(2011)와 구승우(2016)에서 일부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장민지는 연구를 위해 여성청년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자기기술지, 시각자료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청년 이주민들의 주거와 장소화 과정에 대한 세밀한 경험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장민지는 연구를 통해 여성청년 이주민들이 집에 대해 유동적인 것, 해방과 자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가부장적 질서가 내재화된 공간 혹은 고립과 소외로 인해 부정적 정서로 점철된 공간으로 감각한다는 점을 조명하며, 이들에게 ‘집’은 양가적 의미로 다가오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집이라는 공간이 정박된 단일한 장소성을 갖는 물리적 영역이 아닌, 주체에 따라 획일화될 수 없는 다양한 장소성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여성청년 이주민들이 이주 후 집의 장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장소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한, 이러한 장소 경험이 젠더 질서와 경계에 균열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젠더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고, 젠더와 무관한 형태로 부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장민지는 여성청년 이주민들에게 있어 이주를 통해 새로운 집에서 겪는 장소화 과정과 일상적 행위는 여성의 주체적 장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본적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장민지의 작업은 그간 등한시되어왔던 청년 거주 관련 논의에서의 젠더적 관점을 조명했다는 점과 거주 공간과 그에 정주/유동하는 주체의 의미가 정박되어 있는 단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민우(2011)를 제외한 기존의 작업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또한, 집에 대한 일상적이고 구체화된 경험에 대한 문화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나아가 집에 대한 장소화 과정과 그를 미디어 수행성의 측면과 연결시켜 바라봤다는 점에서 일정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구승우(2016)는 도시 이주 청년들의 임대주택 거주 경험에 집중했다. 구승우는 ‘방’이라 일컬어지는 임대/임시 거주지 거주에 대한 청년들의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를 통해 IMF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한국 사회의 노동 유연화가 청년들의 주거 조건과 관계 맺는 방식, ‘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구체적 경험과 장소형성 과정의 명과 암, 그리고 ‘집’에 대한 욕망의 균열과 그러한 경험들로 형성

되는 감정구조의 결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 심화된 노동의 유연화는 청년들의 주거 조건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의 유연화’가 야기되었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또한, 도시 이주 청년들은 ‘방’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 감각, 행동 등이 공간적으로 제약된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를 규범화하는 양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 더욱 강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의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시 이주 청년들은 ‘방’ 외부의 공간을 찾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이러한 양상은 자본과 취향의 향유 가부에 따라 ‘상징적 분화’를 야기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구승우는 대부분 ‘방’에 대한 부정적 거주 경험을 겪는 도시 이주 청년들은 ‘집’에 대한 욕망을 가속화하지만,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욕망의 실현과 전망에 균열을 야기하며 ‘체념’의 감정구조를 형성한다고 지적하였다. 구승우의 작업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도시 이주 청년들의 거주 경험에 대한 문화적, 구조적 분석을 꾀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함의를 갖지만, 서울 이주 청년들의 주거 경험에 국한된다는 점, 그리고 이주와 관련된 독립의 서사에 대한 배경적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 ‘방’의 외부에서 발현되는 청년들의 노동과 여가 활동이 ‘방’이라는 주거 공간과 관계 맺는 지점에 대해 두껍게 풀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청년 주거와 관련된 연구는 소수의 작업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현황 묘사에 그치고 있다. 덧붙여서 청년들의 주거 경험에 대한 밀도 있는 분석 역시 소수의 작업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청년들의 주거 실태에 대한 현황 분석이 주가 되는 학술적 환경이 청년들을 특정한 조건 하에 정박된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다. 생경한 청년들의 경험과 대안적 실천에 대한 분석은 소수의 작업들을 제외하면 미흡한 편이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와 관하여 청년들의 주거 이주 트랙과 주거에 대한 관점, 욕망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적다는 지점 역시 몇몇 작업을 제외한 청년 주거 관련 선행 연구들의 한계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청년 빈곤에 관한 연구

청년 빈곤과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일자리, 취업, 주거와 연계되어 논의되곤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의 빈곤/빈곤화를 중점적으로 다룬 논의는 <문화/과학>

과 <복지동향>, <황해문화>의 일부 지면에서 이루어진 비평적 작업을 제외하면, 몇몇 작업 외 체계적인 학술적 작업은 전무한 실정이다(김소영, 2016; 김수정, 2010; 김수정, 김영, 2013; 박성재, 반정호, 2012).⁴⁾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청년 빈곤/빈곤화에 대한 학술적 작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언급하자면 청년층의 빈곤과 그 이행에 대해 논한 연구(김수정, 2010)를 필두로 노동의 관점에서 저임금 근로에 미치는 요인을 조명한 작업(박성재, 반정호, 2012)의 작업,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청년층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작업(김수정, 김영, 2013), 그리고 청년노숙이라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 고찰한 연구(김소영, 2016)가 존재한다.

먼저 김수정(2016)은 가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의 청년층 빈곤에 대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청년층 빈곤이 다른 생애주기에 있는 연령집단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청년층 빈곤이 갖는 특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다. 김수정은 가계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령대별 빈곤프로파일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초기 청년기인 18~24세의 빈곤율이 더 높으며 이들의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밝혀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을 추동하는 요인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 착종된 노동시장 유연화와 불안정성 증가가 청년층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수정은 한국의 18~34세 집단의 특성으로 가구주의 비율이 낮으며, 부모 가구의 자녀로 남아있는 비율이 높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들의 청년 빈곤층의 60%를 차지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빈곤층의 청년들은 상당수가 실업상태에 있거나 저임금 근로를 하는 등 근로빈곤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김수정은 청년기 빈곤은 가족유형, 가구지위 및 생애주기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김수정은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 실업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수정의 작업은 일자리, 취업, 주거와 같은 논의에서 보론 혹은 각론으로 언급되던 청년 빈곤의 문제가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것임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박성재, 반정호(2012)의 작업은 청년 취업자의 저임금 근로 진입과 탈출에 대해 노동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청년 취업자 중 저임금 근로를 하는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저임금 근로를 벗어나는 데 영향을

4) 구글학술검색(Google Scholar),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청년 빈곤, 청년 빈곤화 검색 결과 주된 논의로 청년 빈곤을 다루는 연구는 본문에서 언급한 문헌 외에 검색되지 않았음.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년취업자의 5% 정도는 저임금 근로가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학력자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상 지위가 저임금 근로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근속은 저임금탈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분석되었다. 연구자들은 저임금 근로를 지속하는 이들은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성별, 학력 이중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사상 지위 간 근로조건과 사업장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작업은 청년을 비교적 세분화하여 취약 청년의 계층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포착하고자 한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분석의 주된 자료로 사용된 패널자료가 3년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가 다루는 부분이 단기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한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수정, 김영(2013)의 작업은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자들은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속성 및 빈곤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피하며 이들 내부에서 경제적 취약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차이를 만드는 요인들을 조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은 한국 노동패널 2007년과 일본 JGSS 2006년 자료를 대상으로 한 서열 로짓 분석을 시도하여 빈곤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청년층 가구에서 성별, 학력, 연령, 고용지위와 같은 노동시장 관련 요인이 빈곤의 주된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력의 영향력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고용지위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정규직 여부가 중요한 빈곤 결정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족지위와 관련해서는 기혼, 소자녀일수록 빈곤 위험이 낮게 나타났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혼인 자체가 지위재로 기능하고 소자녀는 경제적 위험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모두 부모자원의 가용성이 청년층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청년 빈곤에 대해 단순한 빈곤 규모 측정을 벗어나, 청년 내부의 차이를 통해 빈곤 요인에 대해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그 함의를 갖는다. 하지만 단일년도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과 연구자들이 밝혔듯이 한국과 일본 청년들에 대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소득변수의 엄밀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각국의 사회 환경 및 맥락에 대한 언급이 미흡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김소영(2016)은 청년노숙의 경로에 대해 고찰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노숙인들

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노숙진입의 하위경로와 노숙 이후의 생활 양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청년 노숙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김소영은 청년 노숙인들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학력 단절과 원가정의 극단적 빈곤과 주거 불안정 경험, 그리고 보육원, 교도소, 소년원 등의 시설 생활 경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년 노숙인들에게 있어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가진 가족 요인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독립 이행에 있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조명하였다. 노숙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청년 노숙인이 노년 노숙인에 비해 더 이른 노숙 진입과 불안한 노숙 환경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기 노숙이 노숙 생활에서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 설정과 독립적인 공간 추구에 있어 중장년, 노년기 노숙 진입인들보다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시사한다. 김소영의 청년 노숙인에 대한 연구는 청년 노숙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한 시기의 분절적 사건이 아닌, 분절적 원인 요소들의 시간적 인과성을 확인하고 이것의 경로화 과정에 대해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존재한다.

박권일(2009)의 비평을 필두로 이외의 청년 빈곤/화 작업들은 대부분 비평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88만원 세대>의 저자이기도 한 박권일(2009)은 청년들의 빈곤을 사회변동의 축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하며, 청년들의 빈곤을 사유하는 것에 있어 특정 세대를 의인화, 인격화하여 사고하는 것과 사회 성장 과정의 일부로 여기는 것을 배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청년 빈곤이라는 의제를 개별화, 파편화해서는 안 되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불안정노동의 전면화가 생애과정과 맞물리며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년 빈곤의 구조적 맥락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에 따른 불안정노동, 그리고 가족복지의 종말을 언급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세대담론과 성장담론을 넘어 세대를 관통하며 확산되는 빈곤에 집중함으로써, 이 연쇄과정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기훈(2012)은 <문화/과학>의 지면을 빌려 현시대 청년들의 삶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조건들을 묘사한다. 그는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의미를 지닌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로 지금 여기의 청년들을 표현하며, 과도한 경쟁과 도태의 논리에 몰린 청년들의 실태를 중·고등학교, 대학, 졸업 이후의 삶을 통해 묘사한다. 장봄, 천주희(2014) 역시 <문화/과학>의 지면에서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삶을 묘사한다. 그들은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지형을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삶에 대한 상상을 언급한다. 연구자들은 프레카리아트를 노동의 유연화가 만연한 신자유주의

적 삶에서 등장한 새로운 노동 계급으로 지칭하며,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현실을 언급한다. 동시에 그들은 한국 사회의 프레카리아트 현상을 ‘청년’이라는 범주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조명해보고자 했다. 저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해체 속에서 대안적 삶을 상상하며 삶의 안정성을 가족이 아닌 다른 공동체에서 대안적으로 구성하고자 했다는 점과 ‘잉여’로 규정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의미 전환을 꾀한다는 점을 통해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고자 하였다.

이태형(2015)은 〈월간 복지동향〉의 지면에서 불평등 속에 위치한 청년들의 불안한 생활 현실을 언급한다. 그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 생활불안, 부채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태형은 청년을 위한 생활 안전망이 미비한 현실과 일자리 정책으로 수렴되는 청년정책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재설계를 주문한다. 그러한 관점 하에 이태형은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생활안전법 제정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전자는 ‘청년’의 실체를 규명하며 청년의 범주와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청년’ 문제가 일자리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의 삶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하여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 빈곤/화에 대한 대다수의 문헌은 〈문화/과학〉, 〈월간 복지동향〉 등의 지면을 빌려 비평의 형식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청년들의 빈곤/화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다른 사회적 문제와 절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기인하지만, 동시에 청년을 매개로 한 빈곤/화의 과정이나 빈곤의 재생산과 같은 구체적 논의가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청년세대의 정치 및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의 정치에 관한 최근 연구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넓게 보면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와 정치행위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청년세대의 정치적 무관심, 탈정치화를 지적하고 우려하는 연구들과 그 원인을 진단하는 연구(이길

환, 2014; 이영민,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연구들(김세균, 2010; 황정화, 2006)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청년세대를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연구들(김세균, 2010; 김현준, 2015)도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 학생운동을 되살리자고 주장하거나 학생운동에서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청년세대를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혹은 청년세대가 정말로 탈 정치화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정치행위, 특히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도 맞닿아 있다. 청년세대의 정치행위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공윤경, 2016; 김소연, 2013; 김선아, 2010; 김유진, 2014; 김종진, 2014; 김지만, 2013; 류연미, 2014; 유형근, 2015; 이광석, 2011; 이소영, 2012; 임미영, 2015; 최철웅, 2011; 홍명교, 2011)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치 행위 - 주로 사회운동 - 시도들을 조명한다.

(1)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대한 가장 큰 고정관념은 '20대 개새끼론'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무관심, 즉 탈정치화 현상이다. 이영민(2010)은 20대의 정치의식을 세대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험연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 20대의 정치의식 특성을 분석하고 그 형성 경로를 분석한 결과, 20대 정치의식은 보수화라기보다는 무당파의 증가 혹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를 낮은 정치효능감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가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는 단지 세계가치관조사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한 문항 한 개의 응답 결과일 뿐이다. 저자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로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촛불집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당파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정치에 무관심해진다는 것과 직결될 수 없으며 무관심할수록 보수적이라는 주장(38쪽)도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이길환(2014)은 이영민(2010)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산소재 4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치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이영민(2010)의 연구 결과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저자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정치의식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경향은 '중도' 성향이며 이는 낮은 정치효능감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저자는 이를 단순한 '정치 무관심'으로 보지 않으며 전통적 방식의 정치참여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길환(2014)의 결론처럼 '전통적 방식'의 정치참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정치 참여가 청년세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보다 적절한 문제 제기는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와 어떻게 다른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지가 될 것이다.

황정화(2006)는 청년세대를 '탈정치화'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러한 시각은 청년들의 정치의식을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며, 자칫 대학생들의 정치적 성격을 부정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저자는 대학 내에서 과거보다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사회운동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학이 취업을 위한 훈련의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대학 내 '비판적 체계 해석'의 훈련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학생운동조직이 연대와 공론장 강화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해 나가는 운동영역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YMCA의 조직화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저자는 이 과정에서 '성찰적 정치화'와 '실천지향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을 분석함에 있어 청년세대가 '대학생'만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좀 더 역사적,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김세균(2010)의 연구는 한국의 정치지형 형성의 역사를 꼼꼼하게 살피고 이러한 정치지형 속에서 IMF를 경험하며 성장한 청년층이 어떤 정치적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청년세대는 기본적으로 탈냉전적이고 탈권위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저자에 따르면 청년세대는 극도로 우경화될 가능성과 극도로 좌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진 존재이다(58쪽).

또한, 청년들은 성장과정에서 IMF를 겪으며 경제주의 경향, 경쟁, 각자도생, 이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 등의 특성을 보이기도 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통해 공정한 배분이 일어나는 체계라기보다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각자도생의 논리는 결국 좌절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을 분석함에 있어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한국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대한 강력한 욕구와 이를 받치는 가족주의, 이와 대치되는 신자

유주의적 경쟁체제 하 교육에서의 양극화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청년세대의 재정치화 가능성 또한 제기하고 있다. 촛불집회의 경험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급등한 청년층 투표율을 청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흐름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층이 오버랩 되고 있는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층, 그리고 그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반-신자유주의 연합전선으로 포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진보정치세력이 이들에게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어떤 특정한 변인이나 정책, 역사적 계기 등으로 인해 정치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청년층 정치의식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조사 항목은 여성정치에 대한 인식, 정치관심도, 정치관련 활동 경험, 청년층의 투표, 청년층의 현안 등이었다. 조사 결과,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에 비해 정치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의 전반적 특성으로는 정치 참여 경험이나 정당 선호는 비교적 약하지만 투표의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청년세대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이재경, 장지연(2015)은 한국 사회에서 ‘정책주도 불평등’으로 인해 세대 간 정치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일자리 영역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실업문제는 다양한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현재까지 정부정책은 취업 자체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26쪽), 더 근본적으로는 청년 일자리에 배정된 예산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정부의 취업정책 자체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나마도 정책이 노년층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에게는 눈높이 낮추기 위주의 정책이 시도되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들은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은 잠재적이지만, 이것이 “정책과 정치의 장에서 담론 투쟁을 통해 세대정치로 발현되며, 제도 정치 내에서 결정된 특정세대에 편향된 정책으로 인해 세대 갈등으로까지 증폭된다”고 지적하였다(23쪽).

이기형, 김태영, 김지수, 박휘서, 유동림(2013)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정치화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연구자들은 정치/시사 분야 팟캐스트 열

풍을 조명하며 그 주요 수용자층인 20~30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팟캐스트의 사회정치적 역할과 매체로서의 기능들, 그리고 그 한계”를 발견해내고자 하였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팟캐스트가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았던 이슈들에 대해 (비록 깔끔한 형태의 뉴스는 아닐지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팟캐스트의 탈권위적 특성과 풍자 등으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상당수 응답자들은 팟캐스트가 청취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대안적 언론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기형 외, 2013, 95-96쪽). 그러나 응답자들이 팟캐스트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나꼼수’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며 나꼼수가 지닌 정파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즉 청년세대는 쉽게 접근 가능한 팟캐스트를 ‘대안 언론’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각각의 프로그램들의 정파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한편, 정당정치에 대한 태도가 아닌 ‘노동운동’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도 있었다. 유진선(2014)은 조직률 급감이라는 노동조합의 위기를 둘러싸고 다양한 재활성화 전략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조직화에 관한 논의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문제시한다. 이러한 경향은 비정규직, 여성, 청년을 핵심적 조직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서구와는 상반되는 경향이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기반하여 청년세대가 중, 장년층에 비교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로 성별, 학력 및 혼인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 있어 중장년층과 청년층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노조 선호도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들을 반박하고 있는데 청년 여성은 청년 남성에 비해 더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둘째, 복지에 대한 인식과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서로 일관성이 있지 않았다. 셋째, 중장년층과 달리 청년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의식’ 요인은 지역 변수가 유일했다. 그런데 지역주의 경향과는 달리 광주/전라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에 있어 모두 부정적이었다. 청년세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자 했던 연구자의 의도에 비해 중장년층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청년세대만의 독특한 특징을 찾아내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김현준(2015)의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라는 독특한 방법론으로 한

청년이 어떻게 정치화되는지에 접근하고 있다. 저자는 문화적 국가론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개인(활동가)이 국가 관념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를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2) 청년세대의 정치행동에 관한 연구

비록 청년세대가 세대 동맹을 통해 적절한 권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도 존재하지만(박권일, 2012),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하다. 특히 청년세대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청년세대가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성 정치의 전통적 정치 행위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면,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년세대의 다양한 정치적 시도를 청년세대의 노동운동, 새로운 방식의 사회운동과 전략, 새로운 집회문화, 뉴미디어의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최근의 청년세대의 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들을 소개할 것이다.

① 청년세대의 노동운동

2014년 9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에서는 ‘청년 노동운동 현황과 과제 -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깊이 들여다보기’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완성된 논문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발제가 진행되었고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활동가들이 토론을 맡았다. 김종진(2014)은 양대 노총 산하에 노동조직이 아닌 일반노조 형태의 독립적인 세대별 노동조합이 탄생한 현상을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면서,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조합원들의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계급의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두 노동조합은 평균 연령 28.5세, 서울 중심, 대학재학 이상 학력 중심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부분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주로 교육서비스업, 음식숙박업에 분포되어 있었다(34-35쪽). 김종진은 두 노조의 조합원들이 2008년의 촛불집회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고, 대학재학 중에도 사적 취미 모임보다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모임에 관심이 더 높았으며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정도도 높았다는 점, 즉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사회화되어 있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서울

중심에서 전국적 조직화로 나아갈 것인지, 조합원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뿌뿌부르주아 운동의 위험을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유지할 것인지, 양대 노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 꼽혔다.

유형근(2015)은 이날의 발표를 발전시켜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청년 세대에 대한 논의 중 체제에 충성하는 청년과 이탈하는 청년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집단적으로 ‘말언(voice)’을 주체적으로 기획하는 청년들의 존재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못함(38쪽)을 지적하면서 청년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당사자운동 단체인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의 설립과정과 운동방식을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김유진(2014)은 주로 두 노조의 등장과정과 조합원 속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던 유형근(2015), 김종진(2014)의 연구와 달리 한층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어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감정상태와 그 대응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자는 불안정 노동 시대의 무기력한 존재, 혹은 순응하여 경쟁을 내면화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청년세대와는 또 다른 범주의 청년세대의 삶의 전략을 포착하기 위해 알바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알바노조의 조합원들은 그들의 학력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고 이것이 조합원들의 상이한 감정상태를 야기하였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각자의 감정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또한 자신이 처한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공통적인 대응으로 알바노조 가입을 선택하였지만, 조합원마다 구체적인 가입동기와 노조활동 내용은 달랐다. 저자는 이를 캠퍼의 권력-지위 모델을 이론 틀로 가져와 세 그룹(사회비판형, 보험형, 자기구원형)으로 유형화하고 이들이 각자 삶의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노조 활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분류 및 분석하였다.

② 새로운 방식의 사회운동과 전략

공윤경(2016)은 주거의 영역에서의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관 주도 소셜믹스 정책'의 한계(또 다른 갈등과 소외 발생 가능성)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청년계층과 1인가구 중심의 셰어하우스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한 청년세대는 경쟁과 배제로 요약되는 현대 사회에

서 돌봄과 친밀성을 나누며 공동체성, 지속성을 형성하고 아울러 공유, 공생의 논리를 바탕으로 주거공동체를 시도하고 있었다. 저자는 청년세대가 주도하는 셰어하우스 운동이 공간, 자본, 관계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를 지속한다면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사회적 배제 극복 등을 이를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반면, 임미영(2015)은 공윤경(2016)과는 반대 방향의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자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에서 주요한 전략인 점거 등의 '영역화' 전략과 대비되는 새로운 시도인 '탈영역화' 전략 시도 사례를 소개 및 분석하고 있다. 사례로는 '마포 민중의 집'과 '청년허브'를 선정하였는데, 두 사례의 공통적인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을 외부와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간을 통해 운동의 주체를 성장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재영역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청년허브는 관이 만든 공간에 많은 경우 이전부터 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청년세대의 독립적인 운동 전략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운동의 자립도를 낮출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한편, 김소연(2013)은 '자립음악생산조합'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청년세대 문화정치운동으로 규정하고, 청년세대의 사회운동이 갖는 전략적 특성과 함의를 찾자 하였다. 청년세대 대안운동의 관점에서 '두리반 철거반대운동'을 소개하고 사회운동의 전략적 관점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글이지만, 프레이밍 이론에 과도하게 사례를 맞춰나가다 보니 사회운동 내부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충돌 등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에서 사례로 삼고 있는 '두리반 철거반대운동'과 '자립음악생산조합'이 과연 '청년'의 운동이었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 운동이 청년의 운동인지 혹은 공연과 음악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청년세대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하는 운동인 것인지, 아니면 대안적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으면서 인디음악에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자본과 취향을 지닌 사람들의 운동인지는 면밀하게 분석되고 있지 않다. 이 운동의 주체들이 스스로를 '청년'으로 인지하며 이 운동을 '청년'의 운동으로 명명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③ 집회문화

청년세대의 집회문화를 연구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운동은 (비록 그 주체가 대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2011년의 반값등록금 시위일 것이다. 김지만(2013)의 연구는 청년, 그중에서도 20대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반값등록금 의제를 청년에게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고 반값등록금 집회문화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세대가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과 그 성격을 고찰하고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값등록금 운동 참여를 통해 청년들은 스스로의 독특한 정치적 목소리와 모습을 표출하고 있었다. 둘째, 새로운 집회 스타일을 통한 세대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존적 문제(등록금)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성찰적 집회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자는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을 비판하고 우려하는 기성담론을 반박하였다.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청년들은 '생활의 문제'인 등록금을 공공적 의제로 만들어 내며 정치화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 불만을 표출하며 세대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운동방식에 있어서도 직간접적 경험을 활용하여 독특한 집회문화를 형성한 바 있기 때문이다.

④ 미디어와 청년세대 사회운동

미디어 또한 청년세대 운동의 문화와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청년세대 사회운동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각각 영화, 소셜미디어, 새로운 디지털 매체와 청년세대 사회운동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먼저, 김선아(2010)는 '2000년대 이후 청년세대들의 영화에서 '정치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탈정치화되었다고 여겨지던 청년들은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의 '그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청년세대의 영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130쪽). 저자에 따르면, 청년세대는 오히려 더 높은 기술 숙련도와 인터넷 활용을 기반으로 높은 자의식성을 보여주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거나 기술 중심 영화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소영(2012)은 소셜미디어가 청년의 정치 참여, 유대감, 성향 및 이슈선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양한 방식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장 주요하게는 소셜미디어가 개인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석(2011)은 이소영(2012)과 유사한 문제제기를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그 진화가 90년대 이후 각각의 청년세대의 사회 참여 및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차례로 보면, ‘90년대 PC통신의 등장과 신세대’, ‘IMF세대와 인터넷 확산’, ‘2008년 촛불세대와 모바일 문화행동’, ‘2008년 이후 디지털 세대의 문화정치’로 짝을 지으며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그에 따른 새로운 운동방식의 등장을 연결하고 있다. 저자는 이것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운동방식의 단편적 인과관계가 아닌 디지털 미디어와 사회의 조응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자 또한 디지털기술의 개방적, 긍정적 가능성만을 강조하고, 그 이면의 수많은 문제와 부작용들을 고려하지 않는 낭만주의적이고 기술결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은 안타깝다.

⑤ 청년세대 사회운동 등 정치참여에 대한 비판적 관점

최철웅(2011)과 홍명교(2011)는 공통적으로 대학 내에서의 청년세대 운동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철웅(2011)의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청년운동의 위상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청년운동의 정치적 함의를 재구성함으로써 청년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과거 도덕적, 정치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의 암묵적 지지를 받던 사회운동과 달리 고등교육 보편화, 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세대와 대학생은 엘리트라기보다는 예비노동자로 그 지위가 이동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로 인해 청년세대가 경쟁논리를 체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변모하였으며, 집단적 조건이 열악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의 청년-운동은 ‘대학생’의 이해관계를 넘어 광범위한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며 이를 사회운동에 접목하는 ‘노동자운동/사회운동으로서의 청년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재의 청년세대가 체화하고 있는 자기계발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함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러한 주체를 생산해내는 구조의 논리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들의 집단적 연대의 ‘의지 부족’을 문제 삼는 부분은 모순적이다.

홍명교(2011) 또한 최철웅(2011)과 유사한 질문 및 문제제기, 유사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대학에서의 청년운동은 거의 사라졌으며, 현재 대학은

자기계발과 소비문화의 공간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상황에서 현재 학생운동이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학생운동의 연대와 대중운동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청년운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의 조건은 탈각시키고 운동의 당위와 이념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에 대한 참여를 무조건적 당위로 설명하거나 낭만화하면 도리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조건과 구조를 놓치게 될 위험이 있다.

위의 두 연구와는 다르게 류연미(2014)는 좀 더 일반적인 청년, 그중에서도 ‘청년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저자는 연구를 통해 ‘청년활동가’ 현상을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기획이 변동해온 흐름 속에 위치시키고, 그 제도적 조건과 실천적 행위를 고찰하고 있다.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담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 및 그들의 실천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담론의 차원에서 ‘청년’의 ‘활동’은 운동주체로서의 청년상이 몰락하고 불안정 노동자로서의 청년상이 등장하면서 청년세대가 처하게 된 위기를 토대로 등장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변화된 청년대책과 청년관리장치로서 청년허브의 작동에 의해 구체화되고 확장되었으며, 실천의 차원에서 청년활동가는 담론적 재현과 제도적 주체화의 논리를 일부 투영하면서도 담론과 제도로만 환원될 수 없는 긴장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청년의 외부적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으로만은 결정되지 않는 ‘청년주체’의 실천적 행위를 밝혀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으로 ‘청년세대의 정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청년세대 정치에 관한 문헌에는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술지에 투고된 ‘활동가들의 글’도 다수 존재한다. 이 글들은 대부분 지금 스스로가 참여하고 있는 운동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세대의 정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록으로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의 글들을 통해 청년세대와 청년-운동이 무엇을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권수현 (2016). 한국 민주주의 과제 - 젠더관점에 기초한 성찰,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연대, 정치권력 주체의 교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40-42.

: 20대 총선을 청년과 여성의 관점에서 비판한 발표문의 요약

- 김사과 외 (2010). 20대 얘기, 들어는 봤어? - 청년세대의 문화와 정치. <창작과비평>, 38(1), 269-299.

: 20대들이 모여 20대의 정치와 문화에 대해 토론

- 김영경 (2010). 청년운동, 새로운 노동운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과학>, 62, 231-241.

: 청년층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238쪽)이자 청년층이 처한 문제가 곧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청년의 '노동운동'이 등장했어야 함을 지적. '청년유니온' 설립의 정당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글

- 송수연 (2013). 새로운 문화정치의 장, 자립문화 운동. <문화/과학>, 73, 145-159.

: 자립문화 운동의 일부로 청년들의 네트워크 운동을 소개

- 오세연 (2014). 청년유니온이 블랙기업에 맞선 운동을 시작합니다. <비정규노동>, 109, 138-141.

: 청년유니온이 2014년부터 시작한 '블랙기업' 운동에 대한 소개

- 조성주 (2009). 세상도 변했고 청년도 변했다 - 노동운동도 변해야 한다. <비정규노동>, 80, 35-40.

: 청년 단체들이 연대하여 구성한 '경제민주화2030연대'에 대한 소개

- 조성주 (2012). 청년들이 경제민주화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 <월간 복지동향>, 168, 45-53.

: 청년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운동과는 구분되는 청년-노동조합이 필요함을 주장

- 하얀, 이종윤 (2009). 민주노조 운동이 청년들과 만나는 길. <비정규노동>.

: 현 청년운동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청년들을 어떻게 정치적 주체화할 것인지 고민

5) 청년세대의 문화에 관한 연구

(1) 청년들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청년문화 연구는 청년이 향유하고 있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 혹은 특정 상황에서 규범으로 작동하는 문화를 연구한다. 주로 인턴, 주거 문화, 노동 문화, 연애 문화 등을 다루며 청년의 일상과 매우 가깝게 밀착한다.

이기형, 송동욱, 구승우, 정준, 김지수, 이단비(2015)는 청년이 취업시장에서 겪는 경험을 문화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청년들의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자기기술지 방법을 선택한 연구자들은 구직활동을 했던 11명의 자기기술지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자기기술지의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세대의 구직(난)과 관련된 주요 기사와 학술자료, 문화비평문을 함께 조합하여 자기기술지를 해독한다. 연구자는 청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 과정에서 자기 경험을 사물화하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청년들은 자기가 실제 겪었던 경험과 자기소개서를 쓰며 각색했던 경험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해 점점 냉소적으로 변한다.

이기형과 동료들(2015)의 연구가 구직 과정 중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을 문화적으로 분석한다면, 윤민재(2014)의 연구는 취업 과정에서 필수가 되어버린 인턴 경험에 대한 문화적 분석을 시도한다. 인턴제도가 취업을 위한 필수과정인 현실에서 윤민재(2014, 289쪽)는 청년의 인턴문화를 분석하고, 인턴문화와 청년의 심성구조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인턴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주관적 상황과 경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대 청년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면접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이 했던 일들이 '비공식적 업무'이자 '예측 불가능한 업무'였다고 말하며, 맡았던 직무에서 어떤 만족감이나 자기효능감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업무에서 인간적 멸시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

는 제도의 부재를 실감한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인턴 경험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또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인턴의 위치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몸값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296쪽). 연구자는 인턴제도가 “청년 고용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대학생들을 더욱 원자화, 개인화함으로써 청년세대의 본질적인 문제를 은폐”(271쪽)한다고 말한다.

남미자(2013)는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이나 인턴 경험과 같이 특정 시기에 겪는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고, 대학의 입학부터 취업을 준비해서 취업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내러티브 방법으로 기술했다. 남미자(2013, 158-159쪽)는 “대학생의 언어로 만들어진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구는 거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이 가진 취업의 의미와 취업과 관련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한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3명의 이야기를 ‘출발 → 장애물 → 끝나지 않은 경주’의 서사로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세 연구대상자는 공통적으로 경쟁을 겪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불안에 직면해 있었다. 높은 대학진학률로 “노동시장의 숙련 수준별 노동수요와 교육시장의 숙련 공급 사이의 불일치”(180쪽)이 발생하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격화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불안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불안이었으며,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불안이 스펙 만들기라는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불안이다. 사회 안전망의 미비는 개인의 불안정을 완화하지 못하면서 ‘3포 현상’으로 이어진다. 연구자는 경쟁을 힘들어하고 낙오를 불안해하지만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경주마’에 비유한다.

청년이 삶을 지속하는 방식이 취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류연미(2014)는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와 청년허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분석 방법으로 연구자는 청년을 주제로 다뤘던 신문기사와 단행본 자료, 청년층 대상 정책보고서와 청년허브의 시행사업 및 발간물, 서울시장의 연설문을 텍스트로 청년활동에 대한 담론을 분석한다. 이에 더하여 사회적 활동의 명목으로 청년허브의 지원을 받은 적 있는(혹은 받고 있는) 17명의 활동가와 면담을 진행하여 청년 당사자의 실천과 서사를 파악했다. 연구 결과 청년활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은 “참여 절차의 확보를 넘어 청년 개개인의 역능을 강화하려는 노력”(66쪽)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개개인의 역능을 시민운동의 주요 아이디어

어들을 사업화하여 청년으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하게 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연구자는 이를 ‘활동’이라고 부른다. 이 활동은 활동가에게 자신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이며, “복잡한 현실문제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대안과 변화를”(69쪽)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적 속성을 지닌 행위이다. 또한, 기존의 취업 노선에서 자발적으로 벗어난다는 면에서 자발적인 성격을 띤다. 이때 공공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에는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 이는 활동이 노동 외적인 행위로서 단지 보람찬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의 형태로 추구하고자 하는 활동가의 노력이 담겨있다. 요컨대 ‘청년활동’이란, 청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기획하는 행위이면서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일시적인 에피소드가 아닌 지속가능한 기반을 갖춘 행위이다.

이상의 논의는 청년의 취업이라는 주제를 취업률과 같이 계량화된 수치로 분석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험으로서 들여다봤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청년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상정함으로써 세대 내 성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김현아(2015)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노동 시장의 불안정함 속에서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가족 실행을 계획하는지 ‘한국노동패널조사’와 11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여성은 ‘여성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는 것(일자리의 여성화)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한계를 수용하면서 가족계획을 수립한다.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정적이다. 여성은 경제적 기반이 있는 남성과 결혼하여 또 다른 곳에 예속되어 독립을 쟁취하고, 사회의 안전망이 미비한 상황에서 원가족에 의존하는 ‘가족지향적 개인화’라는 모순적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립한 가정 안에서 여성은 자신이 임금 노동을 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계산을 하면서 노동 시장으로부터 이탈한다. 이때 여성은 일자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수용하게 된다.

한편 취업이 청년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문제의식 하에 다양한 분야의 문화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주거연구가 주거 실태, 주거 빈곤 문제임에 반해 정순희, 임은정(2014)은 “청년 1인가구가 그들 스스로의 삶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2쪽) 연구한다. 2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층 중 단독가구주 4명을 심층면접한 후 연구자는 세 갈래로 나누어

연구결과를 설명한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청년다움’ 규범에 대한 불만이다. 연구대상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요구하는 가족과 갈등하고, 기성세대에 대해 반발했다. 두 번째는 살기 위한 ‘투쟁자’ 되기다. 계속해서 스펙을 쌓고, 가치 없다고 판단되는 지출을 줄이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세 번째는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다. 연구대상자에게 일은 “생계수단이며, 사회에 대한 책임완수, 정체성 형성의 핵심요인, 불안한 삶의 기획”(12쪽) 등의 의미가 있었으나, 동시에 이들은 성과에 따른 경쟁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경쟁에서 벗어나 안정을 취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평가했다. 하지만, 스스로 비주류라 여기는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외모에 대한 소비는 멈추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계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쓸데없는 곳에 자원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런 의지와 반대로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 소비는 계속 유지하며 추구하고 있었다.

삶의 양식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다는 진단은 여가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년이 여가를 향유하는 방식을 연구한 박지남, 천혜정(2012)은 청년 여가 문화가 ‘나홀로’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청년이 ‘나홀로 여가’를 즐기는 이유와 나홀로 여가가 청년과 사회에 의미하는 바를 밝히기 위해, 연구자는 나홀로 여가를 향유하는 청년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면접 결과물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청년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노동의 불안함과 노동의 피로에서 오는 정서적 허기를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자발적 외톨이로서의 여가생활을 통해 충족”(9쪽)한다. 둘째, “혼자 여가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일반적인 여가소비 욕구와 다른 매니아적 여가취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과 여가생활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여가생활을 보낸다”(95쪽). 셋째, “외로움이라는 대인관계의 빈 공간을 네트워크로의 끊임없는 접속으로 상쇄”(99쪽)한다. 넷째, 청년의 “나홀로 여가생활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세대적 특성”(99쪽)을 반영한다. 연구자는 이상의 결과를 제시하며 청년의 나홀로 여가문화가 전통의 파괴나 단절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할 때 따라야 하는 표준화된 여가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년들은 차별화된 활동을 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으로 인해 나홀로 여가를 보낸다는 것이다.

표준화된 문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은 여가문화뿐만 아니라 연애 문화에서도 발

견할 수 있다. 김효진(2011)은 소비가 연애의 필수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소비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연애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심층면접방법으로 서울 출신 저소득층 대학(원)생,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졸업생을 분석한 김효진은 저소득층의 연애가 기존의 연애각본을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연애를 지속하기 위해 ‘커플통장’을 사용하거나, ‘동거’를 선택하는 등의 연애각본 조정이 일어났다. 이때 연구대상자에게 연애는 낭만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일종의 프로젝트였으며 이들은 무엇보다 연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성장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향유할 수 있는 양식으로서 문화를 분석한 연구 중에 특정 젠더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허정민, 임수원(2011)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장 보드리야르의 소비사회이론 관점에서 남성의 몸만들기 문화를 심층적으로 구명”(157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첫째, “보드리야르의 소비사회이론 관점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청년기 남성의 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과 둘째, “보드리야르의 소비사회이론 관점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청년기 남성의 몸만들기 문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157쪽)보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며, D광역시 T스포츠센터의 피트니스 클럽 남성 회원 중 8명을 선정하여 서술관찰, 집중관찰, 선별관찰을 실시했다. 이후 개인별로 1회에 걸쳐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뷰이들은 “자신의 몸을 이성에게 관심과 인기를 얻는 수단, 자신을 표현하는 형식이자 타인과의 차별성을 형성하는 구별 짓기의 기제”이자, “자기 통제력과 성실함을 나타내는 기호 가치로 인식”(155쪽)하고 있었다. 더하여 인터뷰이들의 ‘몸만들기 문화’는 1) “TV에서 보여지는 연예인의 몸매를 욕망”(161쪽)하는 응시의 지배에 따른 몸만들기, 2)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오는 긍정적인 반응”(162쪽)에 의한 상호작용을 통한 몸만들기, 3) ‘좋은 몸’을 개인의 노력을 나타내는 결과물이자 자기관리의 성공 지표로 활용하는 개인의 정체성에 따른 몸만들기, 4)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 관련 상품 및 ‘좋은 몸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소비 자본주의 생산체계로서의 몸만들기 문화로 구분할 수 있었다.

(2) ‘청년’ 담론을 분석하는 연구

‘청년’에 관련한 담론연구는 ‘청년’을 규정하는 ‘세대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혹은 담론이 구성되는 방식이나, 담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도 있다.

김수미(2016)는 1990년대 후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 국면에서 등장한 공적 담론을 살핌으로써 특정 국면에서 담론이 생성되고 조직되는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연구자는 당시 언론 보도를 분석하면서 사회/역사적인 맥락이 변화하는 국면에서 새로운 시민상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살핀다. IMF 이후 신자유주의 담론이 득세하고 담론이 새로운 제도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에 언론 보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지적한 연구자는 이 국면이 현재의 청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언론은 자원봉사를 미래를 위한 경력 투자의 관점에서 ‘유용성’과 연결시킨다. 이때 자원봉사를 포기하는 개인은 자기계발을 포기한 개인이 되므로, 개인에게 이는 무거운 짐이 된다. 하지만 연구자는 담론과 제도를 매끄럽게 연결하려는 시도가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담론이 재해석되거나 대안적 방식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다.

새로운 담론이 등장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신자유주의’는 대부분의 담론 연구에 등장한다. 김홍중(2015)은 ‘청년세대’의 특성을 신자유주의의 등장이라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의 득세로 청년이 담지하고자 하는 주체성은 ‘영웅’에서 ‘생존’으로 변화했다. 연구자는 변화한 사회상을 ‘생존주의’로 명명하며 생존주의가 청년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먼저, 연구자는 만하임의 ‘세대의식’이 강조하는 세대의식의 전제 조건인 공통의 ‘의식’과 ‘행위’를 공통의 ‘마음가짐’으로 전환하여 ‘마음의 레짐’을 제시한다. 이때 ‘마음’은 역사적/사회적 구성물이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독존주의’다. 독존주의는 ‘생존’이 사회 목표가 되는 현실에서 생존 문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가짐 중 하나다. “절대적 생존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계급의 청년들이 생존경쟁의 괴로움과 처절함을 회피하여 구성한 자족적/자기중심적/비사회적인 ‘자유주의적’ 삶의 형식”(198쪽)으로, “생존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인화된 자율적 삶을 확보하고자”(199쪽) 한다. 둘째는 생존주의적 삶의 형식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다양한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마음가짐인 ‘공존주의’다. 이 유형의 청년들은 사회/정치적 시스템을 향한 ‘분노’와 배제된 자를 향한 ‘공감’을 자원으로 대안을 모색하지만, “전망 없음”에 대한 폐색감과 생존문제 앞의 불안함”(200쪽)도 함께 담지하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자기계발 논

리 하에서 대안 운동을 이끌어내는 양면적인 감정의 레짐이다. 셋째는 생존의 압력에 의해 ‘마음의 부서짐’이 나타난 ‘탈존주의’다. 이 유형은 “생존주의로부터의 과격한 이탈의 운동”이며,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사라지는 口것’을 꿈꾸는 마음의 지향”(200쪽)이다. ‘무력감’ 및 ‘우울’로부터 추동하는 탈존주의는 “개인적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나 병리적 증상(자살, 우울, 정신장애, 절망)의 형태로 표출될 때 비로소 가시화”(200쪽) 된다.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요 담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담론이 지배적이라는 이유로 모든 청년을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수동적인 동질적 주체로 상정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이기형(2010)의 연구는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이루어진 세대와 세대를 매개로 하는 주요한 분석 작업들을 비판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이러한 세대를 화두 혹은 주요한 분석적인 단위나 매개로 삼는 작업들이 가지는 함의와 한계들을”(138-139쪽) 논한다.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지난 20여 년간 대중문화와 언론 그리고 공적영역에서 부상한 세대 관련 논의들이 발휘한 주요한 담론작용에 대한 정리를 시도”(139쪽) 한다.

연구자는 먼저 1990년대 초반에 나타난 “신세대 현상”과 문화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2000년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분출한 이른바 ‘촛불세대’ 담론을 분석한다. 신세대 담론이 서구화, 탈전통화한 청년세대의 감정구조에 주목한 담론이었다면, 2000년대 등장한 담론들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사회운동과 정보테크놀로지의 유기적인 결합을 매개로 한 또 다른 양태의 주체들의 자기조직화와 더불어 세대의 정치학을 제기한 주요한 사건이자 사례”(153쪽) 였다. 신세대 담론이 새로운 놀이문화와 문화적 축제가 감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면, 촛불주체 담론은 ‘효순이·미선이 사건’, ‘탄핵반대 집회’, ‘반FTA 집회’ 등으로 촉발된 사회운동과 정치적 영역이 접합된 담론이었다. 무엇보다 신세대 담론을 거치면서 청년세대의 ‘탈정치’ 논의가 나오던 시기라는 점에서 사회/정치 담론이었던 ‘촛불주체’ 담론은 “충격과 놀라움을 선사했다”(151-154쪽). 이러한 촛불소녀(세대) 담론은 이후 민경배(2008)에 의해 ‘386 주니어 세대’로 명명되기도 하지만, 이는 촛불세대의 “매우 복합적이며 다수의 이질적이고 지향점이 다른 주체들로 중층적으로 형성”된 지점을 보지 못한 “다소 확대된 과잉해석의 한 갈래”(159쪽)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세대담론을 사회문화적으로 동시에 일정한 역사성을 포함하는 수준

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고려들이 구체화”(164쪽)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세대담론의 정의와 개념적인 정합성 그리고 이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귀납적이거나 경험적인 차원의 자료들”과 이 자료들에 대한 “세밀한 사례연구와 해석.” 둘째, “세대 내의 차이들을 무시하거나 세대의 구성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체험과 의식 혹은 동질성을 단일한 단위가자 응집된 주체로 과도하게 혹은 자의적인 방식으로 설정하는 문제.” 셋째, “단위와 차원을 세분화시켜 대중적인 영역, 매체, 사회운동과 공공영역, 미학과 대중예술 분야와 같은 특정영역에서의 적용·활용될 수 있는 중간 범위 차원의 세대개념과 사례연구들.” 넷째, “방법론 혹은 접근방식의 차원에서 세대의 특징과 문화를 조명”하기 위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이나 서베이 방식을 이용한 실증적인 분석”과 “심층면접, 포커스그룹 등의 질적인”(164-169쪽) 분석들이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세대를 편의적으로 구분 짓는 신조어의 소개나 기능적인 활용”이 아닌 “풍부한 경험적인 증거와 분석적인 통찰성을 제공하는 작업”(170쪽)으로 세대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강조한다.

박재홍(2009)도 세대담론의 남용을 경계하며, ‘88만원세대’론과 촛불집회로부터 촉발된 세대담론의 세대명칭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세대별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세대담론이 담지하고 있지 않은 세대갈등/경쟁의 실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세대명칭을 구성하는 기준은 크게 1) 역사적 경험 2) 나이 혹은 생애주기 단계 3) 문화적, 행태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세 가지 중 어떤 기준이 사용될지는 생산자가 “임의적인 구획 짓기를 통해 그 세대의 내부인을 외부인들로부터 분리하여 내부인에게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달렸다. 하지만, 생산자의 임의적 구획 때문에 “1) 세대를 출생시기 어느 시점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세대 구분 문제, 2) 그 세대를 무어라 부를까라는 세대 명칭 부여의 문제”(22쪽)가 발생한다. 또한, 임의적으로 구성된 세대 담론 중 대부분은 세대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앞 세대의 일자리 선점은 변수가 아니라 인구구성비상 상수적인 조건이다. ‘88만원세대’에서 제기하는 ‘기성세대의 일자리 선점’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빈곤화’는 빈곤 문제가 세대 간 경쟁의 문제이기 전에 계급 문제라는 사실을 가린다.

전상진(2010)도 박재홍(2009)과 비슷한 맥락에서 독일의 세대 논쟁을 검토하여 ‘88만원 세대’론과 같은 세대론이 주장하는 ‘세대경쟁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이

타당한지를 따진다. 세대투쟁론이 “‘탐욕스러운 노인네’들이 자신들의 수적 우세에 기초해 권력을 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시켜 젊은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회복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세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세대를 일컫는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투쟁론처럼 세대의식에 기반하여 정치적 활동을 하기보다는 인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다. 연구자는 세대투쟁론의 경우 고령인구를 나이라는 연령기준으로만 파악하여 고령 세대 내 이질성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사회 보장제도가 경감해주는 자녀세대의 부담은 계산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해 연구자는 ‘반혁명적 세대’로 설명할 수 있는 독일 청년세대의 탈영웅적 성격으로 인해 P세대 운동이 정치적 운동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비판한다. 두 세대론이 한국 세대담론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세대투쟁론과 같은 세대경쟁 담론은 즉자적인 세대의식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강한 세대의식은 되려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도구화되고, 그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영웅의식을 강조하는 세대론은 문제 당사자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의 접근 또한 막는다.

신임선(2016)은 ‘88만원세대’ 담론 이후 등장한 청년 보수화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연구자는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 언론에서 청년 보수화 담론이 활용되는 사례를 검토하고, 청년들을 심층 면접하여 보수화 담론이 타당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청년세대 보수화 담론은 특정 언론사의 정치적 이념이 반영된 “잘못된 구도에서 출발한 프레이밍화된 논리”(59쪽)였다. 학계에서조차 ‘좌우 이념’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으며, 언론사는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념을 측정했다. 면접 결과도 청년의 보수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보수화 담론이 사회 전반에 퍼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언론은 정치적 위기상황 때마다 20대 청년세대를 보수화되었다 칭하며 부정적인 기사를 생성”(60쪽)한다. 둘째, “보수언론은 20대의 안보의식이 높아진 것과 북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것이라는 근거 하나만을 가지고 20대가 보수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보수화 담론이 위와 같은 언론의 프레이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위와 같은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박영정(2015)은 ‘청년’ 개념의 재구성 및 그에 기반한 정책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연구자는 기존의 정책을 분석한

뒤 9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청년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에 따라 연령을 유연하게 설정하거나, 정책 대상을 구체화해야 하여 정책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청년문화정책포럼(네트워크)을 구성해야 한다. 당사자 중심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여 정책과 대상 간의 괴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정책의 홍보 및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 향유를 사적인 경험에서 공적인 경험으로 확장하여 사회관계망을 확충하고, 사회의 건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청년이 문화생활에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를 도입하여 문화세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 관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신설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여섯째, 문화 분야 취업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문화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여덟째, 청년이 당면한 문제를 ‘청년실업’에서 ‘청년 빈곤’으로 전환하여 청년의 문제를 ‘일자리’에 한정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일자리, 문화, 주거 등의 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벽 없는 일자리 및 문화여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홉째, 세대 간 이해와 협업을 통해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이기형(2011)은 세대연구의 한계를 방법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는 엄기호(2010)의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에 대한 리뷰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총 11명의 대학생으로부터 받은 리뷰 혹은 자기기술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주요한 청년세대 관련 담론인 ‘88만원세대’론에 관한 논의들을 가져와서 기존의 세대담론과는 일정하게 단면들을 제시하고자 한다”(272쪽). 연구자가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로, 그것이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의 기존 (세대)연구방법이 아닌 “대학인들의 내밀한 목소리 그리고 경험을 가까운 거리에서 경청하고 ‘동행’”(277쪽)한 작업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기존의 세대 담론 작업은 주로 “거시적인 차원의 관찰이나 징후적인 해석 혹은 메타비평의 형식을 채용하는 문화분석이나 인상기적인 기술”을 사용했지만, 엄기호의 책은 대학생들과 더욱 밀착된 환경에서 청년들의 경험과 사연들을 엮어서 “제기된 문제와 질문들에 대해 연구자(엄기호)가 화답”하는 양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는 ‘지금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라는 글을 썼던 김예슬(2010)에 대해서 다룬다. 기존 사회의 틀을 거부한 청

년의 결단에 고무되었던 기성세대와 언론의 반응과 달리, 청년들은 김예슬의 선언을 매우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예슬의 ‘거부’가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트’ 대학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김예슬처럼 대학을 ‘거부’하지 못하는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285쪽). “열심히 공부하고 삶을 꾸려가는 자신과 같은 존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287쪽)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기형은 <이것은 왜 청년이 아닌 말인가>와 그에 대한 리뷰를 접하면서 “현재의 청년세대와 필자도 속한 기성세대 간의 매우 큰 - 어쩌면 매우 기가 매우 어려운 - 간극과 벽을 절감”(288쪽)한다.

‘청년’ 담론을 젠더화함으로써 현재의 ‘청년’ 담론을 재구성하려는 노력도 있다. 배은경(2015)은 청년세대 담론이 남성성을 중심으로 몰젠더화된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청년세대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이미 해체/탈규범화되고 있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기반인 정상가족 및 가부장제도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유연성 아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실질적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영역에서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남성은 이에 대한 보충물로 친밀성까지 요구받는다. “가장 혹은 가부장으로서의 남성성 체현이 현실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젊은 남성들은 본인의 남성성을 인정받고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찾기 힘들어”(30쪽)한다. 남녀 대립 구도 및 혐오의 강화는 기존의 젠더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파열의 결과다. 연구자는 시효가 끝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남성성을 구성하여 청년세대 담론을 새롭게 젠더화할 것을 제안한다. 세대담론을 남성성을 중심으로 재배치하려는 노력은 담론에 여성성을 끼워 넣으려 했던 이전 연구들과 구별된다. 연구자는 담론에 여성을 끼워 넣는 방식이 오히려 여성을 세대 담론에 통합시키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그저 ‘여성들’의 문제”(21쪽)로 분리시켰다고 말한다. 연구자는 청년세대 연구에 여성의 현실을 끼워 넣어 남녀(여남) 비교 혹은 남녀(여남) 대립적인 프레임을 재생산하기보다는 담론을 ‘남성성’의 문제들로 접근함으로써 세대 담론을 새롭게 젠더화할 것을 제안한다.

(3) 청년세대 관련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

텍스트 분석 연구는 크게 TV 텍스트, 소설 텍스트, 웹 텍스트로 나눌 수 있다.

TV 텍스트를 다루는 연구로서 이다혜, 류용재(2016)는 쿡방과 집방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 청년세대의 음식과 주거를 둘러싼 소비문화를 어떻게 재현, 매개, 재구성하는지”(181쪽)를 분석한다. ‘쿡방’은 일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집방’은 집을 살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발생하는 허기를 인테리어로 충족하려는 욕구로 인해 등장한 포맷인 만큼, 연구자는 두 방송 포에서 청년 여가문화의 문화정치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쿡방과 집방을 즐겨보는 20대와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연구자는 인터뷰이들이 자신과 방송 간의 괴리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괴리에 대처하는 양상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30대는 “청년세대의 포기 현상에 대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반면, 20대는 주로 자신이 감내하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인식”(209쪽)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신자유주의 담론에 노출된 20대가 자신이 처한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풀기보다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치환하는 ‘탈정치화’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이때 TV 프로그램은 ‘위로’와 ‘삶의 변화’를 전면에 내걸면서 청년의 욕구를 자극하여 청년을 수동적인 소비자로 머물게끔 한다.

유수미(2016)는 청년세대가 직접 겪은 사연으로 진행되는 토크쇼인 <마녀사냥>과 <비정상회담>을 분석해 “청년세대의 감정담론과 그들의 주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12쪽)한다. 두 프로그램의 사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청년세대의 감정은 “불안, 분노, 서운함/슬픔, 수치/죄책감, 희망, 두려움, 좌절감”(29쪽)이며, 그중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감”이 두 프로그램의 사연을 관통하는 가장 커다란 감정이다.

연구는 프로그램 안에서 나타나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마녀사냥>과 <비정상회담>이 제시한 전체 사연을 관통하는 핵심 감정”인 불안은 “사회적, 관계적,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적인 불안은 “경제, 사회, 정치적인 사건 및 사고,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30쪽)된 불안이며, 관계적인 불안은 “연인과의 연애관계, 친구 및 동료와의 교우관계, 부모님과의 관계”(32쪽)에서 드러나는 불안이다. 관계적인 불안은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개인이 사적 관계에 더욱 의존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불안은 “스스로의 미래와, 현재의 위치에 대한 불안”(32쪽)이다. 둘째, “두 프로그램이 사연을 다루는 방식은 시청자 사연

에 대한 해석, 파생된 주제에 대한 토론, 사연의 결론 및 해결책 제시의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시청자 사연의 경험과 감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되며 “모든 선택과 책임은 다시 개인의 몫”으로 남겨진다. 셋째, 방송을 통해서 구성된 “감정 담론은 사사화된 불안/공포가 내사화, 외사화되는 과정을 통해 세 유형의 주체”를 구축하는데 1) 현실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적극적 순응주체, 2) 불안과 공포를 내사화하여 현실에 순응하지만, 타인에게 의존하는 소극적 순응주체, 3)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에 반발하여 자기 계발보다는 즉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극적 저항주체가 그것이다. 연구자는 <마녀사냥>과 <비정상회담>은 청년의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신자유주의적 사회에 순응하는 주체로 만들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성”(57쪽)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박찬주(2016)는 기존의 청년세대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미생>을 시청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연구를 실시했다. 기존의 '청년' 담론은 첫째, 청년이 “당면한 사회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며, 둘째, 청년을 “무기력하고 탈정치적인 주체로 구성”하며, 셋째, 청년이 아니라 주로 “기성세대들에 의해서 논의”되어져 왔으며, 넷째, “세대 내에 존재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무시함으로써 일반화의 오류”(7-10쪽)를 범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 결과, 인터뷰이들은 <미생>을 시청하면서, ‘정서적 리얼리즘’과 ‘경험적 리얼리즘’을 중요한 요소로 느끼고 있었다. 두 감정의 조합에 따라 “청년수용자들의 해석적 위치는 크게 ‘공감영역(높은 정서적 리얼리즘, 높은 경험적 리얼리즘)’, ‘동경영역(높은 정서적 리얼리즘, 낮은 정서적 리얼리즘)’, ‘관찰영역(낮은 정서적 리얼리즘, 높은 경험적 리얼리즘)’, ‘냉소영역(낮은 정서적 리얼리즘, 낮은 경험적 리얼리즘)’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은 드라마 내용에 대해 공감함과 동시에 공감을 “사회적 문제들 혹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연결시켜 이해”(32쪽)하기도 했다.

기존의 자기계발서가 주는 공감과 위로는 “현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기성세대가 주는 공감/위로였다면, 드라마 <미생>은 현 세대의 상황과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공감/위로”라고 수용자는 느끼고 있었다. 감정구조를 통해 연구자는 인터뷰이들이 <미생>을 보고 생산한 노동현실에 관한 의미들을 살펴본다. 수용자는 자신의 경험을 ‘노동의 주체’, ‘한국형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구조’, ‘노동현장의 문화’, ‘한국사회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가치에 대한 부

분' 등으로 세분화시켜 드라마 <미생>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 지었다(46쪽). '노동의 주체'로서 청년은 주로 '버틴다'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미생>을 연결했으며, '부품', '자원'과 같은 단어들로 <미생>의 인물과 자신을 규정했다(51쪽). 이는 "청년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보다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수용자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수용자가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드라마 수용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에 일정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판타지적 요소로부터 '새로운 대안'을 상상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분석을 마무리한다.

소설 텍스트 분석은 소설 속에서 청년이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에 천착한다. 소영현(2012)은 한국 현대소설에 등장하는 청년들을 통해 '청년'과 한국사회를 다섯 가지 특성으로 파악한다. 첫째, 21세기 사회가 속물화됐으며 청년은 원자화되었다. "글로벌리즘이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청년들은 자유로운 개별자가 아니라 자기 계발해야 하는 고립된 주체로 파편화"(390쪽)된다. 둘째, 집합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청년이 사회적으로 타자화된다. 셋째, "사회적 일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의 욕망으로 포착되었다"(400쪽). 넷째, 체제비판을 위한 저항의 형태로 '자기파괴'를 실행한다. 연구자는 소설 속 청년들이 "무차별적인 '폭력-인형'이 되어 있음을 전하는 한편, 진보와 성공의 논리를 거부함으로써 자발적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자"(405쪽)하지만, 이러한 자기파괴 혹은 성찰도 철저하게 "개별적 차원에서 경험"(406쪽)된다고 지적한다. 다섯째, 소설 속 청년들은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혹은 연대를 통해서 생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연구자는 조우와 연대 경험에서부터 "청년과 한국사회의 문제적 지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오혜진(2013)은 '신자유주의 구조'(지젝)와 '성과주체'(한병철)의 양상이 최근 소설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전석순의 <철수사용설명서>, 강희진의 <유령>, 장강명의 <표백>을 분석한다. 먼저, 전석순의 <철수사용설명서>는 이 시대 청년들이 제품으로 취급받는 현실을 풍자한다. 개인을 계량화하고, 계량화된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유 또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기면서 과도한 노동"(470쪽)을 일상화한다. 강희진의 <유령>에는 탈북자 청년 '하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철수사용설명서>가 성과주체로서 자기착취를 지적한다면, <유령>

은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성과주체로 진입하는 것조차 장벽인 철저한 배제”를 묘사한다. 장강명의 <표백>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존재들을 등장시킨다. 어떤 모순도 해결되지 않지만,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분노가 쌓이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이들 세대가 사회에 느끼는 절망과 환멸과 위기가 절절하게 드러”(480쪽)난다. 주인공들은 출세나 개인적 성공과 같은 작은 일에 매달리거나, 극단적 저항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연구자는 소설 속 인물들이 ‘순응, 좌절, 포기, 반항, 분노’ 등 성과주체의 역반응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이정화(2016)는 한국이 아닌 일본 소설 속 청년을 분석한다. 일본은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경제 위기를 비정규직 고용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은 프리터를 생산했고, 정규직 진입을 원하는 청년들을 NEET(니트족)로 만들었다. 불안정 고용상태로 내몰린 청년은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연구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카리아트 소설을 분석하여 소설 속에 나타난 ‘청년’ 담론을 ‘자기책임론’과 ‘사회구조 문제론’의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했다. 버블 경제의 절정기에 쓰인 소설이 청년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와중에 두 가지 관점에서 쓰인 소설은 일본 청년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일본 청년은 소설 속 노동환경이 “자신이 처해있는 노동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공감”(74쪽)을 얻는다. 이 공감은 일본 청년들이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로 작동하며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책임론’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를 그치”(74쪽)기 바라는 프레카리아트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웹의 발전과 더불어 웹의 즉각성을 특징으로 하는 웹툰이 새로운 텍스트로 등장했다. 이승연(2013)은 웹툰을 대상으로 서사 분석을 진행하여 웹툰이 청년세대를 재현하는 방식을 살핀다. <당신과 당신의 도서관>, <목욕의 신>, <무한동력>, <미생> 등 네 웹툰은 모두 일자리 불안정과 그로 인한 청년 빈곤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웹툰은 다른 텍스트 혹은 담론보다 “사회구조적 원인을 시정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개개인이 상황을 모면할 뿐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63쪽)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결말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겨진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웹툰은 “개인과 국가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개인의 노력과 함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강

조”(65쪽)한다. 또한, 웹툰은 웹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수용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며, 이 소통이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자는 “청년세대가 그들과 그들이 가지는 문제를 재현하고 있는 웹툰”(69쪽)을 읽는 행위가 “단순한 공감과 리얼리즘의 수용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것에 문화 공론장의 위치를 부여”(69쪽)하는 행위라고 평가한다.

이승연(2013)이 웹툰에서 청년이 재현되는 방식에 주목했다면, 구자준(2015)은 웹의 특성을 중심으로 웹툰의 기능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전지구적인 동의를 얻고 난 후 대학사회도 그에 발맞춰 탈정치화하면서 대학이 주류 미디어에 재현되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지적한다. 대학은 이제 취업 학교로서의 위치에 머문다. 그와 동시에 대학 구성원인 대학생에 대한 묘사는 이제 대학이 수행하지 않는다. 대학을 대신하여 ‘88만원세대’와 같은 세대 담론이 청년을 대신 묘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류 미디어가 대학을 재현하지 않는 사이에 웹툰은 ‘즉각적인’ 상호작용성에 기반하여 대학사회를 활발하게 재현하고 있었다. 웹의 각종 커뮤니티에서 재현되는 대학에 관한 풍자와 하소연은 웹툰이 담론의 중재자이자 재생산자로 작동하면서 일종의 포레 집단의 서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즉각성과 공감에 의해 웹툰은 “대학사회를 체험하면서 형성된 청년세대의 심상을 ‘실감 나게’ 반영”한다.

3. 청년연구 비판 혹은 청년연구의 빈틈

이 장에서는 앞의 2장에서 소개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청년연구들을 몇 가지 관점을 통해 다시 정리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에 진행되어 온 분야별 청년연구의 경향들이 내포하고 있는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였을 때는 보이지 않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찾아보기 위한 방법이다. 다른 관점의 시각에서 청년연구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기존 연구들에서 결여되어 있었던 빈틈을 찾아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크게 분석범주의 측면, 방법론의 측면, 연구자의 성찰성의 측면에서 청년연구를 다시 되돌아보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큰 틀에서는 세대연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세대연구의 문제적인 경향들 - 단일한 세대의 가정, 세대의 실재성에 대한 검증 부재, 세대연구 스스로의 성찰성 부족 - 과도 집점을 갖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Cf. 김선기, 2014).

우선, 분석범주의 문제는 ‘청년’에 관한 연구라는 것을 선언하는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연구하는 대상인 ‘청년’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대부분의 청년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서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인지, 즉 연령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자르는지에 따라서만 연구자들의 이해가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의 연구가 ‘청년’을 연령/출생 코호트로서의 청년으로 보고 있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식의 한계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해는 첫째, 같은 연령이기만 하면 청년들이 비슷한 성향을 갖거나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식으로 논의함으로써 청년 외의 계급, 젠더, 신분, 정치 성향, 개인차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할 청년들의 삶을 동질적인 것으로 묶어버린다는 점에서, 둘째, ‘청년’이라는 기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가 단지 연령상의 젊은 층에만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간과해버린다는 점에서, 셋째, 현재의 20대/30대에 관한 논의로 ‘청년’ 논의를 치환함으로써 오늘의 젊은 층이 처한 현실의 원인을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찾기보다는 젊은 층의 인구 개개인에게 내재해 있는 문제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기존 청년연구에 대한 비판점을 바탕으로 이후의 청년연구가 분석범주의 측면에서 ‘청년’이라는 연구대상의 내적 이질성, 그리고 역사성을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특히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 청년(세대)의 문제와 여성(젠더)의 문제가 어떻게 교차(intersect)하는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절로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청년’이라는 기표에 전제되어 있는 몰젠더적인 성격 혹은 남성 청년 중심적인 성격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것을 젠더화시켜 연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 관해 고민해 볼 것이다.

방법론의 문제는 청년연구라는 분야가 아직까지 전문적인 연구영역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청년연구라고 지칭해 온 어떤 연구들은 사실 청년연구라는 명사로 서술하지 않고 ‘청년에 관한 연구’라고 풀어써 설명하여야 더욱 적당한 연구들이었다. 기존의 청년연구 대부분은 다양한 학문 분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구경향에 ‘청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대상이 들어오는 식으로 진행된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양적/통계적 연구방법이 소위 ‘대세’인 분과학문 안에서 진행된 연구들(특히 노동, 일자리 관련 연구들)은 ‘청년’이 연구의 소재가 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연구방법에 치중된 연구가 진행되었고, 반대로 문화와 같이 질적 연구방법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온 분야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청년’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는 방법적 패러다임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는 조금 더 전문적인 청년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라도 방법론적 영토주의에서 벗어나 청년연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 면의 실험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성찰성 측면에서 당사자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청년연구는 그동안 ‘청년’이 특정한 연령/출생 코호트로 이해되어왔던 만큼 특정한 연령의 인구에 대한 연구라고 여겨져 왔는데,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당사자성의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여성이라는 삶의 조건에서 쌓이는 억압의 경험과 생겨나는 문제의식을 여성이 아닌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청년’의 문제를 대부분 당사자로서 청년이 아닌 기성의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것이다.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러나 청년 당사자가 ‘청년’을 연구한다고 해도 그 당사자-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성의 것이라면 당사자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비당사자-연구자보다 당사자-연구자가 ‘청년’ 문제에 대한 조금 더 정합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확률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판

단을 유지하지만, ‘청년’ 당사자-연구자들이 기성의 시선에서 단절하고 ‘청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성찰적인 당사자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제기하는 청년연구 비판의 지점들을 바탕으로 청년연구의 빈틈을 어떻게 메우면서, 더 나은 혹은 더 다양한 청년연구의 문제의식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연구자들 스스로에게서도, 또한 독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랐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행한 메타연구의 결과로서 청년연구를 경향적으로 비판하는 이 장의 내용이 조금 원론적인 측면도 있다. 연구대상의 성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연구방법을 연구주제에 맞게 잘 설정하는 것, 연구자가 연구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성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꼭 청년연구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회과학/인문학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일정한 기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청년연구에 대한 비판이나 빈틈 찾기가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청년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의 징후일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가 검토했던 216건의 청년연구들이 모두 같은 비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몇몇 연구들은 우리가 지적하려고 했던 청년연구의 빈틈을 이미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들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의 각 절에서 함께 읽고 생각해보면 좋은 청년연구의 사례로 제시하면서 논의하였다.

1) 젠더 관점의 결여

청년연구에 있어 젠더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청년/세대’ 내부의 구체적인 이질성 그리고 각각의 개별성/특이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 연구의 전반적 제언과 동일한 인식선상에 존재한다. ‘젠더’는 이러한 ‘이질성’ 중에서도 청년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자, 90년대 이후 근대적 성역할의 틀이 급속하게 붕괴 및 변화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향후 연구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의성을 지닐 만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청년연구를 비판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중에서도 ‘젠

더'를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적인 파트로 분리시켜 논의하였다.

'청년'과 관련된 많은 수의 선행연구들이 보여주는 한계점 중 하나는 청년세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젠더'의 차이에 직접 주목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차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술했듯이, 연구진들은 본문 작성을 위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 연구를 위해 조사한 자료들 중 '젠더'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조사하였다. 청년세대가 직면한 고용과 노동, 주거, 빈곤과 같은 현실적 문제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 및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젠더 관점' 변수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포괄하였다. 청년세대가 직면하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와 실태에 대해, (1) '연구문제 설정'에 있어 젠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2) '연구대상 선정'과 '연구방법 실행' 과정에서 청년세대 내부 이질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젠더(또는, 성차)를 본격적으로 주목하였는가? (3) '연구 결과 해석' 과정에서 각 청년들이 갖거나 발휘하는 젠더적 차이들을 주목하며, 이에 대해 충분한 비중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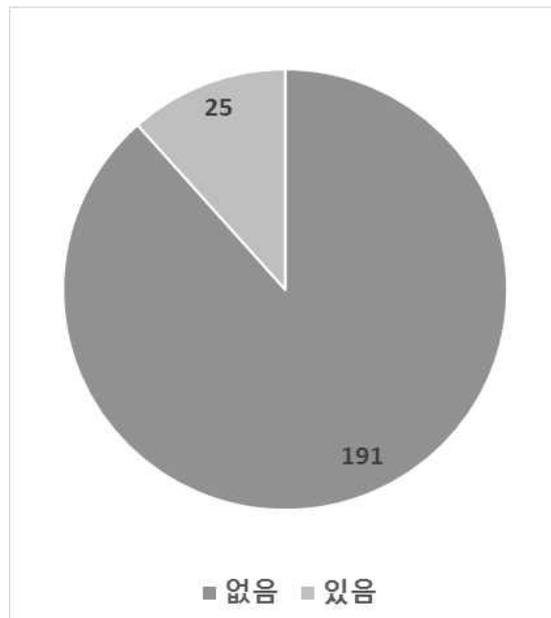


그림 2. 분석대상 연구들의 젠더적 관점 포함 여부

위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216편의 선행연구 중 젠더에 관련된 논의를 부

분석 또는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연구가 전체의 약 11%(25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년세대 연구들이 젠더의식을 상당 부분 결핍하고 있다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제기하게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인 청년연구 속 ‘성별의 표면적인 범주화’이다. 둘째는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결여된 젠더의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표상 자체의 남성중심성’이다.

(1) 청년연구 속 성별의 표면적 범주화

성별의 표면적 범주화는 특히 기술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청년연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연구 질료상의 특성이다. ‘청년’을 소재로 한 많은 연구들 중 기술통계를 중심 자료로 사용하는 양적 연구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구대상인 ‘청년’을 출생 시기나 연령에 따라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일정한 코호트로 구분하는 동시에, 각 연구의 주요 목적에 따라 하부 요인들을 소득, 지역,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사회적 특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성별’ 역시 청년들을 구분하는 범주로서 연구의 요인이나 변수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생물학적 성(sex)이 사회적 성(gender)로 완벽하게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단순한 분류는 근본적으로는 청년세대 내부의 젠더관계를 세밀하게 주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주목하는 청년들의 ‘노동’이나 ‘빈곤’과 같은 큰 주제에서, 피라미드의 가장 하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이 ‘비정규직’ 또는 ‘저학력’의 계급적 범주와 결합된 ‘여성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명시적으로나마 성차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성별 범주는 청년세대 각 개인들이 처한 다른 현실들을 포착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의 통계자료에 청년세대의 성별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에 주목하는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예컨대 ‘일자리’ 주제와 관련된 청년연구에 있어, 많은 연구들이 동일한 학력수준일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취업률이 높다는 통계 결과나(한성민 외, 2016),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취업률이 월등히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이선민, 2016). 심지어 취업 후 이직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이직’을 당할 확률이 약 50%가량 높다는 사실은(성지미, 안주엽, 2016), 취업 및 취업 이후의 노동시장에서 청년 여성이 차별받기 쉬운

‘구조’ 속에 있다는 현실을 부각시킨다. 청년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 취업, 임금, 실업, 취업 후 종사상 지위와 같은 다양한 지표들에 걸쳐서 특정한 (성)계급에게 불평등한 결과가 일관되게 드러난다면, 이것은 범주 내부의 이질성을 반증하는 요인이자 청년을 단일한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청년’을 다루는 연구 차원에서도 연구문제 설정이나 해석에 있어 젠더 문제를 고려 사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김현아, 2015).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차와 관련된 내용이 연구 분석 결과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현재의 청년연구의 전반적 지형에 주요한 비판점을 제공한다. 선행연구 중의 일부는 성별 간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를 유의한 것으로 다루지 않거나 기각했으며, 일부는 ‘미취업/빈곤’ 청년층의 하부적 범주로만 여성을 다루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결여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자의 해석 과정에서는 - 예컨대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상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서술에 그치는 등 - 노동시장 안에서 성별 측면을 미약하게 서술하는 다소 기계적인 해석들이 주로 나타났다(강순희, 2014). 이러한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권력 또는 구조상의 문제를 성별 간의 자연스러운 차이로 환원시키는 오류 역시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한편으로는 논문의 주제로 ‘청년 여성’을 다루고 있음에도, 청년 여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자체를 언급하지 않거나 젠더에 대한 충분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질적으로 보완되지 못한 연구사례도 존재했다.

(2) 일반명사 ‘청년’의 남성중심성

선행연구 분석에서 도출된 위와 같은 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청년’ 담론 자체의 ‘남성 중심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주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포괄한 청년연구 전반에서 고르게 드러나는 내용상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학술연구나 정책연구를 넘어서 문학/예술/비평을 포괄한 ‘청년’/세대 담론 전반에서 일정하게 관찰되는 일반적 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검토는 청년연구 내부의 젠더 관점 부족 현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원인 진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청년연구가 은연중 상정하는 ‘청년’ 주체, ‘청년’ 범주가 많은 경우 성별/젠더의 차원에서 몰젠더적인 특성을 띠고 있거나 ‘남성’을 디폴트로 두고 있다는 혐의에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다. 사회학자 배은경이 지적했듯이, 청년세대의 현실을 주목하는 적지 않은 연구들은 청년들이 직면한 위기의 근원을 “근대적 젠더관계에 기반한” “현대 사회의 표준화된 남성(중심적) 생애달성의 어려움”으로부터 찾고 있다(배은경, 2015, 16쪽).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이 외환위기 이후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노동과 고용체계가 유연화되면서, 학교(교육)-(분가)-노동시장 진입(취업)-분가(내 집 마련)-결혼-출산으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정상적인 생애과정 이행이 점차 탈표준화의 압박을 받는 현상들을 주목해 왔다(김혜경, 이순미, 2012; Blossfeld et al, 2005). 현재의 청년세대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담론인 ‘3포’, ‘5포’, ‘7포 세대’에 대한 논의 역시, 더 이상 ‘취업하기 어렵고,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연애도 결혼도 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청년세대가 비/자발적으로 규범화된 생애과정을 단념하거나 지연하면서 구성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⁵⁾

또한, 이러한 배경은 탈/재표준화되는 생애과정 속에서 청년들에게 (예컨대 남성의 임금노동과 여성의 육아·가사노동으로 구분되는) ‘근대적 젠더 분업’에 따른 성역할과 보상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청년연구의 초점이 각 젠더의 차이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본적으로 1인 가정을 홀로 부양하거나 혼인에 필요한 주거비용을 전담하기 어려워진 현실이 전통적 성역할을 기대받던 ‘남성’의 위기다. 반면, 이러한 위기에 따른 분노 및 혐오감정을 투사 받는 한편 맞벌이와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부담해야 하는 ‘알파걸’의 현실 등은 ‘여성’의 위기로 현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젠더의 차이에 크게 주목하지 않거나 뭉뚱그려진 ‘청년’ 일반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어 구체적 현실들을 포착하지 못해 온 측면이 있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연구주체의 차원에서 전자의 위기가 몰

5) 한편 정민우와 이나영(2011)은 이처럼 가족-이성애-재생산 제도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의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정상적 생애과정’을 다시금 만들어내고자 하는 (재)규범화의 매개이자 근대성·시간·공간을 결합한 개념으로서 ‘규범적 시공간성’을 제안한다. 규범적 시공간성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생애사건 및 생애역할”을 “역사적/지역적 맥락”에 따라 재배치하며, 제도적이고 상징적인 작업들을 통해 젠더와 연령(시간), 공간과 복합적으로 관계 맺으며 강화되는 “담론적 현실”이다. 따라서 근대적 성인기 또는 생애주기의 이행과정이 압박을 받는 현재 한국 사회 청년들의 현실은, 완벽하게 탈표준화 내지는 개인화가 이루어진 세계라기보다는, ‘규범적 시공간성’의 작동과 균열이라는 양가적 원리를 포함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 중의 세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젠더성을 띠며 ‘청년 모두의 위기’로 의미화되는 반면, 후자의 위기는 ‘청년’이 아닌 ‘여성’의 문제로 의미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청년’과 관련된 담론 및 문화적 재현물들로 시선을 확장시켜 본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 언급되는 ‘청년세대의 위기’는 보다 극명하게 ‘남성의 위기’라는 젠더 편향성을 띠며 구성된다. 기존의 표준화된 생애과정 및 개별 청년들에게 기대되던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화 및 위협을 받으면서, “재생산의 위기”에 따라 남성성의 위기는 ‘청년’ 담론이라는 일반명사의 위기로 명명됨과 동시에 젠더간의 수평폭력을 발생시켰다(윤보라, 2013; 천정환, 2016). 예컨대, 취업과 교육상황에서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면서, 군입대로 인해 경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느끼게 된 청년(남성)들의 위기의식은, 2006년의 ‘된장녀’ 담론과 2012년의 ‘김치녀’ 담론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며 2010년대 초반의 주류 담론으로 자리했다.⁶⁾ 2012년 ‘연애 못 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종의 미팅 프로젝트였던 ‘솔로대첩’은 3포세대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가난한 청년 남성들의) 연애 불가능성’이라는 문제의식을 환기시켰다. 반면, 가장 사적으로 보이는 연애관계 속에서조차 여성 청년에 대한 강한 폭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폭로한 ‘데이트 폭력’과 ‘안전 이별’ 담론은 그로부터 3년이나 지난 후에 대두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직면한 청년 남성의 위기는, 소설이나 만화, 드라마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 재현물을 경유하면서 청년세대의 보편적인 표상을 ‘찌질함’, ‘비루함’, (어떠한 정상적 생애과정에 대한) ‘불가능성’과 같은 빈곤/박탈감의 정서와 연결시키는 데 성공한다(천정환, 2016). 문제는 이러한 빈곤과 박탈감의 정서 내부에 다른 성에 대한 착취나 편견이 자연스럽게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청년 일반의 정서’로 사회적 숙고 없이 대표된다는 데 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리벤지 포르노’로 설명되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유희로 삼는 남성의 삶을 묘사한 가사가 ‘슬픈 청년의 현실’을 대표하는 노래로서 특정 정당의 테마송으로 채택되었던 사회적 사건들과, 여성을 신격화하거나 대상화하는 남성이 등장하는 문학작품들이 ‘청년세대의 문제’를 고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한편 작품 내부의 편향적인 젠

6) ‘된장녀’와 ‘김치녀’는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는 여성’부터 ‘투표를 하지 않는 여성(정치 의식이 없는 여성)’, ‘혼인 시의 주거비나 데이트 비용을 공평부담하지 않는 여성’, ‘가사노동을 부담하며 내조하지 않는 여성’, ‘성형하는 여성’, ‘남성의 경제적 조건을 따지는 여성’,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싸게 구는 여성’, ‘외국 남성과 연애 및 결혼하려는 여성’, ‘책임과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여성’ 등의 상상된 청년 여성을 향한 청년 남성들의 산발적인 호명이었으며, 이는 2010년대 중반 ‘여성 혐오’ 담론과 연계되면서 인터넷과 학계를 아울러 많은 영향을 남겼다.

더 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받지 않는 현상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⁷⁾ 남성성의 위기에 따른 현상들이, 청년 남성이라는 특수명사가 아니라 청년세대라는 일반명사의 문제로 표상되는 동시에 청년 여성들의 현실을 일정하게 탈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청년’에 대한 담론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여성의 이야기는 없다.”(류형림, 2015, 5쪽)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청년’ 담론의 효과들은 한편으로는 가정이나 일터,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젠더 간의 차별이나 격차를 일정하게 흡수 및 은폐시키는 작용들과 병행되었다(배은경, 2015). 예컨대 임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대가 없는 노동으로 간주되는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이 사회적 의제로 가시화되지 않는 현상,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에서 대의적으로는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성인기 이행단계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으면서도, 막상 그러한 이유로 노동시장 인력으로 여성이 선호되지 않는 현상, 이들이 성인기 이행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저임금 중심 경력 단절 여성으로 전락하는 현상, 취업시장에서 남성보다 불이익을 겪으면서 훨씬 빈번한 성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현상 등은 많은 경우 ‘젠더’보다는 ‘노동’과 ‘계급’의 문제를 속에서 희석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연구들이 예증하듯이, 성인기 이행의 탈표준화 현상으로 요약되는 청년세대 전 생애의 불안정성은, 사실은 “성/학력별로 가장 약한 고리(저학력 여성 집단)와 결합하며 전개되는 매우 계층적인 현상”(김혜경, 이순미, 2012, 64쪽)이다.

따라서, ‘청년’ 담론 및 청년연구에 있어서 젠더 간의 차이는 반드시 주목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특정한 구조적 문제가 수평적 폭력의 문제로 전가되거나, 연구 주제나 분석의 측면에서 특정 성별의 노동이 지속적으로 비가시화된다면, 실제 청년이 맞부딪치는 현실은 젠더 관계에 따라 자연히 다른 형태로 드러나고 의미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청년연구의 ‘젠더화’를 위하여

이 연구의 사전 분석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청년과 젠더를 결합시킨 소수의 연구들은 노동, 고용, 가족과 같이 각각의 연구가 주목하는 세부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갈래의 논의와 참고가 될 만한 진단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례가 형식상 학술연구가 아니라 요약된 보고서 또는 자유비평의 형태

7) 여성신문 (2016. 04. 05). [정의당 ‘중식이 밴드’ 협약 논란] “한국 진보정당들, 여성주의 성찰하길”, 한국일보 (2016. 09. 16). 한국문단과 여협.

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연구문제와 방법에 따른 심층적인 논의들을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성청년’들의 현실을 다루거나 젠더의식을 결합한 연구들은 특히 다양한 전공 중에서도 주로 여성학 분야의 연구자 혹은 여성정책연구소와 같은 전문기관들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향후 ‘우리’에게 필요할 청년 ‘젠더’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제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문제의식의 차원으로 ‘젠더’ 관점을 끌어올리는 한편,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결과 및 해석의 측면에서 더욱 생산적인 방식으로 보완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개인이 여성/남성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인 ‘젠더’에 주목하고 이를 청년연구에 도입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여성/남성이 되는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청년세대 개개인에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되는지, 다양한 젠더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권력이나 충돌의 문제는 세부적으로 어떠한 담론들을 낳는지, 청년세대가 직면하는 현실인 성인기 이행의 탈표준화/비표준화나 삶의 불안정성과 같은 현상들이 어떠한 젠더규범들을 강화시키고 약화시키는지, 청년세대 스스로는 주체적으로 어떠한 젠더규범을 재/생산하고 파기하는 것인지, 동일한 젠더 속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이질성은 무엇인지, 청년세대라는 이질적 집단 속에서 어떤 문제가 대표로서 의미화되고 어떤 문제가 배제되거나 폐기되는지와 같은 매우 다양한 차원의 논의들이 가능하다. 특히 ‘집’이나 ‘가족’과 같은 ‘공간’, 나아가 ‘여성 집단’ 자체와 같이 기존에 젠더 중립적으로 간주되거나 동일한 범주로 인식되던 표상을 젠더의 영역으로 견인하여 재/개념화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김현아, 2015; 장민지, 2015).

일부 연구에서는 청년연구의 ‘젠더화’를 위해 ‘남성성 논의’라는 주제에 특별히 주목하기도 한다. 예컨대 배은경(2015)은 그동안 청년연구 지형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실천이 기존의 ‘청년’ 담론에 ‘여성 청년의 현실’을 외삽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결국 ‘청년세대 전반의 문제’라기 보다는 ‘여성의 현실’로 인식되면서 남녀 비교/대립 프레임을 재생산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성’의 구성과 수행에도 충분히 주목해야 한다고 논한다. 이는 청년 남성 자체를 기존의 청년 여성처럼 ‘특수명사’의 범주로 구성하고 다양성을 중심으로 다시 드러냄으로써 ‘청년 남성’을 (청년세대 일반이라는) “‘초월적 기표’의 지위에서” 분리하는 동시에 지배적 남성

성을 전복시키는 효과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명호, 2011, 41쪽, 배은경, 2015에서 재인용).

한편 국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천정환은 현재 10~30대 청년 남성 역시 큰 틀에서 보면 “페미니즘 운동의 ‘다른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담론 생산자 주체(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성 논의를 촉구한다(천정환, 2016, 376쪽). 그는 지금의 ‘청년’ 담론 지형 속 젠더 간의 권력과 충돌 문제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청년 남성 스스로가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남성성의 구성과정을 직시하고 해체/재구성하는 ‘주체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남성성 연구’를 포함한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젠더 관점의 회복을 위한 청년연구의 재구성 방향에 일정한 참조점을 부여할 것이다.

2) 분석범주의 단순성

바로 앞의 절에서 논의했던 청년연구에서의 젠더 관점 결여는 큰 틀에서 청년 연구와 연관되어 있는 분석범주의 문제와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다. 대다수의 청년연구에서 ‘청년’이라는 범주는 내적으로 동질적이고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상정되는 경향이 있다. 젠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계급이나 학력, 거주 지역, 정치성향, 결혼관과 같은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 청년들의 삶에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존재한다. 특히 계급 문제와 청년(세대)의 문제를 교차하여 보면, 앞서 젠더 관점의 결여와 마찬가지로 청년 내부의 계급적 이질성에 대해서 간과하는 문제와 ‘청년’이라는 기표를 연구자들이 중산층 계급의 청년들을 중심에 둔 채로 의미화하는 종류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다.

분석범주에 있어서 청년들을 단일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보는 문제는 오늘날의 ‘청년’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지점과 결합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대상인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학계 혹은 연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따라서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몇몇 특성을 이미 체현하고 있는 집단으로 그려지게 된다. 예컨대, 오늘날 청년들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청년’,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청년’, ‘버릇없는 청년’, ‘경쟁을 좋아하는 청년’ 혹은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과 같은 몇 가지 청년상(像)들은 청년연구를 추동하는 문제의식으로 작용하면서 ‘청년’에 관한 연구를

이미 정해진 몇 가지 테마 안에서만 맴돌도록 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몇몇 청년상들은 오늘날의 청년 주체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거나 특정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역사적 맥락하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의 청년 코호트와 현재의 청년 코호트를 비교하는 것으로 ‘쉽게’ 연구되면서 오늘날의 청년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하나의 동일 범주로서의 청년세대?

많은 청년연구에서 ‘청년’을 연령/출생 코호트로 정의해두고 이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파악하면서 청년의 특성을 한 마디로 단언하여 정리하거나 수치로 나온 평균 자체가 이들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푯값으로 보는 시각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청년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 질문은 여전히 “청년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연구자들은 제각기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보고 이를 우려하여 원인을 탐구하거나, 반대로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논의는 질문에서부터 한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이 보수화되느냐 혹은 점점 정치에 무관심해지느냐를 둘러싼 논쟁은 필연적으로 한 덩어리로서의 청년을 상정해두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게 할 뿐, 청년세대 내부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논쟁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연구자들의 문제의식 속에서 지워버리도록 만든다.

청년세대가 처한 상황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허쉬만(Hershman, 1972/2016)에 따르면 문제적 공동체에서 구성원의 반응은 순응(loyalty), 이탈(exit), 항의(voice)로 분류된다. 줄어드는 양질의 일자리를 잡기 위해 스펙을 쌓고 직업훈련을 받는 이들이 있는 한편 눈높이를 낮춰 취업을 결정하는 청년들도 있다. 또 다른 선택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운동을 벌이거나 최저임금 올리기 위한 투쟁을 하는 청년-노동조합도 있다. ‘탈조선’을 꿈꾸며 유럽으로, 캐나다로, 호주로의 이민방법을 검색하는 이들도 있다. 여기에 허쉬만의 분류로 포섭되지 않는 반응 또한 존재한다. ‘일베’와 같은 극단적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들이다. (물론 일베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을 모두 청년세대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청년세대를 다루고 있는 연구

들은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반응을 고려하기보다는 청년세대가 처한 하나의 상황, 하나의 문제, 하나의 반응에만 집중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핵심적인 원인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정의 내리는지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청년세대에 대해 '이들이 중요한 정책 대상이자 연구대상'이라는 것까지는 비교적 합의되어 있는 데 반해, 청년연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나 '청년'의 어떤 면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단순하게 지원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가 되거나 비판의 대상으로서의 '젊은 층'이 되기 일쑤였고, 나아가 많은 연구의 질문이 '청년세대가 이렇다던데 과연 그럴까?' 혹은 '왜 그럴까?' 등에 국한되었고 여기에 대한 답도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노동과 일자리와 관련된 청년연구에서도 '청년'을 단일한 범주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 해당 연구 영역의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분야의 연구들은 주로 청년세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실업문제를 지목하고 그것의 실태,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많은 경우 청년 일자리의 상태를 실업률이나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 등의 통계 지표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개별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을 연구하기 이전에, 실업률과 같은 지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지표를 개선하는 일 자체도 별도로 중요한 연구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높은 실업률의 원인을 일자리(혹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조건과 구직자의 희망 조건의 미스매치 문제로, 이와 유사하게 구직자 눈높이의 문제로 단순화하고 있고 있다. 이 같은 접근에서는 청년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노동 환경이나 그들이 구직과 노동, 이직, 퇴직 등의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떠한 문제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기보다는, 높은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인과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 실업률이 높고,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으니,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청년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간단한 진단은 그 자체로 틀린 말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의 문제상황이 청년들의 눈높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고 전개하는 논의라는 점에서 아쉽다.

'청년'이라는 집단을 단순히 단일한 범주에 놓고 전개하는 분석은 청년들을 '눈높이가 높은 존재'로 타자화하고 억압하는 측면을 발생시킨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실의 상황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방법도 아니다. 성별(젠더)에 따른 차별화된 직장 이행 경로, 어떤 청년들이 하향취업을 선택하는 이유, 어떤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이유 같은 것들은 천만 명 이상이 해당될 청년층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싸잡아만 놓은 상태에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질적인 경험'들이다. 또한, '청년'을 한 덩어리로 바라보고 실업률에만 집중하는 연구경향으로 인해 실제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 과정에서의 다양한 억압과 착취에 관한 다층적인 연구 관심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상으로는 '취업' 혹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용의 질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청년들은 새로운 구조에 새롭게 대응하는 다양하고 복잡다단한 경험들과 실천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들에서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라고 불리는 변수들을 통계 모형에 기본적으로 포함시키고는 있다. 새로운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이 어느 정도 고려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변수들은 모형 자체의 설명력을 높이는 데 사용될 뿐 각각 변수들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지방대학 졸업생이 수도권대학 졸업생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나 고용의 질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다소 공허한 대안만이 논의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 큰 틀에서의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젠더 문제나 지역대학 차별 문제 등의 큰 문제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청년들의 경험을 탐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청년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연구 사례는 아니지만 청년유니온의 '커피 전문점 주휴수당' 문제제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이 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 기존의 노동운동이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노동의 '사각지대'를 예리하고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점이다. 정규직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있는 현재 양대 노총에서는 정규직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문제시할 이유도 기회도 없었다. 이 지점에 대한 청년유니온의 문제제기와 운동은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구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면밀히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점이 필요하다. '청년'의 문제를 연구하고 싶은 연구자라면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전반적 경향성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 속에 존재하는 구체적 현실을 놓치지

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 통시적/역사적 관점의 결여

많은 연구들에서 청년세대를 하나의 범주로 묶고 있지만, 청년세대 내부에서도 계급적 차이가 매우 크게 존재한다. 이 때문에 어떤 연구에서는 세대 간 격차는 사실 존재하지 않으며 계급적 차이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신광영, 2009). 이러한 주장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특히 세대 간 격차를 강조하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를 자원 분배를 놓고 갈등 관계에 놓으려는 시도는 세대 간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Cf. 전상진, 2013). 그러나 여러 코호트의 평균소득 수치를 통해서만 비교된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는 기성세대가 청년기에 겪었던 문제와는 질적으로 명백히 다른 현재 청년세대의 경험을 보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 높아진 대학진학률 대비 늘지 않는 일자리, IMF 이후 진행된 노동 유연화 등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와 동시에 같은 세대라도 계급과 젠더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처한 현실과 경험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청년’에 관한 연구에서 세대 간의 격차를 논의하는 방식은 단순하다고 여겨진다.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측정된 청년의 ‘세대적 특성’이 연령 효과(age effect)에 의한 것인지,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에 의한 것인지 혹은 시기 효과(period effect)에 의한 것인지가 전혀 구분되지 않으며, 물론 이러한 세 가지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분하려는 시도조차 않는 연구들이 많다. 예컨대, 오늘날의 청년실업 문제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유연화가 진행된 저성장시대라는 ‘시기적 상황(시기 효과)’에 학업에서 직업으로의 ‘이행기(연령 효과)’에 처해 있는 인구집단에게 이러한 실업 문제가 나타나는 것일 뿐 이 상황이 같은 출생 코호트에게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나타날 것인지(코호트 효과)는 알 수 없다. 즉, 시대의 효과는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이행기 혹은 청년기에 있었던 문제는 지금보다 이전 시대에도, 이후 시대에도 현재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정치 성향이나 의식, 가치관 등을 논의하는 연구들에서는 아예

비교대상이 전혀 없이 젊은 층의 연구 참여자 몇 명에 대한 인터뷰 혹은 젊은 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만 청년의 정치의식을 밝혀낸 것처럼 논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해당 연구가 밝히고자 했던 문제에 대한 답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다른 연령 코호트(세대)와의 비교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기 효과에 대한 통제가, 다른 시기의 같은 연령 코호트와의 비교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령 효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실제로 연구에서 논의하는 청년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제시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 연구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로 연구자가 연구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분석범주가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 분석범주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청년’이라는 범주가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대두된 몇 가지 맥락들 - 청년실업 문제의 대두, 현실정치에서 ‘세대’ 범주의 유용성 제기, ‘신세대’ 담론의 문화적 유행 등 - 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앞서 논의하였듯이 연구대상으로서의 ‘청년’을 단순히 젊은 층(20대/30대) 인구 집단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면 다양한 층위에서 ‘청년’이라는 기표가 혹은 오늘날의 20대, 30대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각기 다른 역사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삼는 분석범주인 ‘청년’의 역사적인 특성을 이미 존재하는 담론에서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연구자 각각이 가져오고 있는 ‘청년’이라는 기표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그 특수한 성격에 맞게 통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각자의 연구에 끌어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아래에서는 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감하고 고민하는 연구자가 참고할 만한 연구들을 몇 편 소개한다. 각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2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년세대 정치의식 연구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 김세균(2010)의 연구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지금의 청년세대가 경험한 역사를 다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정치지형 형성 역사, 청년세대가 자라며 몸으로 겪은 IMF 등을 제시하며 이것이 청년들의 성향과 정치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통시적 관점을 통해서 비로소 ‘청년’과 다른 세대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사이에서 혼란에 빠

지지 않을 수 있다.

역사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도 단편화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청년세대가 한편으로 자유주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좌우 어느 방향으로도 급격히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년세대에서 보이는 각자도생, 치열한 경쟁과 정치적 무관심을 단지 청년의 이기심으로 치부 -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가 놓인 세계의 논리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측면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세대에도 주목하면서 이들을 위해 진보정치 세력이 적극적으로 청년에게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청년활동가’ 현상에 관한 류연미(2014)의 연구는 전통적인 ‘학생 운동’과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경향인 ‘청년활동가’ 현상을 담론, 제도, 실천의 세 차원을 통해 관찰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사회적 기획과 그 속에서 청년주체의 실천을 복합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저자는 청년세대가 삶에서 겪게 되는 딜레마와 이것을 극복하고자 선택하게 되는 경로로 ‘청년활동’, 이에 더하여 이러한 선택의 가능성과 위험을 균형 있게 포착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활동은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간주되면서도 경제적 생존이 가능한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청년’은 사회-활동을 통해 이중적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로 재등장하게 되었고, 더 이상 국가 권력이나 자본주의 구조를 타격함으로써가 아니라 ‘청년’의 고유한 창조력과 열정을 통해 새롭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적 모델로 재현된다(106쪽). 저자는 이에 더하여 ‘청년활동’을 가능케 하는 문화적, 경제적 자본에 대해서도 지적함으로써 이 대응방식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보여준다(108쪽).

김현아(2015)의 연구는 연구대상으로서 ‘청년’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해당 연구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증대가 ‘청년 여성’들의 가족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의 대상을 ‘청년 일반’으로 설정하는 대신 ‘청년 여성’,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중하계급에 속하는 ‘여성 청년’으로 한정함으로써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청년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전통적 규범성은 약화되고 학력 상승과 함께 개인적 삶을 추구할 기대가 상승하면서 독립이나 비혼에 대한 경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에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독립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의 방식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존재하지만, 이는 결국 원가족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의존의 대상이 이동할 뿐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독립으로 볼 수 없다(75-77쪽). 저자는 연구대상을 구체적으로 ‘중하계급 청년 여성’으로 한정함으로써 ‘결혼을 포기했다’고 불리는 ‘청년’들이 불완전하고 역설적인 전략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로도 존재함을 밝혀낼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청년세대 연구에서 역사적 관점과 구체적 문제제기가 동시에 공백으로 남아있으며 이를 위해 청년의 구체적 삶에 대한 관심과 이를 역사와 구조에 위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대상을 덩어리로서의 청년으로 일반화하는 대신, 관심에 따른 구체적인 ‘청년’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청년의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와 다른 주체가 형성하는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피려는 시도와 청년의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도 폭넓은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방법론의 편향

기존에 수행되었던 청년연구의 방법론 역시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청년’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다수의 연구들이 수량화와 통계를 이용한 양적 방법론에 편향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대다수의 청년연구가 사회과학 내지는 (노동)경제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는 점과 해당 영역에서 지배적인 인식론적 패러다임이 실증주의적인 통계 연구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방법론이 부재한 비평 내지는 시론적 성격의 저술 또한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었으며,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 역시 정치와 문화와 같은 특정 주제에 편향되어 수행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특정 방법론에 있어서 주제 편향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계의 양질분리, 즉 학계의 영토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당수의 청년연구는 방법론의 주제 편향성뿐 아니라 그 엄밀성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청년’과 관련된 연구들의 주제에 따른 방법론적 편향과 일정 부분 연계되는 것이다. 즉 ‘청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방법론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몸담고 있는 학계의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분리(양질분리)가 그대로 청년연구로 반영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총

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인식론 및 방법론이 주제편향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경향하에 ‘청년’이라는 연구의 주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천착했던 노동, 정치, 문화 등의 더욱 커다란 주제에 외삽되는 양상을 보인다. 청년연구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고찰하고 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세밀한 시각보다는 단편적인 진단 위주의 시각이 나타나며 청년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무시하고, 청년 집단 일반에게 특정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효과와도 일맥상통한다.

(1) 양적/통계적 방법론 중심성

하나의 사회 현상이자 사회 문제인 ‘청년’ 문제는 주로 교육학, 사회학, (노동) 경제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즉 ‘청년’과 관련된 상당수의 연구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사회과학 연구에서 방법론은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연구자의 시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사회 현상을 조명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 하나는 수량화에 기초한 통계적 측정과 그를 통한 방법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고자 하는 양적 연구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현상의 탐구에 있어서 사회적 현상의 발현 맥락과 그 행위자의 경험을 질료로 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Smith, 1989). 흔히 실증주의로 일컬어지는 전자인 양적 방법론의 경우 단일 방법으로 경험적 상관관계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 기능적, 인과적 성격이나 일반화 가능성을 고려한 수학적 법칙의 추구에 기반하는 성격이 존재한다(Polkinghorne, 1983/2001, 39).

이러한 양적 방법론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불변의 자연법칙에 의해 추동되는 객관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존재론적 근거하에 연구자와 연구대상을 철저히 분리시켜 객관적 실재를 조명하고자 하는 인식에 바탕을 두며, 대다수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사회과학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후자인 질적 방법론은 사회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 객관적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된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중점을 두며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Guba & Lincoln, 1994). 이러한 질적 방법은 학제적, 범(분

과)학문적, 대안적 학문의 영역으로 일컬어지며, 인간 행위자의 경험과 그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협의적 의미의 실증주의, 탈실증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자연주의적 개념에서 파생했다(Denzin & Lincoln, 2011/2014). 크레스웰(Creswell, 2007/2011)은 이와 같은 질적 방법론의 예시로서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민속지학적 연구, 사례 연구를 제시했으며, 덴진과 링컨(Denzin & Lincoln, 2011/2014)은 여기에 덧붙여서 역사 연구, 기호학, 담론분석, 대화분석 등이 포함 된다고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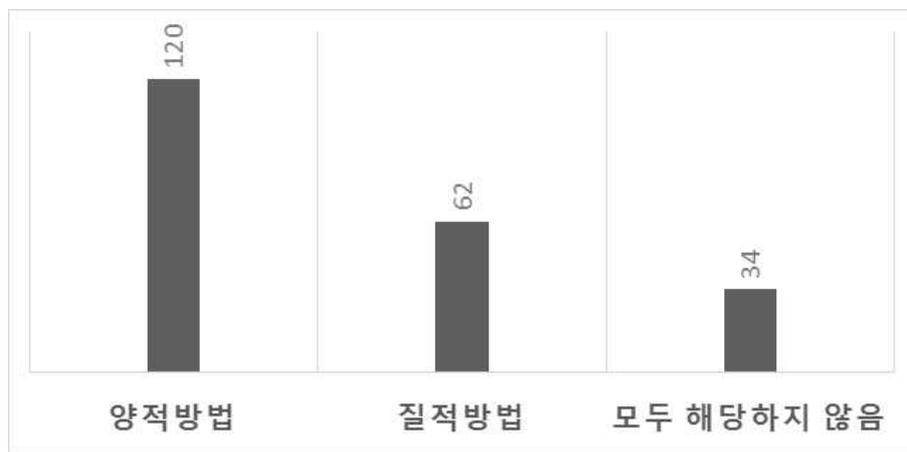


그림 3. 분석대상 연구들의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연구 진행 과정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216편의 논문이 어떠한 연구방법을 사용했는지 코딩한 결과가 위의 <그림 3>과 같다. 양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120건, 질적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62건, 그리고 양적/질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청년’ 관련 연구들이 계량적, 통계적 방법에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이와 같은 편향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자리를 포함한 노동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행된 연구가 94건으로 전체 121건의 약 77.7%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여준다. 또한, 빈곤화 현상 55.9%, 정치 22.7%, 문화 6.4%로, 정치와 문화를 제외한 주제에서 절반 이상의 연구들이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한국 사회 내 청년연구에서 나타나는 양적 방법론으로의 편향은 일정한 의의와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청년연구가 양적 방법론 위주로 수행되었다는 것은 청년연구에 있어서 주제 편향성이 있다는 지점과 연결된다. 지금까지 수행되

어 왔던 청년연구 중 일자리/노동 주제에 해당하는 연구는 본 연구에서 검토했던 전체 청년연구 중 약 56.3%에 달한다. 즉 과반이 넘는 청년연구가 일자리를 비롯한 노동을 주제로 하였으며, 이는 청년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주제 편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주제는 주로 (노동)경제학, 사회학의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들 분야에서는 주로 현상을 수량화하여 분석하는 양적 방법론이 주를 이루는 실정이다(이기홍, 2010).

이러한 양상은 한국 사회 내 청년을 바라봄에 있어 특정한 방법의 모델화, 일반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양적 방법론이 주로 계량적인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양적 방법론은 청년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것에 있어 그러한 현실을 추동하는 변인을 탐색하거나, 그러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에 있어 강점을 갖는다. 따라서 상당수의 청년연구가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 기인할 때, 형식을 갖춘 통계적 보고의 성격을 보이며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점이 존재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방법론에도 맹점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 조항제는 주로 통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양적 방법론의 경우 “수치화된 데이터가 일정한 규약에 의해 생산되고 운용되며, 그 자체로 고도의 질적 판단이 수반된다”고 언급했다(조항제, 2015, 20-21쪽). 대다수의 양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을 분리하며,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 객관성을 추구하고 수량화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객관성의 추구는 ‘기계적 객관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이기홍, 2010, 205쪽). 이와 같은 ‘기계적 객관성’은 상이한 객체들을 공통의 기준을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성격을 보이며, 객체의 복잡다단한 성격을 무시하고 양화 가능한 범주로 환원하고 단순화하는 양상을 보인다(이기홍, 2013, 18쪽).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에는 다양한 주체로서 자리하는 청년들의 삶과 경험을 특정 범주로 환원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쉬운 특성이 존재한다.

앞서 지적하였듯,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청년연구에서는 청년들 사이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차이가 지워진 채, 청년들을 특정한 정체성을 지닌 ‘범주화된 객체’로 표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 현상의 탐구에 있어서 객관적, 인과적 성격을 도출하고 그를 바탕으로 일반화를 꾀하고자 하는 양적 연구의 기획상, 청년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복잡다단한 디테일들이 수치적 평균의 명목 아래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청년들이 처해있는 현실과 그들이 마주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청년 내부의 다양한 특성들 - 계급, 젠더, 정치적 스탠스 등 - 을 수치화된 데이터로 추상화하거나 지워버리는 효과를 야기한다.

한편 기존에 수행되었던 청년연구의 상당수는 비평적 작업의 성격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대다수의 비평 작업은 청년들이 마주한 삶의 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대다수의 비평적 작업은 방법론이 부재한, 단순한 청년들의 실태 보고나 저자의 주장을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을 보였다. 물론 반드시 경험적 연구 과정이 포함된 글만이 '청년' 문제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과정에서 포함된 연구방법이 결여된 '비평적'인 작업들이 청년연구로서 별다른 통찰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가기로 했다.

주제별로 비평적 작업의 비율을 살펴보자면, 일자리를 포함한 노동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약 5%, 청년들의 빈곤 현상에 대한 주제에서는 전체 34건 중 7건으로 약 20.6%, 정치 및 운동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전체 22건 중 6건으로 약 27.2%, 문화 주제에서는 약 22.6%에 해당하는 연구들이 비평적 성격의 글로 나타났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청년'과 관련된 작업 중에서 노동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적지 않은 비율의 비평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양상은 해당 주제에서 체계적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가 아닌 단순 실태 보고 내지는 저자의 특정 주장을 선언하는 성격의 글의 비중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기존에 수행되었던 '청년' 관련 연구의 엄밀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2) 기존 청년연구의 영토주의와 엄밀성 문제

언급했듯이 지금껏 수행되었던 많은 청년연구들은 주로 일자리를 포함한 노동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역이 속한 분과 학문에서는 사회 현상을 수치화하는 양적 방법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편, 일자리/노동을 제외한 범주에서는 비평적 성격의 저술과 질적 방법론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주제별 방법론의 비중을 복기하자면 <그림 4>에서 나타나듯, 일자리를 포함한 노동과 빈곤화 현상에 관련된 주제에서는 반수 이상이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

였다. 하지만 청년운동을 포함한 정치적 움직임에 대한 주제에서는 22.7%, 문화 현상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6.4%로 양적 연구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정치적 영역에서는 50%, 문화 영역에서 약 71%로 이 주제에서는 질적 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의 연구에서는 ‘청년’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들 위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령 코호트를 기준으로 세대를 나누어 세대별 정치성향을 비교하거나 세대별 가치관을 비교하는 다수의 연구들은 질적 연구 방법이 아니라 주로 대규모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양적 연구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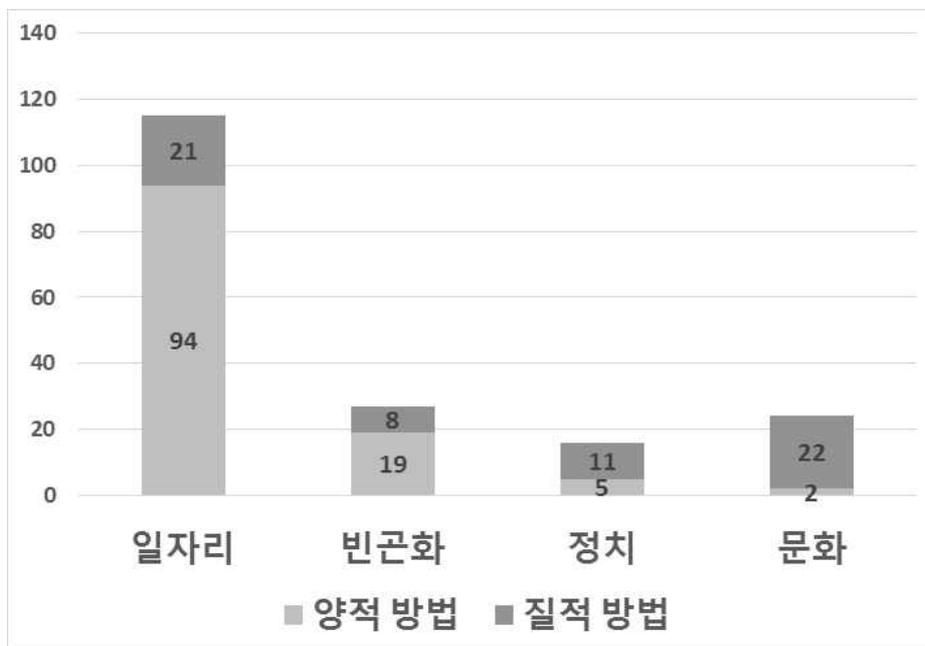


그림 4. 분석대상 연구들의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 (분야별)

정치와 문화를 주제로 한 청년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이들 주제를 주로 다루는 분과 학문과 밀접한 연관이 존재한다. 이들 주제를 주로 다루는 분과 학문은 사회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내부의 문화연구 분과로, 이들 분과 학문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맥락과 경험과 그로 인한 의미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양적 연구 위주의 청년연구가 일자리/노동으로의 주제별 편향성과 더불어 해당 주제를 다루는 분과 학문의 인식론, 방법론적 패러다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정치, 문화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질적 연구 위주의 경향성은 청년연구에 있어 일정한 학문적 영토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방법론에 입각한 청년연구의 주제 편향성은 ‘청년’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층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하지 못하게끔 하는 한계를 내재한다. 기실 여타 사회문제가 그렇듯 ‘청년’과 관련된 문제 역시 특정 사안별로 분절된 것이 아닌,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정 방법론에 있어 주제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청년연구가 기존 학계의 양/질 분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청년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기존의 방법론에 단순 의존하고 있는 학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분과학문 체계의 방법론적 편향에 그대로 의존하고 있는 청년연구의 한계는 양적 방법이나 질적 방법이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방법론적 혁신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방법론에 있어서의 게으름’과도 연관된다. 양적/통계적 방법 그 자체, 혹은 질적 방법 그 자체가 문제이고 그러한 연구 방법으로는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없거나 의미 없는 결과물만을 생산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많은 문헌들이 ‘청년’을 연구할 때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만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게 되는 것은 양적 연구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는 패널 자료의 변수들을 골라내 회귀분석을 하여 통계적 상관성을 확인하는 방식, 질적 연구에 있어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연구대상의 목소리 듣기 이상의 방법론적인 시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커다란 연관이 있다고 여겨진다.

청년연구의 이와 같은 경향성은 본 연구에서 기존의 청년연구를 검토함에 있어 드러난 하나의 분석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청년연구를 둘러싼 특정한 원인들이 빚어낸 ‘현상’이자 그 스스로가 다시 다른 형태의 연구 편향성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적/지속적 요인으로서 해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원인을 진단해볼 수 있다. 첫째로, 청년연구 자체의 독립적인 형성이 아닌, 연구의 일반 주제인 노동, 정치, 문화에 ‘청년’이라는 소재를 외삽시킨 형태로 이어져 왔던 기존 연구의 흐름이다. 즉, ‘청년’의 문제가 연구의 핵심 주제로서 우선되었다기보다는, 노동이나 정치, 문화의 영역에서 기존의 연구대상들과 명시적으로 차별화된 연구의 ‘소재’이자 ‘대상’의 한 범주로서만 청년이 선택되어 온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2007년 <88만원 세대> 이후 폭발적으로 등장한 ‘청년’과 관련된

세대 담론과 발맞추어 청년 관련 정책이 이루어진 현상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범람하기 시작한 '청년' 담론은 기존에 등한시되어 왔던 '청년'에 대한 조명을 환기했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의의가 존재하나, '청년' 주제를 특정한 정체성이 부여된 고정된 세대 범주로 묶어 버렸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양상은 하나의 사회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 '청년'이라는 대상을 '트렌디'한 연구대상 내지는 연구소재로 외삽시킴으로써, '청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구체화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여러 연구대상으로 '응용'되어 난립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청년의 소재화'에는 앞서 논의했던 청년연구의 편향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주로 사회과학의 학제 내에서 활발히 청년문제가 논의되었던 연구 경향은, 사회과학 내에서 주류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계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양적 연구와 맞물려 '청년'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계량화된 데이터로 환원하는 현상을 야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과학의 학제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던 '청년' 관련 주제가 주로 통계화하기 용이한 일자리/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이는 청년연구의 주제적 편향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반대로 정치, 문화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청년연구에서 질적 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 역시, 해당 주제를 주로 논의해왔던 문화연구 등의 학문 분과 위주로 '청년'이 소재화되어 외삽된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연구의 경향성과 관련한 두 번째 진단은 청년연구의 주제 편향성과 연관지어, 이러한 연구 동향에 힘을 실어준 행정정책과의 연관성이다. 청년연구의 증가 양상은 '청년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청년연구들이 정책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⁸⁾ 포터(Porter, 2003)는 양적/질적 연구의 사회과학에서 계량화된 데이터의 사용은 자연과학을 모방하여 하나의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전통 이외에 인간과 재화를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회과학에서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양적 방법론의 사용은 정치와 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심리학과 통계적 수학을 연계시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하였다(Porter, 2003; 이기홍, 2010, 조항제, 2015, 28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를

8) 본 연구에서 검토한 216건의 선행 연구 중 약 17%에 해당하는 연구가 직접적인 정책 연구에 해당되었으며, 이외에도 여타 학술 연구 중 상당수가 청년정책 방향 제시 및 제언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고려할 때, 행정편의적 연구 경향은 양적 연구와 일자리/노동 주제 위주의 한국 사회의 청년연구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러한 청년연구에서 드러나는 여러 측면의 편향성은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경향 자체가 청년연구의 다른 질곡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점을 제공한다. 이는 청년문제를 고찰하고 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청년들 삶의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세밀한 시각보다는 통계 데이터를 단편적으로 읽어내는 진단 위주의 시각과 청년 내부의 다양성을 한정 짓고 특정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진단 위주의 ‘실태조사’의 성격을 지닌 청년연구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에 반해, 청년 주체들의 경험에 대한 조명이 수반된 수행적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향성은 청년 연구에 있어 청년 당사자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녹아 있으며, ‘성찰적’ 청년 당사자성에 대한 연구로의 관심이 환기되어야 함을 요청한다.

4) 당사자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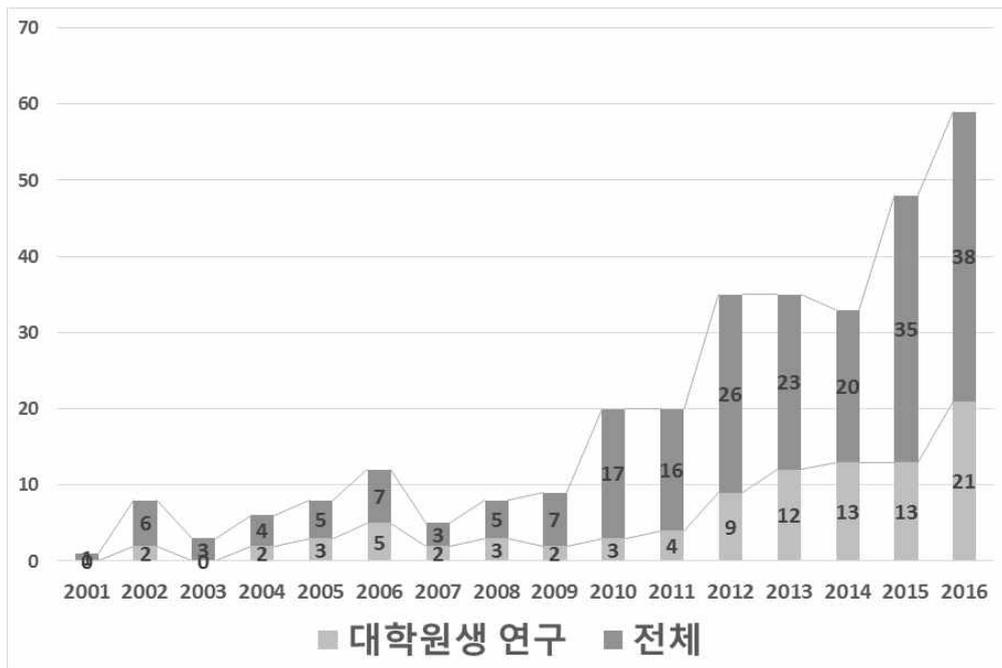


그림 5. 분석대상 연구들 중 대학원생 연구의 비중

모든 대학원생이 20대와 30대는 아니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해온 다양한 연구자들의 직위 중, 연구대상인 청년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범주가 ‘대학원생’이라고 보는 것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표집된 연구들을 저자의 지위별로 분류해 보았는데, 위의 <그림 5>가 보여주듯 총 216편의 연구 중 저자의 지위가 대학원생인 경우는 94편을 차지했다. 이 중, 당연히 저자가 대학원생일 수밖에 없는 학위논문을 제외하더라도 소위 ‘청년 당사자’에 가까운 대학원생이 수행한 연구가 전체 청년연구에서 참여하는 비율 그 자체는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청년 당사자가 진행한 청년연구의 비율은 언뜻 청년연구 전반에 있어서 ‘당사자성’을 담보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청년연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외에 몇 가지 지점을 더 고려하여야 한다. 과연 대학원생 연구자 혹은 연령상의 청년/젊은 연구자들이 청년연구를 진행하기만 한다고 해서 당사자성이 발휘되어 더 좋은 청년연구가 진행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당사자들의 청년연구가 비-당사자들의 청년연구에 비해서 우위를 갖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연구자가 청년 당사자라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더 성찰적인 연구 과정과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청년연구에 있어서 ‘청년’의 개념이 복잡하듯, ‘청년 당사자’라는 개념 자체도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를 명확하게 잘라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곧 청년 당사자가 아닌 연구자가 어떻게 청년문제에 대해 당사자성을 지닐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절을 통해 청년연구가 어떻게 당사자 중심주의를 피해 가면서도 당사자 주도를 통해 청년연구의 빈틈을 메울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당사자주의의 필요성과 그 한계

우리는 ‘청년 당사자’로 인식되거나 스스로를 정체화하기 쉬운 대학원생 또는 젊은 연구자들이 앞으로의 더 나은 청년연구를 위해 성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상당히 많이 가진 주체들이라는 입장에 동의한다. 아마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서울시청년허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지원사업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 스스로를 ‘청년문제’의 당

사자라고 인식하는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연구를 해야겠다는 자기의식을 갖게 될 개연성이 높고, 아마도 이러한 점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대학원생들이 ‘청년’에 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대상이 연구자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당사자로서의 연구자의 위치를 인식한 연구자라면, 청년연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조금 더 지니기 좋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로서 비당사자 연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청년’ 문제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기성세대 연구자가 수행하는 청년연구가 지닌 빈틈은 일정 부분 과거 자신이 청년이었을 때에 대한 낭만화된 기억에 기대어 현재의 청년문제를 평가하는 ‘자세대 중심적’인 오류를 범하면서,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간과하고 특정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스스로를 ‘청년’으로 인식하고 ‘청년’이라는 삶의 현장 안에서 삶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시각을 청년연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청년연구의 미래 전망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곧 ‘청년’을 둘러싼 다른 많은 사회 영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으며, 상당 부분 그 유효성이 논의되고 있는 당사자들의 자기-운동의 의의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체에는 ‘청년’들이 모여 청년정책과 거버넌스의 재구성을 시도했고, 고함20과 같은 미디어는 20대들이 모여서 세대담론이 비가시화하는 또 다른 ‘청년 당사자들’을 직접 조명하고, 세대담론을 해체하려는 담론적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청년유니온이나 민달팽이유니온과 같은 청년운동 단체들은 청년의 노동문제, 주거 문제와 같은 ‘청년’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한 당사자 주도의 활동을 만들어 왔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푸는 청년이 등장했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의 문제를 풀기 위해 19대 국회부터 청년 몫의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해 왔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이 곧 그 자체로 바로 ‘청년’과 관련된 논의(혹은 청년연구)의 당사자성 확보, 그리고 전문성 혹은 차별성 확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첫째로, 그동안 ‘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푸는 청년’이라는 표상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 왔는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전의 ‘청년’ 담론 혹은 청년연구에서 청년들은 대부분 객체(즉, 문제 그 자체)로만 여겨져 왔고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대접받지는 못했다. 이는 ‘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푸는 청년’으로 여겨지는 젊은 층의 개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그대로 적용되

는데, 우리 사회에서 ‘청년’ 혹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아직 온전히 성인은 아닌 존재들, 즉 무언가를 결여한 존재들로 여기는 시각에서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논객으로 불렸던 저자들은 ‘청년’이라는 이름표를 통해 미디어에서 짧은 지면을 허락받았지만, 그들의 의견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기성-논객과의 동등한 지위를 유예해야만 했다고 토론했다(Cf. 김선기, 2016). 그들은 문화평론가 또는 사회비평가라는 다양한 자기정체성을 수행하려고 노력했으나, 오직 청년 평론가 혹은 청년논객이라는 ‘청년’을 붙인 이름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가시화하고 지면을 얻을 수 있었다. 젊은이들의 발화는 청년이라는 상(image)을 지나친 뒤에야 청자에게 닿을 수 있었다. ‘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푸는 청년들’, 즉 당사자성을 가진 연구자 혹은 운동가, 담론 생산자들을 보는 사회의 시선 자체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당사자가 주도하는 청년연구라는 문제의식이 사회에 쉽게 닿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둘째로, 당사자-연구자들이 진행하는 청년연구가 정말로 비당사자-연구자들이 진행하는 청년연구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분석한 연구들을 저자 직위에 따라 분류한 결과, 대학원생이 주저자로 참여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주저자로 참여한 연구와 (주로 교수, 연구원에 의해서 쓰인) 그렇지 않은 연구들 사이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연구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을 의미한다고 할 때, 오히려 교수나 전문연구원이 쓴 논문이 형식, 글쓰기, 연구방법의 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나은 지점들은 있어도 대학원생들이 쓴 청년연구가 그렇지 않은 연구들에 비해서 ‘청년’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도, 기존 청년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물론, <부록 3>에서도 소개할 앞으로의 청년연구를 위해 읽어볼 만한 논문들의 저자들 중에는 대학원생 저자들이 많다는 점도 언급해두어야겠다.)

당사자-연구자들의 연구가 특별한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때, 그 가능한 원인으로 당사자-연구자들의 시선이 당사자성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기성의 것을 체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상상과 엮여서 진행되는 연구들에서는 당사자-연구자로서의 장점이

발휘되기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도 어쨌든 대학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이 소속된 분과의 규칙들을 배우고 습득해 나가는 하나의 사회화 과정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새로운 무언가를 상상하고 스스로 그것을 자기 연구에 실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청년연구에 있어서는 당사자-연구자들이 여전히 비당사자-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지점들이 바로 앞에서 논의했던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무시하는 지점, 젠더 관점의 결여, 방법론상으로 각자 분과학문에서 배운 기존의 방법에만 의존하는 점들과 동일하다. 대학원생들이 발표한 많은 논문에서도 ‘청년’을 연령상의 20대 혹은 2030세대로 설정하고 그들의 평균 수치 혹은 몇몇 인터뷰 참여자의 사례를 ‘청년’ 일반의 사례로 일반화하는 식의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사자로서의 연구자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하고 있다. 게다가 당사자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에도 이러한 당사자성은 매우 낮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연령 범주로서의 청년은 생애주기적인 성격, 즉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대부분의 연구자는 스스로를 ‘지금 청년’이거나 ‘청년을 겪어온 이’로서 인식한다. 때문에 연구대상에 대해 말하는 일은 쉽게 경험에 의해 담보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며, 이는 ‘청년’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봉쇄한다. 연구자는 체화된 경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하여 ‘청년’이라는 범주를 그저 ‘내가 경험했던’ 것 - ‘내가 해봐서 아는데’ - 으로 여기기 쉽다.

(2) 당사자성의 재구성 - 성찰적 당사자성의 필요성

청년 당사자-연구자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연구의 당사자성이 획득된다고 볼 수는 없다. 연구자가 젊은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대상인 ‘청년’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보장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성찰적, 전략적 사고가 빠져 있는 당사자성에 대한 주장은 오히려 본질주의적인 부작용을 지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성세대 연구자가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를 성찰하는 문제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한다면 당사자-연구자의 청년연구보다 더 진일보한 청년연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연구자들에게 앞으로의 청년연구를 위해서 기존의 몇 가지 ‘청년’에 대한 인식들과 단절할 수 있는 더 많은 잠재력이 있다는 점을 여전히 의심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성을 청년 당사자와 비-청년 당사자를 포괄하는 성찰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이전의 당사자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위안부 문제와 국내와 일본의 장애학을 통해 다뤄져 왔는데 이쪽 분야의 논의를 청년 당사자성에 관해 고민하는 데도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때의 당사자성이란 예컨대, 위안부피해자나 장애인 본인 즉 협의의 ‘당사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이들과 관계하는 공동체 모두에게 부여되는 위치성을 뜻한다. 2016년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개별적 위치성을 통해 당사자로서 문제에 개입하자는 주장을 담은 글을 <진보평론>에 기고한 가게모토 츠요시(2016)는 당사자성의 재개념화를 주장한다. 그는 “당사자가 아닌 우리는 피해자들과는 별개의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나름의 당사자성”으로 표현한다.

나름의 당사자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 츠요시는 ‘왜 나는 ○○에 반대/공감하는가’라는 물음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이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내적인 생활을 다시 구성”하고,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성을 열어간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청년문제에 있어서 나름의 당사자성이란 특정 연령이나 출생 코호트에만 당사자성이 한정되는 것을 막아주고, 반대편에서 연령-출생 코호트가 곧 당사자성으로 이어지면서 생기는 ‘당사자성의 함정’을 막아주기도 한다. 당사자성은 곧 청년이라는 범주를 경험하는 중이거나 경험했던 범주로서 평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구성된 범주로서 다양한 관계들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우리가 당사자’라는 인식은 ‘청년’이라는 익숙한 언어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고, 그 언어를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들을 짚어볼 필요성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당사자성을 ‘청년’과 관련지어 본다면, ‘청년’은 그 주변에서 이해관계를 벌이는 다양한 범주의 구성원에게 각자의 위치성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이는 청년문제, 혹은 청년연구에 있어서 성찰적인 접근을 요구한 선행 연구자들의 청년세대 혹은 세대 연구에 대한 제언과도 닿아있다. 박재홍(2009)은 ‘88만원세대’론을 주체화를 위한 기획으로서 긍정하면서도 자세대 중심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낭만화된 과거를 통해 오늘의 청년들을 바라보는 많은 연구들 역시 오늘날의 ‘청년’과 이에 대한 자신의 위치성, 그리고 변화한 관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김선기(2014)가 문제제기한 것처럼, 이는 연구자가 담론의 장 속에서 하나의 성찰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청년연구는 일

단 그것이 출판되는 순간, 그 자체로 청년을 억압할 수 있는 담론을 생산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는 위험을 담지하기도 한다. 때문에 연구자는 ‘세대의 문제가 아닌 것을 세대의 문제로서 과장하는’ 세대주의적(generationalistic) 접근에 대해 충분히 긴장해야 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말하는 것이 ‘청년’이란 언표에 미치게 될 관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성찰적 당사자성을 발휘하는 당사자-연구자들은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여기서의 당사자-연구자들은 이제 재구성된 당사자 개념을 통해 스스로가 가진 ‘나름의 당사자성’을 인식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뜻한다. 계속해서 언급했듯, 우리는 연령상의 젊은 연구자들이 스스로를 ‘청년’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정체화할 수 있고 위치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성찰적인 당사자-연구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령상으로 자신을 ‘청년’으로 정체화하기는 힘들지라도, ‘청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연구자 자신과 연구대상으로서의 ‘청년’ 사이의 위치 짓기를 성찰적으로 고민하는 연구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당사자-연구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당사자적’인 위치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연구를 진행하려는 연구자들을 위한 커뮤니티의 필요성이 있음을 간단하게나마 주장하려고 한다. 연구 과정에서 진행한 <청년연구자 콜로키움> 중 12월 3일 청년X진단 세션에서 <잉여사회>의 저자 최태섭은 “청년연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10일 청년X운동 세션의 발표자였던 류연미도 청년연구를 함께 고민할 대화상대, 즉 동료연구자를 찾기가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대학원생 연구자들은 존재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현재 각자의 학과 내에서 ‘청년’ 문제에 대해 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을 당사자로서 정체화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지도교수 그리고 자신의 주제에는 관심이 없는 동료들 사이에서 혼자서 어려움을 겪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아마도 당사자-연구자의 청년연구를 활성화하고 전문화하는 데는 ‘청년연구’라는 이름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걸 수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앞으로의 청년연구를 위한 제언

이번 장에서는 2장에서 청년연구 동향에 관한 검토와 3장에서 청년연구의 몇 가지 경향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앞으로의 청년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 연구팀은 연구의 전 과정 - 기존 청년연구 문헌들을 읽고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 청년연구자 콜로키움에서 많은 연구자들, 시민들과 이야기 나누는 과정 - 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청년’에 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합의하고 있는 ‘청년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특별히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 물론 반드시 청년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고 나서 ‘청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누군가는 ‘청년’에 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청년’ 개념 혹은 ‘청년연구’의 정의에 대해 합의하고 같은 시선에서 출발할 필요도 없고 그런 시도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옳은 방향도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청년연구가 내적으로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있는 몇 가지 빈틈, 문제 지점들이 사실 청년연구란 무엇인가, ‘청년’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 청년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등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논의가 거의 없거나 더디었던 이전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의 청년연구를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많은 청년연구들이 ‘청년’에 대한 어떤 이미지 위에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거기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또 대안적으로 ‘청년’, 세대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나 대안적인 분석 방법, 연구 패러다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검토를 통해서 청년연구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청년연구가 앞으로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청년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자신의 성찰성, 전문성 혹은 직업의식이 발현되면서 청년연구가 내용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발전 역시도 청년연구의 내용적 발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청년연구, 그중에서도 당사자들이 진행하는 청년연구는 한국의 연구지원 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또한 한국에서 어린/젊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신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

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1) 청년연구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위한 제언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한 다양한 문헌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청년연구라는 하나의 분야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지형을 그려보고자 했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청년’이라는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는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무엇이 ‘청년연구’인가를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전문화된 청년연구라는 분야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청년연구는 청년실업 및 노동 문제에 관한 연구, 청년의 빈곤화 현상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의 정치 및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의 문화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카테고리 내부에서 청년연구는 상당히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측면에서는 IMF 이후 제기되기 시작하여 ‘88만원 세대’ 담론 이후에 절정을 이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라는 이미지의 영향력 또는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문화를 가진 세대로서의 청년이라는 오래된 이미지의 영향력 안에서 구성되기 시작한 청년연구의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이미지로부터 ‘청년’에 관한 연구들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흐름은 기성세대 연구자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청년층에 가까운 연령-세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연구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지적하였듯 청년 당사자-연구자들의 연구가 단순한 당사자성과 연구자로서 아는 이론을 일대일로 끼워맞추는 것을 넘어서, 청년 당사자-연구자들의 성찰적인 당사자성과 연구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는 다양한 학제에서 발전해 온 연구문제들 안에 연구대상으로서의 ‘청년’을 단순히 끼워 맞추는 형태가 아니라 청년연구라는 하나의 연구 분야나 연구의 흐름을 만들고 청년연구를 어느 정도 전문화된 분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만들어져 온 ‘청년에 관한 연구’들을 포괄하되 동시에 ‘청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구의 새로운 방향들을 다양하게 탐색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3장에서 지적했던 기존의 청년연구의 빈틈

들을 채우는 방식에 관한 논의이기도 한데, 기존의 연구 경향에서 모자란 부분들을 단순히 채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 경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예 새로운 청년연구를 함께 모색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청년’에 관한 연구의 여러 가지 한계점들로부터 단절하고 청년연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청년연구라는 연구 분야를 정립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노력과 연결될 수 있다. 청년연구에 있어서 전문화는 곧 다양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연구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탐색하고, 조금 더 다양한 청년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청년’이라는 개념을 연구에서 활용하는 익숙한 방식들에 대해 의문을 던져 보는 지점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1) 20대/30대에서 ‘청년’ 담론과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계로

흔히들 청년연구는 일반적으로 20세에서 39세 혹은 15세에서 34세 등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된 청년층 코호트에 관한 연구로 인식된다. 그러나 사실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의 안과 밖을 무 자르듯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사회적으로 쓰이고 있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특정한 연령대를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청년’에 관한 연구라고 주장하는 많은 연구들은 ‘청년’을 연령 코호트의 개념으로 무리하게 환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20대’나 ‘20대 중반’과 같은 연령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한 연구는 청년연구가 아니라 ‘20대 연구’라는 표현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연구다.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년’이나 ‘청년세대’라는 단어는 이미 “특정한 연령대(연령/출생 코호트)를 실정적으로(positively) 지칭하는 기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복지, 경제정책, 인구문제, 정치 이념 등과 관련된 특수한 이해들이 응축되어 있는 기표”로 쓰이고 있다(김선기, 2016, 34쪽). 일상적으로 누군가가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청년’은 단순히 기성세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실정적이지 않은 기표와의 대당 관계 속에서 설정되고 구성된 기표일 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보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누가 청년이고, 누가 청년이 아닌지를 주로 연령 기준으로 구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행정이나 정책 전문가들이나

청년문제를 깊게 다뤄보고자 하는 연구자들밖에 없다.

청년정책을 다루는 사람들, 특히 정책 연구자들을 비롯한 ‘청년’과 관련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질문해 오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왜 꼭 반드시 청년정책을 만들고 청년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의를 나이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시작하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청년의 나이를 구분하는 문제의 난감함을 마주 하면서 각자의 작업을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감함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청년’을 연령(나이) 기준으로 규정하는 일에 골몰하였지 ‘청년’을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안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에는 소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청년연구(세대연구)가 세대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만드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Cf. 김선기, 2014).

재차 언급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청년’이라는 개념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20대와 30대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아야 하며, 또 실제로도 ‘청년’ 담론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20대와 30대 등 청년층 연령 코호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청년’ 담론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청년층 연령 코호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이해되는 연령집단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청년세대’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 부모세대들은 청년층의 자녀들 혹은 곧 청년이 될 청소년인 자녀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훈육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청년’ 담론이 만드는 정책적인 변화 또한 다른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기획재정부(2015)의 ‘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을 보면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일종의 ‘청년’ 담론으로 인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정책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선 ‘청년’ 담론이 반드시 청년층 인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청년연구를 20대와 30대에 관한 연구가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관한 연구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경제 불평등에서 상징 불평등으로

사회학자 전상진(2013, 294쪽)은 “예전에는 정치적 요구나 새로운 라이프스타

일이 주목받으면서 세대가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정부 재원을 둘러싼 세대들의 다툼이 문젯거리가 되었다”고 논의한다. 동시에, 세대 간 회계를 바탕으로 한 세대투쟁론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로 정치가나 전문가 등 정치적 기업가가 수행하는 해석적 혁신을 꼽는다. 이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해의 대립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한국사회의 세대담론에 있어서는 “20대가 겪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은 다른 세대와 질적으로 다르다”(신광영, 2009, 37쪽)고 주장한 우석훈과 박권일의 <88만원 세대>(2007)가 이러한 해석적 혁신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저널리즘에서 생산한 청년세대담론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50.2%의 기사가 청년 빈곤 및 취업난 문제나 연금, 일자리 문제 등 세대 간 경제 불평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기, 2015, 43-44쪽).

세대 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한 사회 담론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국내 사회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기각해왔다. 신광영(2009)은 경험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계급 변수가 세대 변수에 비해서 더 유효성을 지닌다는 것을 주장했다. 세대 간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세대 내 불평등이 모든 연령 코호트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세대 내 불평등의 증가가 전체 불평등의 증가를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견지에서 청년세대 일반에게 모두 해당하는 문제로 다루어져 온 ‘스펙 쌓기 경쟁’도 “젊은 세대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계급의 부모를 둔 젊은 세대의 문제”로 진단될 수 있다(신광영, 문수연, 2012, 81-82쪽). 청년층의 취업난과 일자리 경쟁 문제도 신자유주의적으로 혼숙된 청년 세대의 문화적 특질이나, 세대 간의 불평등한 기회 구조 문제가 아닌 세대 내의 계급 차이에 따라 분별되는 계급적인 문화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사회의 경제 불평등 구조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세대 간 경제 불평등이 세대 내 경제 불평등에 비해 심각한 정도가 아니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과장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남상호, 2008; 이상봉, 2010, 2011). 이상봉(2011, 51-52쪽)은 계급과 연령집단이 결합되었을 때 더 큰 경제적 가치의 응축과 불평등 확대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논의하면서도, “각 연령 집단의 집단 내 불평등이 연령 집단 간의 불평등보다 더 크다”는 점이 강조되어

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층 계급의 경우 고연령 집단에서 저연령 집단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고연령 집단의 하층 계급과 상층 계급 간의 불평등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고연령 집단이 저연령 집단의 부를 착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연령 집단 간 경제 불평등을 논의하는 것에는 우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는 계급, 지역, 연령집단 중에서 계급의 위치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실증 자료를 통해 기각하는 식의 세대연구 흐름과 더불어, 세대갈등이나 세대 간 경제 불평등 담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의 흐름이 존재한다(박재홍, 2009; 전상진, 2013). 특히 전상진(2013, 296-303쪽)은 세대 간 경제 불평등에 관한 담론을 동반하는 세대투쟁론이라는 레토릭을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빈약하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인구 구성비의 변화로 인하여 다수의 피부양자가 소수의 부양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세대투쟁론의 레토릭은 ‘노령근로의 활성화’라는 대책을 통해서 기각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고령자에게 급여를 제공한다고 해도 돌봄노동 면에서 ‘자녀세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특정 연령 코호트에 대한 우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대 간 경제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상당부분 사회적 담론에서 과장되고 있으며, 그러한 담론 자체가 정치인들이나 사회 활동가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고 창조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대 불평등에 대한 학계의 연구들이 경제적 부의 불평등에만 논의의 초점을 한정 지음으로써, 결국에는 세대 변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이 변수는 담론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식의 ‘무용성 담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 또한 별도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부의 불평등이 없다고 해서 세대 간의 권력 관계를 비롯한 다층적인 불평등 현상이 전부 기각되었다고, 혹은 세대 범주가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효하지 않은 변수라고 선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에드먼즈와 터너(Edmunds & Turner, 2002)는 세대 현상을 수동적 세대⁹⁾

9) 에드먼즈와 터너는 세대 개념을 출생 코호트 개념과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수동적 세대’라고 명명하고 있는 집단은 엄밀하게 보면 ‘실제 세대’의 특성을 지니지 않는 단순 출생 코호트로 보아야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켈쩌(Kertzer, 1983, pp. 126-127)는 학자들이 사용하는 세대의 개념을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 가족관계/친족계보에서의 위치를 따지는 용법으로서의 세대 개념(generation as principle of kinship descent). 둘째, 연령 효과에 집중하여 생애주기 단계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용법으로서 세대 개념(generation as life stage). 셋째, 시기 효과에 집중하여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함께 생존한 사람들을 집합으로 묶는

(passive generation)와 능동적/전략적 세대(active/strategic generation) 간의 순환 교대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수동적 세대의 경우 스스로의 역사적 경험과 참여를 바탕으로 실재성을 갖는 세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는 앞서 출현한 능동적/전략적 세대가 사회적/문화적 자원에 대한 지배권을 바탕으로, 다음 출생 코호트의 기회들을 제한하는 현상과 연관된다. 능동적 세대는 그 세대가 만들어놓은 세대의식이나 가치관을 다른 출생 코호트에게 교육하거나 강제하는 식의 일종의 상징폭력(symbolic violence)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그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문화적 자원에 대한 지배권은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비롯한 상징자본의 획득, 그리고 경제적 자본으로의 환금 가능성 면에서 능동적 세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다만 중요하게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징적 세대 불평등에서의 ‘세대’ 역시도 연령 코호트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청년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각종 매체에서 청년운동을 표상하는 방식은 마치 젊은 연령층의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청년운동을 보는 ‘세대주의적’ 이해방식과 연관된다. 청년들의 ‘당사자 운동’이라는 개념이 과도하게 본질주의적으로 이해됨으로써 나오는 폐해일 것이다. 그러나 청년운동에는 많은 경우 젊은 연령층의 운동가, 활동가, 시민들이 주로 참여하지만 동시에 그 연령층 바깥의 참여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존재한다. 또한 청년운동을 함께 기획하는 주체들은 연령상의 청년이라고 볼 수 없는 소위 기성세대의 일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았을 때, ‘청년문제’라는 일종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사회구성원들을 ‘청년세대’로, 그렇지 않은 사회구성원들을 ‘기성세대’로 보는 방식으로 세대 개념에 관한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틀로 보았을 때, 20대/30대 내부의 특정한 분파가 규정하고 구성해나가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러한 문제의식을 사회에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40대 이상의 사회구성원들은 ‘청년세대’의 편에, 20대/30대이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에 반대하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기성세대’의 편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청년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문제의식이 무언가 ‘새로운 것’에 가까울 것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연령상으로 40대

세대 개념(generation as historical period). 넷째, 코호트 효과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출생 동기집단을 강조하는 세대 개념(generation as cohort).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상징자본을 털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다. 물론 연령상으로 40대 이상이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상징적인 권력도 있을 테지만, 그것은 ‘세대’가 아닌 ‘연령’ 변수로 분석에 별도로 활용하면 되는 일이다.

물론 경제 관련 각종 통계 지표들을 활용해 경제적 부의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비해서, 이와 같은 관계적인 세대 불평등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특히 연령으로 세대 개념을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난감한 일이다. 그러나 세대 간의 불평등을 경제 불평등으로만 환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면, 그러한 방법론적 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디자인들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를 연령 말고 다른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분석할 수 있을지에 관한 대안적인 생각들이 아직 많이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집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정치학이나 사회운동 관련 논의에서 발전한 다양한 이론들을 참고할 수도 있다. 일례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계급 형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Bourdieu, 1985, pp. 725-727)에서 계급의 형성에 있어서 집단형성의 실천들(group-forming practices)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계급’의 존재가 단순히 주어진 것 혹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경쟁적인 대안들에 맞서서 지배적인 ‘사회적 전망과 분리의 원리’로 계급을 부과하기 위한 투쟁을 수반하는 집단 형성 작업의 결과”(Wacquant, 2013, 39-40쪽)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계급과 집단 범주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는 세대 개념과 세대의식 역시도 사회적 정체성을 둘러싸고 행위자들이 벌이는 지속적인 ‘범주화의 노동(work of categorization)’의 결과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 형성에 관한 논의는 계급 외에도 다양한 사회집단 형성에 관한 논의에 적용해보고 각각의 집단이 갖는 특수한 형태에 따라서 정교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의 세대에 관한 논의에 적용해 보면, ‘세대’가 형성됨에 있어 세대의식이 생산되고 전파되며, 또한 세대 간의 관계가 설정되는 과정에서 ‘세대’에 관한 말들, 세대 문제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힘들, 즉 세대에 관한 담론이 현저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세대의식이 어떤 행위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세대 간 관계의 불평등이나 비대칭성이 어떤 담론에 의해 매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담론 생산자로서의 역할, 즉 사회문화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어떠한 세대가 많게 혹은 적게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적 부의 불평등과 별개로 존재할지 모르는 세대 간의 문화적, 사회적, 관계적 불평등의 양상도 파악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세대’에 관한 새로운 분석을 주장하고 있는 글은 아니지만, 참고해볼 수 있는 글로 김원(2015)의 연구가 있다. 그는 2010년 이후 발간된 지식인들의 저서에 등장하는 80년대에 대한 그들의 기억을 바탕으로 80년대의 시대정신이 80년대를 체험한 386세대 개인에 남아서, ‘장기 80년대’라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논의한다. 현재 사회주도세력이자 엘리트 집단으로 성장한 60년대 출생 코호트, 즉 386세대의 ‘분파들’ - 다시 한 번 여기서 이 ‘386세대’가 60년대생 출생 코호트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 중 일부가 만들어낸 시대/세대 의식을 일컫는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이 그들의 세대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수많은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다른 세대에게 부과하려고 시도하거나 하는, 그러한 세대 간 관계와 그 관계 내에 내재한 불평등과 비대칭성의 동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아마도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선 상징적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해 렌즈를 조금 비틀어봄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청년연구가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사회 전체에서 개별 장(field)으로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일부 사회학 연구 외에 세대 문제를 다루는 사회과학 연구는 주로 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직접적으로 분석하거나(민영, 노성종, 2013;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박재홍, 강수택, 2012; 황용석, 박남수, 이현주, 이원태, 2012 등), 특정 세대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김수봉, 2011; 오찬호, 2009; 이동후, 2009 등)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국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사회의 세대 구분을 획정 짓고 이에 따라서 구별된 각각 세대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는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 구분과 세대별 특성, 즉 세대 간 차이를 드러내는 연구들은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세대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증폭시키고, 담론적으로 과장되고 있는 차이들을 학문적으로 승인하는 식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낳기도 한다. 김선기(2014)는 이러한 세대연구의 경향을 영국의 정치학자 화이트

(White, 2013)의 용어를 빌려 ‘세대주의(generationalism)적’인 경향¹⁰⁾으로 명명하고 이를 세대연구들이 전제하고 있는 몇 가지 가정들과 연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요컨대, 많은 세대연구들이 세대 내부를 이질적이기보다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실제로 세대 의식이나 세대 특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이전에 이미 세대의 실재성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세대 차이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만들어지거나, 모든 출생 코호트가 전후 출생 코호트와 구분되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데, ‘태어난 때가 다르면 세대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많은 세대연구자들도 받아들이고 시작한다.¹¹⁾

내부의 동질성과 외부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가 실재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세대 연구에 있어서 본질주의적 오류를 범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코호트 개념은 양적 차이를 갖는 명목적 범주일 뿐이며, 질적 차이를 갖는 실재적 범주인 세대 개념과는 다른데(박재홍, 2003, 6쪽), 생물학적 기준인 출생 코호트 개념을 곧바로 사회학적 세대 개념으로 곧잘 치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세대 연구는 세대 현상의 보편성을 언급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여기고, 연령 집단의 동질성보다 연령 집단과 연령 코호트 내의 불연속성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Jaeger, 1985, p. 280)는 견해가 있다. 또한 화이트(White, 2013)는 세대 내 공통성의 강조는 그 공통성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경험들을 주변화하면서 그러한 개인들을 잠재적으로 억압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언급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적’으로 세대 연구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연구자 스스로 고도의 성찰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김선기, 2014).

몇몇 국내 세대 연구자들은 이러한 세대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세대 내의 다양한 분파들의 존재 상태를 드러내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상진과 정주훈(2006, 273쪽)은 “세대이론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10) 세대주의적인 행태가 문제적인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개념들과 어긋나거나 그것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White, 2013, pp. 236-241). 예컨대, 특정한 출생 코호트를 세대로 명명하고 그것 내부의 공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세대 내부의 다양성을 경시하는 데로 나아가면서 그러한 세대담론의 수용자들을 민주주의적 가치인 ‘다원성의 에토스’로부터 먼 곳으로 데려간다. 세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정론적인 시각도 문제가 된다. 인간을 성찰적인 행위자가 아닌 단순한 인구학적 사실의 담지자로 여기는 것이다.

11)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대 차이에 대한 가설은 많은 세대연구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경험 연구의 결과들은 다양한 사회 현상을 둘러싸고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세대 간의 가치관, 역사 인식 등의 차이를 부정하는 결과들을 보여준다(박경숙 외, 2013; 허석재, 2014, 2015b).

세대논의, 특히 특정 연령층을 ‘하나의’ 세대로 명명하는 것은 여러 맹점을 가진다”고 논의하면서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를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이후 전상진(2009, 21-28쪽)은 세대 내부의 분화와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한 세대(단위)유형학(Generationentypologie)¹²⁾의 이론적인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찬호(2010)는 60년대생 80년대학번 연구참여자들에게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류 386세대’와 같은 출생 코호트이지만 ‘주류’와는 사회운동에 대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대유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출생 코호트 내의 다른 개인들을 두껍게 기술하는 방식인 이상의 대안에 덧붙여, 과연 출생 코호트 내에서 어느 분파가 그 출생 코호트를 대표하는 세대의식의 담지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하임의 세대단위 개념에 착안한다면, 기존 국내의 세대연구 대부분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세대 구분과 세대 특성 설명에만 집중해왔다는 점은 국내 세대사회학 연구의 일정한 편향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계급, 젠더, 인종 등 다양한 다른 집단 범주와의 교차성을 생각한다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내적으로 동질적이고 다른 집단과는 이질적인 세대 구분을 - 그것도 출생년도/연령을 기준으로 한 세대 구분 방법을 전제한 채로 - 한다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연구 기획일지도 모른다. 세대사회학 분석 틀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오히려 보다 동질적인 행위자들이 비슷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부르디외 식의 일종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장(field) 내부를 상정하고 그 안에서 세대 문제를 논의할 때 더욱 적합한 설명의 도구가 되는 것일 수 있다. 예컨대, 외국 문헌들에서는 부르디외 이론에 대한 다른 해석을 미국 문화사회학 발전에 따른 세대적 차이로 살펴보는 논의(Lamont, 2012)라든지, 세대 불평등 문제를 교육 영역에 한정지어서 탐색한 연구(Field, 2013), 리얼리티 텔레비전 일반인 참가자에

12) 세대사회학(sociology of generation) 분야에서 세대의 개념을 명료화하는 문제에 있어, 독일의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이 1928년부터 1929년에 걸쳐 쓴 논문 〈세대 문제〉(Mannheim, 1929/2013)는 세대에 관한 사회학의 유용한 초석(Edmunds & Turner, 2002)으로 평가되며, 이후의 세대사회학 연구들은 세대 개념에 대한 사회과학적 사용법을 대부분 만하임에게 빚지고 있다. 만하임은, 같은 실제 세대 안에서도 다른 ‘세대단위(Generationseinheiten)’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Mannheim, 1929/2013, pp. 67-71) 세대단위를 “단순한 실제 세대가 구성했던 유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유대”로 정의하였다. 세대단위들은 “주어진 사건 관계를 다르게 해석”한다. 세대단위 개념은 동일한 출생 코호트 내에도 복수의 세대단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세대에 대한 이해를 수직적 이해에서 수평적 이해로 바꾸어놓는 전환의 의미”를 가지며, “동일 세대가 더 분자화되고 구체화된 상태에서 ‘동일 세대 서로 다른 목소리’라는 정치적인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남석, 2013).

대한 세대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Curnutt, 2011) 등 조금 더 좁은 범위의 장 안에서 세대사회학적인 개념들과 이론 틀을 적용한 연구사례들이 더러 있다.

이와 관련해 허석재(2015a)는 국내 세대연구에서 특히 주로 엘리트의 행보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세대 담론들이 논의되어 왔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특히 '386세대'가 논의될 때나 현재 '청년세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널리즘을 통해서 언급될 때 주로 기준이 되는 출생 코호트 내 분파는 상대적으로 학력 면에서 엘리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4년제 대학생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현실참여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소위 '운동권'의 시각이 각 출생 코호트를 대표하는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실상 출생 코호트 내 일부를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진 전체 인구 대상의 세대 구분법을 무리하게 그대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이러한 '세대 구분' 논의 자체를 한국사회 내 엘리트집단의 장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세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 한정 지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사회의 세대담론이나 세대의식의 생산이 누구(어떤 전략적 세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누구(어떤 수동적 세대)에게 부과되고 있는지, 또한 정치/사회/미디어 엘리트 집단 내부 및 경계에 놓여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 어떠한 세대적 역학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4) 진단적 연구를 넘어서 수행적 연구로

마지막으로 간단하지 않은 문제의식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청년연구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마치고자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몇몇 청년연구들, 특히 청년들에 관한 정책적 연구들은 '청년이 어렵다, 청년이 문제다'라고 하는 식의 청년 문제에 대한 특수한 상상(imagery)에서 출발하면서, 그렇다면 '청년'들을 연구자가 객관적으로 조사하면 된다고 보는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고는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모든 청년연구가 이렇게 연령상의 청년에 대한 진단이나 연령으로 구분 지어 놓은 한국의 20대/30대에 대한 지식 만들기와 관련된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보는 입장이다.

첫째로, 청년들에 대해 이미 승인된 유사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이 '청년'이라고 상정된 젊은 층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이다. '청

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혹은 ‘청년들의 투표율이나 정치 참여가 저조하다’, ‘청년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주체가 되었다’ 등의 문제의식들은 청년연구를 추동하는 문제의식이면서 동시에 많은 청년연구들의 결론으로 순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테마들은 주로 연령상의 청년들을 능동적이지 않은 수동적인 객체(비주체)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기도 한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분리되어서 지속적으로 ‘가난’이나 ‘무력’, ‘각박해진 사회상’ 등을 재현해냄으로써만 담론 안에 자리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고, 어떤 청년연구들은 이러한 ‘청년’ 만들기에 본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공모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그만큼 그러한 몇 가지 테마들이 오늘날의 청년(젊은층)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비슷한 진단만이 반복되고 있는 듯한 상황은 어쩌면 ‘청년’에 관한 논의가 깊어지지도, 전환되지도 않고 비슷한 흐름 안에서만 맴돌도록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더라도 새로운 변수들을 계속해서 교차시켜가면서, 또 분석의 범주를 더 넓게 혹은 더 좁게 움직여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청년’에 관한 특정한 문제의식 몇몇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나 여겨진다. 더욱더 풍부한 청년연구를 위해서는 비슷한 ‘청년’에 관한 진단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학술적으로 조금 더 체계화된 세밀한 논의를 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현재 ‘청년’에 관한 문제의식을 주장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분파가 이해하고 있는 ‘청년문제’의 수준이 연령상의 청년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자기 문제와 체계적으로 괴리되어 꽤나 큰 간극이 만들어져버린 상황과 관련된 문제의식이다. 청년정책 연구자들이나 청년활동가들 혹은 청년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행정담당자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 중 하나는 “청년들이 청년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식의 불멘소리다. 실제로 ‘청년’ 담론이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청년’이 무엇의 이름인지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청년 당사자라고 쉽게 지칭되는 연령상의 ‘청년 당사자’들도 스스로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청년연구가 객관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청년문제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는 상상에서 출발한다면 상당히 많은 난

점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 청년정책에 관한 이해나 수요 자체가 청년 당사자들은 물론 정책 입안자와 정책 연구자에게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수요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기만 한다고 어떤 청년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연구방법이나 인식론/방법론상에서의 청년연구가 가지고 있는 순진함인지도 모른다. 이는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혹은 청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청년연구자들에게는 일종의 함정으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 청년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책 욕구가 많지 않고 실제로 삶이 어렵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많지 않은데 도대체 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냐고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은 수요를 좇아서 움직여야 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이토록 커다란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청년’을 공공이 정책을 통해서 묶어내는 과정이 바로 몇 가지 질문 - ‘청년’이란 무엇인가, ‘청년정책’이란 무엇인가, 이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게 될 현재의, 또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이 사회는, 공공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 에 답하기 위한 실험과 연구이며, 그러한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청년정책 연구라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단순히 현재 청년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진단하고 조사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회 주체들과 함께 청년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가고, 정책 대상자들과 함께 청년정책의 수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한 수행성(performativity)을 가진 청년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구방법에 대한 제언을 마친다.

2) 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전술했듯이 우리가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연구들 중 다수의 경우 연구자의 직위는 대학원생이었으며, 그중에서도 석사학위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청년연구를 더 성찰적이고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대학원생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자신들을 ‘청년’ 혹은 ‘당사자-연구자’로 정체화하는 것이 수월한 젊은 연구자들이라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젊은, 경력이 적

은 당사자-연구자들이 청년연구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 데는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다른 분야에서도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없다는 사실은 청년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층이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학술/정책연구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축적해나간다는 것은 수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일이다(Cf. 천주희, 2016). 특히 오히려 유학을 가는 것보다 국내에서 학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일은 부족한 장학금이나 조교 일자리, 국외 학위보다 국내 학위가 덜 인정받는 현실 등을 이유로 위험한 선택지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애초에 한국사회의 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한국의 대학원에서 하려는 젊은 연구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학교 내에 있는 연구자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주제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과학문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 많은 경우 연구비 지원이 교수팀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탓에, 교수의 연구주제에 맞는 연구에 대학원생은 자신의 노동을 맞춰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원생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훈련 기간으로서 자신 고유의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여겨지는 풍토도 있다. 젊은 연구자들이 ‘청년’을 연구하는 일에 자율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다. 우리의 분석대상 연구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청년’과 관련된 주제로 쓴 대학원생은 많았으나 그들의 ‘청년’ 관련 저술이 대부분 석사학위논문에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은 젊은 연구자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게다가 그나마 학사-석사-박사로 이어지는 ‘연구자 되기’의 대학 내 제도적인 과정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는 독립연구자들의 경우 그 현실이 더욱 더 열악하다. 한국은 대학 바깥에서 연구자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 인정을 얻을 수 있는 대안적인 지식/학문의 장이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동시에 독립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지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연구지원사업은 대부분 대학-기업-국가라는 체제 안에서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즉 요약하면, 청년연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젊은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상 대학 안에서건 밖에서건 독립적으로 자기 연구를 지속해 나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우리는 청년연구의 발전이 당사자-연구자의 청년연구 자체에 대한 성찰과 혁신

에 어느 정도 달려 있는 것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이러한 젊은 연구자들이 집단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또 개별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연구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청년연구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 이 절에서는 기존 연구(자)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현재의 상황이 젊은 연구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한 후 청년연구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간단한 정책적 제언을 하려고 한다.

(1) 기존 연구(자) 지원 제도의 패러다임

전공, 지역, 집단에 따라 생각하는 적정 지원(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김민희(2007)는 누구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연구비를 배분할 것인가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정부는 누구도 만족하기 어려운 지원(금) 제도를 ‘형평성’이라는 잣대로 설계한 뒤에 연구자 집단을 설득한다.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사용된 것은 1999년 후반부터다. 1997년 학술진흥재단이 발표한 ‘학술진흥 장기종합계획’에서 “학문분야간, 지역간, 남녀간 학술활동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처음 명시”(76쪽)되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패러다임 아래에서 학술 지원 정책을 집행하여 전공, 지역, 집단 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째, 학술 진흥 정책은 ‘선택과 집중 vs. 균형과 분산’이라는 연구비 배분 논리 중에서 ‘선택과 집중’ 논리에 따라 연구비를 배분하고 있다. 기간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경험에 따라서 학술 지원(금)도 유망한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 노선과 더불어 ‘다액소수과제’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연구기간이 요구되는 분야,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78쪽)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액소수과제’ 노선에 따라서 2012년부터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예산은 2011년보다 55억 증가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에 따라 학술진흥재단은 신규 사업 선정을 하지 않고, 기존 연구 관리에 집중하였다.¹³⁾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전체 예산이 50억 증액되었으나, 인문사회분야 예산은 오히려 줄었으며 사

13) 교수신문 (2012, 02, 13). 전문성·공정성 제고와 함께 신진연구자에게 파격적 지원.

회과학연구지원(SSK)의 경우 신규 사업 선정이 단 1건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교육부, 2016, 46쪽). 이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면서, 기 선정된 프로젝트 관리에 치중하겠다는 학술진흥재단의 결정이 반영된 결과다.

셋째, 연구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관행은 개인연구자 맞춤형 지원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은 1989년에 설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을 ‘학문후속세대지원프로그램 → 신진교수지원 → 기초연구지원 → 우수학자지원’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정비하고, 2013년부터 지원 금액을 인상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프로그램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연구 성과를 위해 ‘하향식(top-down)’ 방식을 채택한 지원 프로그램이 2016년부터 도입됐다(2016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안, 33쪽). 연구성과와 대중과의 괴리를 방지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 및 중견연구자 지원, 글로벌연구 네트워크지원 사업, 일반공동연구에 top-down 방식을 일부 부여했다.

이상의 학술진흥재단 지원 프로그램은 ‘선택과 집중’, ‘다액소수과제’, ‘생애주기 맞춤형’, ‘수요자 맞춤형 연구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모두 박사학위 이상의 연구원이라는 점이다. “연구자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우수연구성과 창출”이 목적인 ‘학문후속세대지원프로그램’의 지원 자격도 박사학위 취득이 기본이다.

표 4.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내용 (출처: 교육부, 2016, 55쪽)

| 세부사업명 | 사업 유형 | 지원 분야 | 지원대상 | 선정 방식 | 지원 기간 | 지원 단가 | '16년 신규과제 |
|-----------|-------|---------------------------------------|---|-------|-------|----------|-----------|
| 박사후 국내연수 | 개인 | 인문 사회 초분야 (예술□ 체육학 포함) |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 공모 | 1~2년 | 34백만원 /연 | 151개 |
| 학술연구 교수 | | |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고등교육기관 부설 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교수 채용 예정자 | | 3년 | 40백만원 /연 | 48개 |
| 시간강사 연구지원 | | | 최근 5년 내에 대학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 | 1년 | 14백만원 | 1,282개 |

위의 <표 4>는 ‘학문후속세대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이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학문후속세대지원프로그램’ 중 ‘박사 후 국내연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이어야 한다. 이마저도 지원기간은 1~2년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벅차다는 지적이 있다.¹⁴⁾ ‘학문후속세대지원’ 중 ‘학술연구교수’ 프로그램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고등교육기관 부설 연구소 소속 전임 연구교수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표 5. 신진/중견 연구자 지원사업의 내용 (교육부, 2016, 61쪽)

| 세부사업명 | 사업 유형 | 지원 분야 | 지원대상 | 선정 방식 | 지원 기간 | 지원 단가 | '16년 신규과제 |
|-------------|-------|----------------------------|---|-------|-------|-----------------|-----------|
| 신진 연구자 지원사업 | 개인 | 인문사회 소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 조교수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 공모 | 1~3년 | 20백만원 이내/연 (일반) | 621개 |
| | | | | | | 10백만원/연 (정액) | |
| 중견 연구자 지원사업 | 개인 | 인문사회 소분야 (예술·체육학 포함) | 조교수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대학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 공모 | 1~3년 | 20백만원 이내/연 (일반) | 647개 |
| | | | | | | 10백만원/연 (정액) | |

위의 <표 5>는 생애주기 맞춤 프로그램 중 우수연구자 지원프로그램을 제외한 신진/중견 연구자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이다. 생애주기프로그램 중 가장 초기 프로그램인 ‘학문후속세대지원’의 지원 자격이 이러한데 신진·중견·우수학자라고 하여 진입 장벽이 낮을 리가 없다. 신진연구자 프로그램에서 선정되기 위해서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지녀야 한다. ‘중견·우수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조교수 이상의 직위가 필수이며,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계속 적을 두고 있어야 하며,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획득해야 하는 높은 장벽을 넘은 뒤에야 가능하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기

14) 교수신문 (2012.06.11). 학문후속세대의 시선_ 1년 지원으로 질적 연구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

존의 학술제도에서 ‘젊은 연구자’ 혹은 ‘신진연구자’는 이미 연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청년’으로 여겨지는 범주를 한참 넘어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는 것이다. ‘당사자-연구자’로서 시작해보고자 하는 경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 기존 제도에서의 ‘신진연구자’다. 현행 연구 지원 사업하에서 청년연구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당사자-연구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교수 혹은 경력이 많은 연구자의 연구관심사 위주로 설정되어 있는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을 하면서 학위를 모두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나이를 먹으면서도 ‘청년’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름의 당사자’로서의 관심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조금 과감하게 비유하자면 ‘백마 탄 초인’을 기다리는 일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혹은 이미 박사를 마친지 꽤 된 연구자가 우연하게도 ‘청년’이라는 주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성찰성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청년’에 대해 당사자적 문제의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청년연구를 진지하게 해 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적인 벽들과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일단 현재 한국의 젊은 층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의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주거, 부채(학자금)의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학부 과정보다 더 비싼 등록금, 생계와 연구의 병행, 교수와 도제식 관계로 맺어진 연구실 분위기 등은 ‘청년’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겹쳐져 젊은 연구자들(혹은 대학원생들)에게 금전적 비용 이상의 부담을 지운다. 특히 ‘청년’ 연구에 더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대학원생은 이공계 대학원생들에 비해서 국가로부터 학술노동의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돈을 벌어 기본적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취 아르바이트를 하고, 각종 학술행사에서 잡무를 보는 조교노동을 하고, 자신의 관심사 자체와는 거리가 먼 연구사업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여 행정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원래 관심이었을 청년연구(혹은 각자의 다른 연구분야)에서 체계적으로 괴리되는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등록금 부담과 강압적 도제 관계를 피하기 위해 대학 밖에서 독립연구자의 길을 걷는 일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 밖에서 연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선택은 학회와 학교라는 네트워크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기도 하다. ‘청년’을 주제로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의 수가 양적으로 부족하며 ‘청년’에 관련해서 연구 관

심을 가진 연구자들의 커뮤니티가 대학 밖에 특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 연구자와의 교류까지 포기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이에 더하여 대학 밖을 모색하는 청년연구자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 명목의 노동 임금도 포기해야 한다.

(2) 청년연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① 청년연구자 레지던시

“학계 바깥에서 독립연구자로 살아갈 때는 아무도 나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의 경우도 연구자 레지던시를 만들고 ‘촌’을 만들면 서울시나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중략)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들, 이제는 내 삶 말고 타인의 삶을 연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위해서 하나씩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연구자 천주희, <청년연구자 콜로키움> 2회차 종합토론에서)

연구 과정에서 콜로키움에서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의 저자이기도 한 독립연구자 천주희는 연구자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청년연구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했다. 청년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지면에서 청년연구자 레지던시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히 상상해보고자 한다.

프랑스의 국립조형예술센터가 밝힌 레지던시의 기본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레지던시는 예술가들을 위한 입주 시설이며, 그 첫 번째 목표는 입주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과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손정훈, 2007, 348쪽). 한국에서는 조형예술 창작 스튜디오의 형태로 1995년에 광주시립미술관이 문을 연 뒤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충남 논산과 인천 강화에 폐교를 활용하여 미술 창작실을 조성하였다. 이어 2003년까지 전국 각 시도별로 2~3개 창작 스튜디오를 건립하겠다는 문화관광부의 목표가 수립되어 창작자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양적 성장을 이뤘다(350쪽). 조형예술 레지던시에 이어서 2006년에 원주 토지문화관의

주도로 문학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예술가에게 작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예술가가 안정적인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뿐만 아니라 예술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창작 에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모색하여 단순한 입주시설 이상의 역할을 기획하고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는 입주 작가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작품 설명회 또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지자체는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손정훈, 2007, 364쪽)한다. 예술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수는 예술가 레지던시에 비해 거의 없는 편이다. 경기창작센터는 연구자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예술분야 전문 비평가로 활동경력이 있는 연구자 혹은 전시 또는 아트프로젝트 기획 경력이 있는 연구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가/문학작가에게 제공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연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양질의 청년연구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공공 주체나, 지역 내의 청년 교육사업 혹은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공공 주체라면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와 생활을 위한 공간과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청년’ 관련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입주자가 될 젊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및 노동(연구) 환경 면에서도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는 젊은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를 놓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면 대학 내에서 연구하는 박사 이하의 청년연구자들에게도 활발하게 정책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연구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자체나 기관이 ‘연구비’ 지원에 더하여 레지던시 및 그로부터 창출되는 네트워크까지 지원한다면, 청년연구는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청년연구자에게 네트워크와 안정적인 주거 공간, 연구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특히 대학 외부에 있는 연구자에게 유용하다. 대학 밖에서의 연구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상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대학원 등록금, 교수 혹은 동료와의 관계, 연구의 편의 등 다양한 이유로 청년연구자는 대학 밖 연구를 모

색하고 있지만, 대학 밖은 연구자의 삶을 이어가기에 아직 황량한 곳이다.

물론 문화예술계에서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지원 주체가 특정한 종류의 예술품 생산을 요구하고, 예술가들에게 실적을 증명하도록 하면서 예술가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연구자 레지던시의 경우 연구자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지원 주체인 공공이 필요로 하는 연구물의 성격을 잘 조율할 경우 이러한 방식의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기존에 국가(한국연구재단)의 주도로만 이루어져 온 실적 중심의 학술연구진흥사업이 대안적인 경로를 찾음으로써 학문 장의 다양성 또한 진작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청년연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서울시청년허브는 청년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를 지원하면서 꾸준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공모연구사업인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를 통해서 매년 연구 경험이나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 당사자’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의 경험에 대해서 연구하여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작은연구좋은서울> 공모사업도 시민 중심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대학 밖의 독립연구자들과 스스로를 특별히 연구자로 정체화하지는 않는 시민들도 다양한 연구 경험을 쌓고 결과물을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연구 지원사업의 사례들은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연구 지원 사업들이 갖는 커다란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은 남는다. 우선 사업비의 한계 탓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연구의 숫자보다 연구 프로포절 단계에서 탈락하는 연구의 수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연간 사업의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당사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성찰적인 추후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과정으로 지원사업이 설계되지 못하고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당사자적 문제의식들을 사업의 결과물로 빠르게 환전하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이다. 이는 여기에서 발간된 ‘작은 연구’들의 연구적인 가치가 어떤 측면에서는 평가절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특히 잠재적인 당사자-연구자들의 연구자로서의

자기 인식이나 연구 관심이 한 번의 연구 후에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는, 작은 연구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나 기관들이 다른 형태로 연구 지원 사업을 설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특히 새로운 지원사업은 이미 연구자로서의 경력과 능력이 대학원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형성된 ‘이미 준비된’ 전문 연구자들에게 대한 지원사업과는 그 지원의 방식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구 지원 사업의 프로세스가 연구 자체에만 맞춰져서 선정된 연구자/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형태가 아니라 연구시작 이전과 연구종료 이후를 더욱 강조하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도 있다. 현재의 방식이 이미 각자의 품을 들여서 작성한 연구 프로포절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연구설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연구 프로포절 작성 훈련과 코칭을 받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후의 연구 지원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로서의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지원 사업 종료 이후의 프로세스도 점검이 필요하다. 1) 결과물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과 이후 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2) 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지원기관과 당사자-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연구 지원 사업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청년연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학술적인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지 시간이 어느 정도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연구는 몇 가지 문제 상황 - ‘청년 연구’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청년’을 연구하려는 관심 있는 연구자들도 ‘청년’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예 개념화 자체를 포기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 에 처해 있다. 박사 과정 연구자부터 학부생 연구자까지 6명의 당사자-연구자로 구성된 연구팀의 ‘청년’ 연구 학습모임과 청년연구자 콜로키움 커리큘럼 개발 및 실행, 그리고 216건의 기존 청년연구에 대한 코딩 및 메타분석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크게 세 장으로 나누어 서술되었는데, 먼저 2장에서는 우리가 검토한 기존의 청년연구 216건의 내용을 연구 분야별로 나누어 보았다. 세대 및 ‘청년’에 관한 이론적 연구, 청년실업 및 노동 문제에 관한 연구, 청년의 빈곤화 현상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의 정치 및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의 문화에 관한 연구 등 5개의 범주로 216건의 청년연구를 분류하고 각 분야별 연구의 경향성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1) 세대 및 ‘청년’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 간간히 이루어져온 세대사회학 분야의 연구들에서 ‘청년’을 개념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떠한 쟁점들이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잘 정리하고 있다. 우리가 검토한 모든 세대연구자들은 세대 개념의 모호성과 다의성을 지적하며, 세대 개념을 남용하거나 세대 차이를 과장하는 문제를 범하지 않기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2) 청년실업과 노동에 관련된 연구들은 선행연구 자료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발견되어, ‘청년’ 문제와 관련해 실업 문제가 기업과 정부, 학계 모두의 집중적인 관심이 투사되어 온 분야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청년실업(일자리)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청년세대의 고용현실과 노동시장의 현안을 분석한 ‘실태 중심 연구’,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구조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청년실업 ‘원인 진단 연구’, 실업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책 중심 연구’로 나누어졌다. 선행연구에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분야는 ‘창업(창직)’과 ‘산학협력’으로 대표되는 대학교육체계의 변화였다. 이들 연구 중 상당수는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한다기보다는 청년의 자기주도적 역량강화만을 강조하거나 ‘취업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을 생애단계의 초반부로 계속해서 견인시키는 방식의 한시적인 방안만을 제시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청년들의 구체적인 노동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은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3) 청년 빈곤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크게 청년들이 마주한 부채, 주거 문제, 그리고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빈곤화 현상에 대한 중점적 언급으로 나뉘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간 한국 학계에서 청년 빈곤화 현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그 수가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빈곤화 현상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청년 부채를 다룬 연구는 대다수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연구이며, 그마저 학자금 대출을 받는 청년들의 경험과 의미를 읽어내는 논문은 몇몇의 학위논문을 제외하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에 수행되었던 청년 부채 연구들은 다양한 청년 주체들의 부채 문제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그들의 삶의 문제를 중층적으로 그려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청년 주거와 관련한 연구들 역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작업들은 청년 주거 현실에 대한 실태보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주거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동향은 크게 현황 및 정책 제안, 대안적 주거 모색, 청년 주거에 대한 문화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몇몇의 학위논문 작업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경험과 그 의미를 훑아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청년 주거 연구의 동향은 그 양과 질 모두 미흡한 편으로 진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청년 빈곤/화 현상과 관련하여 청년들이 처한 빈곤화 현실에 대해 논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연구들의 대다수는 비평적 작업에 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단순 실태보고나 저자의 선언적 주장이 주를 이루는 실정이다. 이는 청년들의 빈곤/화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다른 사회적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기인하지만, 동시에 청년을 매개로 한 빈곤/화의 과정이나 빈곤의 재생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논의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4) 청년세대의 정치와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청년의 정치의식에 대한 연구와 정치 행위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청년세대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청년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명제에서 출발하여 그렇다고 주장하는 연구와 그렇지 않은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 그리고 청년세대의 재정체화의 가능성에 대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편, 청년세대 정치행위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 연구사례로 ‘청년’의 사회운동조직 활동으로서 학생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을 다루는 연구, 대규모 집회가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집회 문화와 이 가운데서 뉴미디어의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5) 청년세대의 문화에 관한 연구는 크게 ‘청년문화’ 연구, ‘청년’ 담론’ 연구, 청년을 다루는 텍스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청년문화’ 연구는 행동의 가능성으로서의 문화를 다루면서, 청년이 어떤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고 있으며, 이 맥락을 어떤 식으로 재구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문화적 맥락을 다루는 연구는 주로 노동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실업률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파편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 담론’ 연구는 ‘청년’을 규정하는 담론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88만원 세대>의 출간 이후 청년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청년이라는 세대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파를 파악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끝맺는 연구가 많다. ‘청년’이라는 획일적 규정에 문제제기를 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경험적 분석을 근거로 하여 기존 ‘청년’ 담론을 비판하기보다는 이론적 주장 안에서 논의를 끝맺는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3장에서는 우리가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216건의 청년연구들에서 결여되어 있었던 문제의식, 즉 청년연구의 빈틈을 찾아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보고자 했다. 크게 분석범주의 측면, 방법론의 측면, 연구자의 성찰성 측면에서 청년연구를 다시 고찰해보았으며 특히 분석범주의 측면에서 크게 두드러지고 중요한 이슈라고 여겨지는 젠더 관점의 결여는 별도의 절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1) 우선, 청년세대 내부의 ‘젠더’의 차이를 고려하거나 주목하는 연구들이 많지 않았다. 청년세대의 ‘성별’을 연구 범주 중 하나로 제시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정작 이러한 성별 범주가 드러내는 차이를 주의 깊게 해석하거나 권력의 차원에서 읽어내고자 했던 연구는 적었다. 이와 같은 젠더의식의 결여는 오랫동안 ‘청년’이라는 범주를 몰젠더적으로 읽거나 많은 경우 일반명사로서의 ‘남성’의 의미만을 부여하던 청년세대 담론 자체의 역사적 경향에 근거한다. 이러한 경향은 ‘청년세대의 목소리’ 중 여성의 현실을 일정하게 탈각시키거나, 젠더권력이 개입된 복합적인 담론을 분절시켜 일부분만을 청년세대의 문제로 일반화하였으며, 여성 청년과 관련된 연구들을 ‘청년연구’가 아닌 ‘여성연구’로서 인식시키는 효과를 발휘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젠더간의 권력이나 충돌을 청년연구문제 의식의 보편적 틀 중 하나로 가져가야 하며 기존에 젠더 중립적이거나 단일한 것처럼 간주되던 ‘청년’과 관련된 표상들을 지속적으로 재/개념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2)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연구들에서 ‘청년’을 단일한 집단을 파악함으로써 청년 내부의 다양한 계급과 경험, 발언 등을 놓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청년’의 특성을 단순 평균치로 파악하면서 젠더의 문제를 비롯하여 청년세대 내 계급의 문제,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대응방식의 다양성을 지워버린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을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는 설정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없었던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를 좀 더 폭넓은 맥락 위에 위치시키는 관점을 가지면서 동시에 청년세대가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3) ‘청년’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수량화와 통계를 이용한 양적 방법론에 편향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양적 연구로의 편향성은 연구의 수행에 있어 청년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계량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청년연구에서는 청년들의 복잡다단한 특성을 수치적 평균의 명목 아래 일률적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와 같이 청년연구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편향은 청년연구의 주제와 맞물려, 주제별로 상이한 방법론이 주를 이루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방법론이 부재한 비평적 성격의 저술은 청년연구 중 빈곤화 현상에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와 문화 영역에서 수행된 청년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특정 방법론에 있어 주제 편향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계의 양질분리, 즉 학계의 영토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청년연구에서는 기성 연구자들의 관심사에 ‘청년’이 ‘외삽’되는 데 그치는 소재주의적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흐름을 낳은 청년연구의 동향은 이에 힘을 실어준 행정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수행되어왔던 청년연구에서 드러난 여러 측면의 편향성은 상호작용하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경향성은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고찰하고 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세밀한 시각보다는 단편적인 진단 위주의 시각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 내부의 다양성을 한정 짓고, 특정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청년연구

에서 나타나는 편향적 현상은 청년연구에 있어 청년 당사자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녹아들어간, 청년들의 ‘성찰적’ 당사자성에 대한 연구로의 관심이 환기되어야 함을 요청한다.

4) ‘청년’이라는 범주가 일정 부분 생애주기적 성격을 지니기에 ‘청년’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과거 청년이었던 이’나 ‘지금 청년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 다 그 시절은 한 번쯤 겪어봤다는 식의 인식은 ‘청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연구자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듯하다. 특히 청년연구에서 범하는 오류 중 대다수는 현재의 청년을 낭만화된 과거의 청년과 비교해버리고 만다는 데 있다. 이러한 면에서 연구자의 당사자성이 두 가지 방향에서 고민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젊은 층의 당사자-연구자에 의한 접근을 전략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다. 이는 물적 지원과 함께, 고립을 호소하는 청년연구자들이 모여서 관계하고 연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당사자성에 대한 재구성이다. 이는 연구자의 위치성에 대한 성찰이 충분한 채로 연구대상인 ‘청년’을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이라는 연구대상이 평면적이고 인구학적인 범주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이해작용을 통해 구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과, 이러한 사회와 관계하는 인물로서 연구자 자신의 위치성을 인식하는 태도를 아우른다. 이는 줄곧 ‘청년’과 세대에 관한 연구들에서 저지른 오류로, 자세대-중심주의와 성찰성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4장에서는 기존 청년연구들에 대한 비판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진들이 고민하게 된 앞으로의 청년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언의 형식으로 풀어서 서술하였다. 크게 두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하나는 청년연구의 내적인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청년 당사자-연구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1) 다양한 학제에서 발전해 온 기존의 연구문제들 안에 연구대상으로서의 ‘청년’을 단순히 끼워 맞추는 형태가 아니라 청년연구라는 하나의 연구 분야나 연구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문제의식들을 다양하게 탐색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청년’이 20대/30대라는 연령층으로 이해되어 온 측면이 많다면, ‘청년’이라는 기표가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관계하고 있는 복잡한 측면으로 연구의 초점을 이동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청년문제나 청년연구가 대부분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세대 간의 경제 불평등에만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면, ‘청년’과 ‘청년’이 아닌 것 사이에 어떠한 상징 불평등이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청년연구가 ‘청년’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에서 특정한 연령을 가진 인구 전체를 ‘청년’이라고 정의하기 급급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동질적인 행위자들이 비슷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일종의 장(field)을 상징하고 그 내부의 세대적 동학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의 청년연구가 문제의 담지자로서의 청년을 진단하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주체로서의 ‘청년’이 수행적으로 ‘청년’ 문제에 관해 이해하려는 과정 자체를 연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연구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 정부(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대부분 박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문제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청년연구자의 문제도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공간,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우리는 청년연구자 레지던시나 청년연구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작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이상 우리가 수행한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수많은 청년연구들을 스스로 ‘청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오기도 했던 젊은 연구자들의 시각으로 다시 읽어보면서 비판하고 청년연구의 문제의식을 심화시켜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나온 하나의 시도였다. 이 글의 첫 장에서도 언급했던 바 있지만, 이 연구는 아마도 분명한 한계를 가질 것이다.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위주로 연구들을 추출했기 때문에, 분명히 ‘청년’과 이런저런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하고 있지만 ‘청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많은 연구들을 검토하지 못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논문들을 여러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보고, 또 그것의 빈틈을 찾아내고 비판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새로운 청년연구에 대해서 상상해보려 했지만 우리의 작업이 객관적인 정답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특별히 문제가 제기되어 오지 않았던 청년연구라는 영역에 문제를 가능하면 도발적으로 제기해보고, 그러한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혹은 이를 기각하고자 하는 다른 잠재적인 청년 당사자-연구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일 뿐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누군가가 자신의 ‘청년’에 대한 연구 관심에 혹은 ‘청년’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을 이해해 보는 데 조금이라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새로운 청년연구를 기대하면서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1. 학술지

- 가게모토 츠요시 (2016). 한일 양국의 위안부문제 ‘합의’에 대한 비판. <진보평론>, 67, 130-137.
- 강순희 (2014). 청년 여성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실태와 결정요인. <여성연구>, 87(2), 317-347.
- 강순희, 안준기 (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28(2), 201-231.
- 강진숙 (2008). 국내 인터넷 연구의 주제와 방법에 대한 메타 분석 : '인터넷 비평' 유관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2), 173-198.
- 공윤경 (2016).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소셜믹스정책과 대안 주거운동.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1), 31-42.
- 곽민주, 이희숙 (2015). 학자금대출상환으로 인한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155-182.
- 권혜영 (2016). 대출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과 노동시장 성과. <한국사회정책>, 23(1), 151-178.
- 금재호 (2012a). 청년취업난의 악화(I): 피해자는 누구인가? <노동리뷰>, 85, 17-38.
- 금재호 (2012b). 청년취업난의 악화(II): 일자리 질은 개선되었는가? <노동리뷰>, 89, 39-57.
- 금재호 (2013). 청년의 고용불안과 재취업. <노동리뷰>, 97, 66-82.
- 김도기 (2005). 정부보증 학자금 용자제도의 공평성 분석: 선발 전(前)단계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14(2), 167-205.
- 김민희 (2007).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14(1), 75-99.
- 김선기 (2014).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 세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화와 사회>, 17, 207-248.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1), 5-68.
- 김선아 (2010). 특집논문 : 청년 그리고 정치적인 것 ; 청년세대 영화의 정치적

- 상상력. <사이間SAI>, 9, 105-135.
- 김세균 (2010). 한국의 정치지형과 청년세대. <문화/과학>, 63, 47-65.
- 김성희 (2015).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 정책의 도구화와 반복되는 실패에서 벗어나기. <노동연구>, 31, 5-37.
- 김수미 (2016). ‘자원봉사 시민 (volunteer-citizen)’되기: 신자유주의 생존윤리와 청년세대. <언론과 사회>, 24(3), 128-177.
- 김수봉 (2011). 베이비 붐 세대의 소비실태와 고령친화 산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74, 28-37.
-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수정, 김영 (2013). 한국과 일본 청년층의 빈곤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0(1), 223-247.
- 김안나 (2002). 대학생 학자금 용자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한국교육>, 29(2), 455-475.
- 김안나, 김성훈 (2010). 대학생 선택에 미치는 학자금지원의 영향: 휴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1(2), 163-180.
- 김안나, 이병식 (2008). 소득수준에 따른 학생의 고등교육 선택의 차이와 학자금 지원의 효과. <교육과학연구>, 39(1), 67-84.
- 김영 (2016). 일본 블랙기업 노무관리 연구: 청년 노동자 갈아서 버리기의 기법과 확산배경. <산업노동연구>, 22(2), 243-282.
- 김영, 황정미 (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 이행기 청년들이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215-260.
- 김영배 (2016). 청년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경상논총>, 9(1), 51-67.
- 김영재, 정상완 (2013). 한국 역대 정부의 청년실업정책 비교 연구. <취업진로연구>, 3(2), 1-20.
- 김영재, 정상완, 박상록 (2012). 한국 청년실업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2(1), 67-89.
- 김용성 (2012). 고학력 청년층의 미취업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일자리 탐색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34(3), 67-94.
- 김원 (2015). 80년대에 대한 ‘기억’과 ‘장기 80년대’ : 지식인들의 80년대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9-49.

- 김유빈 (2015).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 <노동리뷰>, 124, 5-14.
- 김정주 (2015). 청년창업: 모두가 자본가가 되는 유토피아?. <진보평론>, 65, 349-366.
- 김종성, 이병훈, 신재열 (2012).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 <노동정책연구>, 12(2), 51-73.
- 김종진 (2014).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조합원 의식과 상태. <제112차 노동포럼 자료집>, 14(7), 28-53.
- 김주섭 (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5(2), 1-29.
- 김지하, 이병식 (2009). 대학생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의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3), 447-470.
- 김철식, 김준희 (2016). 부유하는 노동자: 시흥시 정왕동 1인가구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세계. <산업노동연구>, 22(1), 265-305.
- 김현동, 한용석 (2012).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중요성. <노동정책연구>, 12(4), 1-24.
- 김현준 (2015). 문화적 국가론과 개인의 정치적 주체화 - 한 청년정치운동가의 생애사 연구. <문화와 사회>, 19, 207-251.
- 김혜경, 이순미 (2012). '개인화'와 '위험':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성인기 이행'의 불확실성과 여성 내부의 계층화. <페미니즘 연구>, 12(1), 35-72.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179-212.
- 김효진 (2012). 서울 대학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연애. <도시인문학연구>, 4(1), 175-216.
- 남미자 (2013). 초원을 달릴 수 없는 경주마: 대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내러티브. <교육인류학연구>, 16(2), 155-192.
- 남상호 (2008).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분해 : 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제9회 한국 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27-556.
- 남수경 (2004). 소득 연동형 대여장학금 제도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교육재정경제연구>, 13(2), 1-26.
- 남수경 (2008). 대학생 학자금지원정책에 대한 진단과 재설계. <교육재정경제연

- 구>, 17(1), 293-317.
- 남재량 (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16, 22-33.
- 남재량 (2011a). 체감 청년 실업률, 몇 %나 될까? <노동리뷰>, 73, 46-58.
- 남재량 (2011b). 최근 청년 니트의 현황과 추이(NEET). <노동리뷰>, 72, 29-40.
- 노혜진 (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 류기락 (2012). 노동시장제도와 청년 고용 : OECD 주요 국가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보성, 1985~2010. <경제와사회>, 96, 252-287.
- 류장수 (2015).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노동리뷰>, 124, 31-45.
- 류준호, 윤승금, 이영주 (2010).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 연구 분야, 목적, 방법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0(1), 124-165.
- 류형림 (2015). '청년' 담론 속에서 '여성' 구출하기 : 20~30대 여성들의 일 이야기. <함께가는 여성>, 2015, 5-8.
- 문혜진 (2013). 외환위기 전후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5(1), 201-226.
- 민영, 노성중 (2013). 가치, 참여, 인터넷 이용 : 386세대와 정보화세대의 비교. <한국언론학보>, 57(2), 5-32.
- 박권일 (2009). 청년빈곤, 세대의 문제냐 성장의 단계나. <황해문화>, 64, 63-76.
- 박권일 (2012). 세대와 정당정치. <황해문화>, 74, 54-72.
- 박수명 (2013).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고용, 실업,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한국정책연구>, 13(3), 113-131.
-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10). 한국 청소년과 부모 세대 간 심리특성 차이 분석 : 생활목표, 가족관련 가치, 학업기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59, 79-113.
- 박재환, 박명수, 김대엽 (2012). 창업정책 현황과 창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경영교육연구>, 27(5), 1-30.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7(3), 1-23.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10-34.
- 박재홍, 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 코호트 분석. <한국사회학>, 46(4), 69-95.

- 박정훈, 정용운 (2010). 일반논문: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갈등관계의 시뮬레이션 분석연구. <행정논총>, 48(4), 325-355.
- 박지남, 천혜정 (2012). 청년세대의 ‘나 홀로 여가’ 문화. <여가학연구>, 10(2), 87-105.
- 반정호 (2006). 청년층의 저임금근로 지속성에 대한 고찰. <노동리뷰>, 13, 52-62.
- 배병우, 남진 (2013).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서울도시연구>, 14(1), 23-38.
- 배은경 (2015). ‘청년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젠더와 문화>, 8(1), 7-41.
- 성옥제 (2012). 국내 미디어 다양성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개념 및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9, 101-139.
- 성지미, 안주엽 (2016). 일자리 만족도와 이직의사 및 이직-청년층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2(2), 135-179.
- 소영현 (2012). 한국사회와 청년들 -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근대문학연구>, 26, 387-416.
- 손정훈 (2007). 프랑스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프랑스학연구>, 42, 347-370.
- 송부용, 김영순, 김기영 (2011).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요인분석-경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 19, 287-312.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사회>, 81, 35-60.
- 신광영, 문수연 (2012). 계급과 스펙경쟁.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 신선미, 민무숙, 권소영 (2013).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현황과 고용정책 과제. <취업진로연구>, 3(2), 41-63.
- 안홍순 (2016).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사회복지정책>, 43(3), 59-83.
- 양지윤, 정희정, 최석현 (2016). 청년 구직자의 취업 달성 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 고용서비스 알선대상자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4(3), 199-224.
- 오찬호 (2009). 공포에 대한 동년배 세대의 상이한 반응 : 2008년 촛불시위에서 20대를 이해하는 몇 가지 가설. <한국청소년연구>, 53, 357-381.
- 오찬호 (2010). 소외된 세대의 복원 : 386세대 “내(內)”에 대한 세대사회학적 접근

- 근. <사회과학연구>, 36(2), 113-137.
- 오혜진 (2013). 순응과 탈주 사이의 청년, 좌절의 에피그램. <우리문학연구>, 38, 463-488.
- 유형근 (2015). 청년 불안정노동자 이해대변 운동의 출현과 성장: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아세아연구>, 58(2), 38-77.
- 윤민재 (2014). 청년층 인터넷문화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4(1), 271-305.
-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 33-56.
- 이광석 (2011). 인터넷 한국의 사회운동 - 청년세대들의 미디어 문화정치.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1(7), 79-105.
- 이기형 (2010). 특집논문 : 청년 그리고 정치적인 것 ; 세대와 세대담론의 문화정치 - “신세대”와 “촛불세대”의 주체형성과 특성을 다룬 논의들을 중심으로. <국제한국문화학회>, 9, 137-179.
- 이기형 (2011). 청년세대의 삶과 소통의 위기 : 대학안의 내부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1(5), 269-297.
- 이기형, 김태영, 김지수, 박휘서, 유동림 (2013). 청년세대가 진단하는 정치·사분야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역할과 함의 - <나는 꿈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1(4), 46-106.
- 이기형, 송동욱, 구승우, 정준, 김지수, 이단비, 박주화 (2015). 청년주체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중심으로 한 구직 경험의 문화적인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72, 7-51.
- 이기홍 (2010). 양적 방법의 사회학. <사회와이론>, 17, 191-227.
- 이기홍 (2013). 양-질 구분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학>, 47(2), 1-30.
- 이기훈 (2012). 청년-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문화/과학>, 69, 139-147.
- 이길환 (2014).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 : 부산 소재 대학생들의 정치의식 분석. <공공정책연구>, 31(1), 225-252.
- 이다혜, 류용재 (2016). 청년세대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수용에 관한 연구 : ‘쿡방’과 ‘집방’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5(2), 181-221.
- 이동후 (2009). 사이버 대중으로서의 청년세대에 대한 고찰: 사회적 소통과 관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2), 409-448.

- 이병희 (2002).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 변화. <노동정책연구>, 2(4), 1-16.
- 이병희 (2011).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 17(1), 71-95.
- 이상봉 (2010). 부의 불평등 시각에서 바라본 연령 집단의 경제 불평등. <현상과 인식>, 112, 201-219.
- 이상봉 (2011). 경제 불평등 구조 분석 : 계급, 지역 및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5(2), 25-57.
- 이선민 (2016).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지원 정책. <여성가족패널브리프>, 39, 1-4.
- 이소영 (2012). 웹 2.0 시대 온라인 미디어의 정치적 역할: 대학생 유권자의 정치행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4(2), 89-116.
- 이승렬 (2015).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사회적 독립과정 연구>(정책자료 2015-04).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 이시균 (2011). 청년 일자리의 질 분석. <경상논집>, 25(1), 85-104.
- 이시균, 양수경 (2012).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향후 청년 고용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전망>, 84, 222-250.
- 이영민 (2010). 20대의 정치의식 특성과 정치성향의 형성경로. <사회연구>, 19, 9-43.
- 이유진, 김의준 (2016).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 <노동정책연구>, 16(3), 1-25.
- 이재경, 장지연 (2015). 한국의 세대불평등과 세대정치: 일자리영역에서 나타나는 정책주도 불평등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8, 15-44.
- 이창순 (2007). 한국사회 임시직의 분화와 이질성. <한국사회학>, 41(1), 94-123.
- 이태형 (2015).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월간 복지동향>, 196, 12-16.
- 이필남, 김경년 (201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1(2), 87-115.
- 이한솔 (2013). 대학생의 주거권을 말한다.“민달팽이 유니온”. <도시와 빈곤>.

102, 49-61.

- 이현욱 (2013). 청년층 여성의 취업이동과 불안정 고용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2), 105-118.
- 이현정 (2014). 비수도권 출신 예비 사회진출자의 졸업 후 주거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3), 155-164.
- 이현정 (2014).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청년 임차가구의 지역별 주거 실태 비교.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69-274.
- 임경지 (2015). 청년 주거 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월간 복지동향>, 196, 5-11.
- 장봄, 천주희 (2014). 안녕! 청년 프레카리아트. <문화/과학>, 78, 57-72.
- 전상진 (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세대 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 25(2), 193-230.
-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38(5), 31-52.
- 전상진 (2009). 2008년 촛불 현상에 대한 세대사회학적 고찰. <현대정치연구>, 2(1), 5-31.
- 전상진 (2010).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 독일 세대논쟁의 88만원 세대론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0(1), 127-150.
- 전상진, 정주훈 (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경로와 성장유형 : 서울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6), 261-285.
- 정미나, 임영식 (2010).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관련 변인에 대한 경로분석. <진로교육연구>, 23(2), 135-152.
- 정민우, 이나영 (2011). '가족'의 경계에 선 청년세대 - 성별화된 독립과 규범적 시공간성. <경제와사회>, 89, 105-145.
- 정성미 (2009). 20대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성 변화. <노동리뷰>, 52, 32-41.
- 정성미 (2010). 20대 청년 노동시장 동향분석. <노동리뷰>, 62, 32-44.
- 정순희, 임은정 (2014). 청년 1인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1-19.
- 정인숙 (2006). 3대 언론학술지에 게재된 방송정책연구에 대한 평가. <미디어, 젠더 & 문화>, 6, 109-135.
- 정준영 (2016).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월간 복지동향>, 207, 15-21.

- 정재우 (2014). 청년층 노동시장의 변화. <노동리뷰>, 111, 47-64.
- 정재우 (2015). 노동조합 고령화와 청년 취업자. <노동리뷰>, 126, 53-63.
- 정현상 (2015).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노동시장 이행실태. <노동리뷰>, 124, 60-75.
- 정현상 (2016). 청년층 경제활동상태 선택요인. <노동리뷰>, 140, 69-82.
- 조문경 (2015).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노동리뷰>, 124, 46-59.
- 지광수, 수홍걸, 송승이 (2009). 한국의 청년실업에 관한 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2(3), 39-59.
- 지은재 (2006).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3(1), 237-254.
- 천정환 (2016).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메갈리아’ 논쟁까지 - ‘페미니즘 붐기’와 한국 남성성의 위기. <역사비평>, 116, 353-381.
- 최계연 (2014). 빚쟁이 청년들: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대안 제시. <월간 복지동향>, 185, 23-29.
- 최을, 이왕원 (2015). 청년층 취업선호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관계 : 잠재집단분석과 생존분석을 통한 접근. <한국사회학>, 49(5), 1-44.
- 최은영 (2014).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와 주거복지 소요. <도시와 빈곤>, 107, 5-61.
- 최철웅 (2011). ‘청년운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66, 15-50.
- 한성민, 문상호, 이숙중 (2016). 청년취업 결정요인에서 본 청년 취업대책 개선책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187-212.
- 허석재 (2015a). 세대연구의 경향과 쟁점. <미래정치연구>, 5(1), 21-47.
- 허석재 (2015b). 역사인식의 세대차와 시대차 : 5.18 민주항쟁의 사례. <민주주의와 인권>, 15(1), 5-38.
- 허정민, 임수원 (2011). 인문, 사회과학편 : 장 보드리야르의 소비사회이론 관점에서 본 청년기 남성의 몸만들기.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0(3), 155-164.
- 홍명교 (2011). 대학의 위기와 대안적 학생운동의 전망. <문화/과학>, 66, 111-127.
- 홍서연, 안주엽 (2002). 청년의 학교 졸업후 구직기간의 분석. <노동정책연구>, 2(1), 19-46.
- 황상재, 박석철 (2004). 국내 인터넷 연구의 메타분석 : 연구 주제와 방법을 중심

으로. <한국방송학보>, 18(2), 68-92.

황용석, 박남수, 이현주, 이원태 (2012).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격차 연구 : 세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2), 198-225.

Bourdieu, P. (1985). The Social Space and the Genesis of Groups. *Theory and society*, 14(6), 723-744.

Curnutt, H. (2011). Durable participants: A generational approach to reality TV's 'ordinary' labor pool. *Media, Culture & Society*, 33(7), 1061-1076.

Field, J. (2013). Learning Through the Ages? Generational Inequalities and Inter-Generational Dynamics of Lifelong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61(1), 109-119.

Jaeger, H. (1985). Generations in History: Reflections on a Controversial Concept. *History and Theory*, 24(3), 273-292.

Kertzer, D. I. (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merican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Lamong, M. (2012). Generational Differences in Accounts of the Development of U.S. Cultural Sociology—Let Me Count the Ways: Response to Lizardo's and Mische's Comments. *Sociological Forum*, 27(1), 251-254.

Porter, T, M. (2003). Measurement, Objectivity and Trust. *Measurement*, 1(4), 241-255.

Wacquant, L. (2013). Symbolic power and group-making: On Pierre Bourdieu's reframing of class. *Journal of Classical Sociology*, 13(2), 274-291. 이상길·배세진 역. 상징권력과 집단형성 - 피에르 부르디외의 계급 문제 재구성에 관하여. <언론과 사회>, 21(2), 34-69.

White, J. (2013). Thinking generation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4(2), 216-247.

2. 학위논문

- 강다슬 (2013). <청년층과 고령층 간 고용대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창용 (2006).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공공직업훈련 개선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지영 (2005). <청년실업자의 진로타협 요인분석>.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승우 (2016). <도시 속의 청년 ‘난민’: 청년들의 ‘방’ 거주 경험에 대한 문화적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자준 (2015). <웹툰의 대학사회 재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현정 (2016). <청년 1인가구의 주거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혜영 (2016). <대졸 청년층의 내일배움카드제 참여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모 (2002). <청년층의 실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기희 (2006).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실업 증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선 (2014). <제주지역 청년들의 불안, 자기관리 및 유동하는 삶>.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삼열 (2016). <청년실업 대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책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연 (2013). <청년세대 문화정치운동: 자립음악생산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기 (2015).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신아 (2016). <청년 여성 불안정노동자의 생애전략과 노동서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집 (2014). <창업지원 정책과 고용률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진 (2014). <불안정 노동시대의 청년세대의 대응전략: 알바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의성 (2015).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령자 : 청년 분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목 (2016). <한국의 청년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중성 (2013).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의 계층화에 관한 연구 : 사회계층별 부모의 개입 전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만 (2013). <청년세대 정치참여로서의 반값등록금 집회문화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주 (2016). <대졸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 분석 : 집단중심추세분석을 통해>.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아 (2015). <청년 여성의 불안정 노동 경험과 “가족 실행” 전략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국현 (2013). <저출산,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및 희망임금에 관한 세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류연미 (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활동가의 실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혜진 (2012). <노동경력의 변화와 노동성과 : 노동시장 진입 코호트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민주홍 (2012).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교육투자 수익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나연 (2014). <NEET가 장기 노동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재 (2004). <청년층의 취업준비노력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친 영향 :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은진 (2012).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실험: 해방촌 ‘빈집’ 게스트하우스(guest's house)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논문.

- 박주연 (2010). <대안적 일터로서의 사회적기업 : 문화예술분야기업 청년종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찬주 (2016). <청년세대의 노동현실에 대한 의미생산과 해석적 위치 : 드라마 <미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연경 (2008).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본 한국 청년들의 글로벌 노동 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운철 (2012). <대졸 청년층의 지역간 노동이동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임선 (2016). <청년세대의 보수화 담론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희경 (2016). <청년 이직과정에 나타난 일 경험과 일의 의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연경진 (2009). <정보통신분야 여성 청년층의 이직의도와 이직행동 결정요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승현 (2015). <한국 청년의 임시 이주와 글로벌 이동 경험 : 아일랜드에서의 워킹홀리데이와 어학 연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보배 (2016).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가 청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수미 (2016). <텔레비전 토크쇼를 통해 본 청년세대 감정담론과 주체화 연구 : JTBC <마녀사냥>과 <비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은정 (2004). <청년실업 장기화에 따른 고학력자의 진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진선 (2014). <청년세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주영 (2015). <대학생 경제적 자립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은순현 (2016). <청년층 고용시장 행태 측정(분석)틀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은 (2006).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요인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계형 (2008). <대졸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동희 (2010). <청년실업자의 반복적 구직실패귀인과 진로신화의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승연 (2013). <웹툰이 재현하는 청년세대와 청년문제에 관한 연구 : 웹툰 <당신과 당신의 도서관>, <목욕의 신>, <무한동력>, <미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룡 (2014). <노동사회와 “협동적 자아”에 대한 연구: 90년대 ‘신세대’의 퇴사 경험과 서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수 (2013). <취업 자기소개서 나타나는 청년 구직자의 정체성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화 (2016). <일본 프레카리아트 문화 연구 : 2000년대 일본 청년문제의 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미 (2011). <청년실업자의 인적자본이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은 (2014).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직업경험과 생애전망에 관한 연구: 서울 4년제 대졸자의 학교-직장 이행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미영 (2015). <사회운동에서 공간의 탈영역화 전략: 마포 민중의 집과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유진 (2016). <고졸 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기영 (2008). <대학 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특성 및 이행준비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민지 (2015). <유동하는 세계에서 거주하는 삶: 20, 30대 여성청년 이주민들의 ‘집’의 의미와 장소화 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장천복 (2007). <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민우 (2011). <청년세대의 주거와 이동, 정체화의 불/연속성: 고시원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막래 (2005).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지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천주희 (2015). <대학생은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준호 (2007). <한국 고졸 청년층의 사회자본과 직업성취 : 개인적 연결망과 제도적 연결망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지원 (2015). <청년층의 경력 유형 연구 : 외환위기 당시 및 이후 코호트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승훈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서연 (2002). <청년의 학교졸업 후 구직기간 분석 :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석영 (2016). <대졸 청년의 희망임금과 노동시장 정착 : 첫 직장 입직과 이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정화 (2006). <대학생 사회의 정치화 모색: 2000년대 중반의 영역적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단행본

- 박경숙 외 (2013). <세대 갈등의 소용돌이>. 서울: 다산출판사.
- 박재홍 (2005). <한국의 세대문제: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파주: 나남출판.
- 우석훈, 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
- 이남석 (2013). 해제 - 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세대론. In Mannheim, K. 이남석 (역) <세대 문제>(98-133쪽). 서울: 책세상.
- 이명호 (2011). 남성, 남성성, 페미니스트 이론. In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43-65쪽). 파주: 문학동네.
- 전상진 (2013). 경제민주화와 세대 : ‘연금을 둘러싼 세대들의 전쟁’ 레토릭에서 나타나는 세대의미론과 활용전략의 변화. In 한국사회학회 엮음.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294-324쪽). 파주: 나남.
- 정세훈 (2012). 메타분석. In 한국언론학회 엮음. 〈융합과 통섭: 다중매체 환경에서의 언론학 연구방법〉(305-322쪽). 파주: 나남.
- 조향제 (2015). 질적 연구 방법론과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 In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 방법론〉(15-36쪽). 서울: 컬처룩.
- 천주희 (2016). 〈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서울: 사이행성.
- Blossfeld, H. P., E. Klijzing, M. Mills and K. Kruz. (eds.) (2005).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London: Routledge.
- Creswell, W. J. (2007). *Research Design*. 김영숙 외 역 (2011). 〈연구방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Denzin, N. & Lincoln, Y.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최옥, 김종백, 김민정 역 (2014). 〈질적연구 핸드북〉. 파주: 아카데미 프레스.
- Edmunds, J. & Turner, B. S. (2002). *Generations, culture and society*. Open University.
-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Denzinm N. & Lincoln, Y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105-117). US: Sage Publications.
- Herschman, A. (1972). Exit, Voice, and Loya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강명구 역 (2016).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퇴보하는 기업, 조직, 국가에 대한 반응〉. 서울: 나무연필.
- Mannheim, K. (1929). *Das Problem der Generationen*. 이남석 역 (2013). 〈세대 문제〉. 서울: 책세상.
- Polkinghorne, D. (1983). *Methodology for the Human Sciences: Systems of Inquiry*. 김승현 역 (2001). 〈사회과학방법론〉. 서울: 일신사.

Smith, C. W. (1989). The qualitative significance of quantitative representation. In Glassner, B. and Moreno, D. J (eds.). *The qualitative-quantitative distinction in the social sciences* (pp. 29-42). Netherlands: Springer.

4. 정책보고서

교육부 (2016). <2016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안>.

기획재정부 (2015).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세종: 기획재정부.

박영정 (2015). <청년문제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을 위한 기초연구> (기본연구 2015-36).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11). <창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세종: 지식경제부.

신윤정, 권지웅, 정준영, 김민수, 황서연, 한영섭, 송효원 (2015). <청년정책의 재구성 기획연구 - 서울이 만드는 다음 세대의 여지, 청년이 만드는 다음 사회의 공공>. 서울시청년허브 보고서.

이수욱, 김태환, 황관석, 변세일, 이형찬 (2015).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기본 15-03). 안양: 국토연구원.

채태준, 김선기, 박경국 (2016). <청년상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대안 모색>. 시흥: 시흥시 정책리포트.

하규수, 김도현, 유병준, 진선진, 박배진, 강제현, 김수진 (2013). <국내 창업정책의 변화 및 평가>. 대전: 창업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청년층-남녀 정치의식>. KWDI Brief.

한국창업경영연구원 (2011). <청년창직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부록1> 청년연구자 콜로키움 질의응답 모음

이 연구과정에서 진행되었던 7회의 <청년연구자 콜로키움>의 질의응답 속기록 내용을 공유한다.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다면 속기록만으로는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소개하는 까닭은, 작은 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서 발표자들이 게재한 연구를 검색해 보면 된다.

[1회차] - 청년X젠더

발표 1: 장민지(연세대)

“젠더 감수성과 여성 청년, 젠더 무의식에 대하여”

발표 2: 김현아(성공회대)

“청년 여성의 불안정 노동 경험과 ‘가족 실행’”

질문자 1: (종합 토론) 여성의 성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의 이야기를 해야 하고, 노동의 전반적 구조를 이야기하다 보면 소비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표자(장민지): 질문에 대해 공감한다. 노동환경이라는 것이 임금노동에 치우친 게 아니라 (가사노동의 경우처럼) 노동생산성을 갖지 못한다는 인식이 계속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실질적 노동환경에 대한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게 있었다. 스펙트럼을 넓힌다면 이 부분을 좀 더 다룰 수 있지 않을까. (...) 우리가 꼭 임금노동이 아니더라도 그 노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발표자(김현아): 장시간 노동은 한국에서 풀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OECD 국가 중에 1~2위 왔다갔다 하고. 노동시간에 대해 세대 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최근 제가 하는 연구가 제조업 노동자의 세대 간 인식연구인데, 청년 제

조업 종사자들 중에서도 많은 급여보다 내 시간을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여러 사업장, 직종마다 이게 세대문제로 등장할 것 같다. 장시간 노동문제를 꺾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하신 파트타임노동의 전면화 같은 정책적 모색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질문자 3: (두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인데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결혼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왜 자기가 결혼을 했을 때 육아를 본인이 부담함에도 합리적이라고 느꼈는지 의문이 들었다. 첫 진입에서의 경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합리화를 시도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 이 선택을 좀 더 선명하게 보려면 비혼자나 결혼을 선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발표자(장민지): (두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궁금한 게, 결혼이라는 게 경제적 안정성을 준다고 확신한다는 부분 자체가 흥미롭다. 대부분 나의 친구들의 결혼이 경제적 안정성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비자발적 비혼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족제도 속에. 이 사고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가. 이 친구들은 결혼을 당연히 전제하고 노동시장에 임한다는 것인데.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결혼제도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요인을 갖는가.

발표자(김현아): (연구 참여자의 사례) 결혼을 선택할 때,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인데, 원가족에서 독립해서 쪽 사는 삶을 선택할지, 아니면 결혼자금으로 돌려서 몇 년간 사귀어오던 남자와 결혼을 선택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던 것이 '이런 거지 같은 일자리'였다. 노동시장에서 나를 이렇게 저평가하는데, 뭔가 성취만큼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파고를 계속 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일보 후퇴'적 측면이 있었다.

질문자 4: (두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청년 여성의 1차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1차 노동시장이 누구나 진입하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의도가 궁금했다. 저는 파트타이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발표자(김현아): 1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고 한 부분은, 청년 여성이 자기 능력껏 들어가고 싶으나 채용과정에서의 구조적 차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역량과 관계없이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스무 명 중에 여자 1명, 끼워주기 식이라거나, 채용과정에서 필수로 영업직을 버티고 마케팅으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성차별적인 고용 관행이 아직까지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한 정책은 현재 없다. ‘종이호랑이’ 같은 법 정도만 있다. 미국 같은 경우 EOC라 해서 고용기회평등위원회라는 강력한 기구, 국가인권위원회보다도 센 기구, 인종, 성, 연령, 갖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고용상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내리고 강한 시정 조치를 가할 수 있게 하는 기구다. 그 모델처럼.

질문자 4: (두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인가, 어떤 평등을 줄 것인가가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 1차노동시장이란 특정 계급의 특정 여성에게 국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자리 자체를 많이 준다고 해서 여기 나온 모든 여성들이 거기에 속할 수 없지 않을까. 같은 기회를 같이 주는 것보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동등한 대우를 갖게 해야 하지 않는가.

발표자(김현아): 그 부분에 동의하지만 저는 두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기회의 평등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요즘의 고민은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 여성노동자들이 전일제가 아니더라도 일을 지속하면서 적정임금을 받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에 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배타적 불/필요나 선행/후행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한다.

[2회차] - 청년X담론

발표 1: 김선기(고함20 청년연구소)

“청년세대’ 담론에 대한 질문들”

발표 2: 김예은(고려대)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청년 연애”

질문자 1: (첫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연애란 과연 무엇으로 정의해야 하는지?
발표자님의 생각은?

발표자(김예은): 예전에는 이성애적 관계에서 남녀가 만나고 데이트로 이어지고 결혼하는 것이 연애라는, ‘서사’로서의 연애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다양한 관계 맺기의 단계들 자체가 ‘연애’라고 불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에 의거해 다양한 친밀함, 혹은 이에 반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크게 여기서 (이것이 연애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인 면면들을 보고 싶었다.

질문자 2: (첫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하고 싶다. 3포 세대의 연애 불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이성애자 남성의 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연애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은 남성이었던 것 같다. 남성의 시각에서 부합하지 않는 여성을 악마화하면서 연애의 기준을 말한 것인데, 그와 동시에 ‘올바른’ 연애를 하자라는 것도 남자, 고통을 토로하는 것도 남자였다. 지금도 미디어나 웹툰 등 많은 플랫폼에 나오는 ‘3포’ 청년의 특성에서 디폴트 성별이 대부분 남성이다. 제 생각은 연애 불가능성이 분명 존재하지만 이를 자조적 감성으로 발산하며 주장하는 담론의 주체는 남성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봤던 선행연구 연애 담론은 대부분 여성을 다뤘는데, 이 페이퍼에는 남녀 모두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혹시 젠더에 따른 차이는 없었는지?

발표자(김예은): 제가 포인트를 잡았던 것은 젠더까지 끌고 오면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세대론’ 자체에 대해 집중하고 싶었다. 신자유주의 사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있었는데, 분명 젠더와 같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솔로대첩부터 다 이어서 엮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질문에 대한 답은 남성 여성의 차이를 발견했는가를 물으셨는데, 인터뷰 대상이 많지 않아서 유의미한 차이를 이야기하기는 부족하다. 젠더를 중심으로 두고 한 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젠더의 수행성, 자기계발 주체의 수행성을 더 강조해 보려 한 점이 있었다. 그 부분은 아예 연구 질문을 달리해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질문자 3: (두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질문은 아니고요. '청년' 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위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생각되었는데, 인상 깊었던 페이스북 글이 있었다. 예술가가 자살을 했는데 월세에 혼자 살았으면 '생활고' 때문에 가난해서 죽었다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담론이 형성된다. (...) 분명히 개인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이 있을 텐데 모든 죽음들이 '경제'로 환원이 되니까. 예전에는 예술가들이 죽을 때 낭만이 있었는데, 젊을 때 죽으면 경제적 약자로 표상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쉽다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흥미로웠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론의 영향이 이렇게 작용되나 하는 사례여서 말씀 듣고 싶었다.

발표자(김선기): 다 말씀해주시고 질문을 던져주셨다. 좋은 사례를 말씀해주신 것 같다. 예술가에 대한 담론이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다 하는 연구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을 담론 연구자들은 '절합' 혹은 '접합'이라는 용어를 쓴다. '예술가'와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긴밀하게 접합된 상황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고, 어떠한 것들을 서로 접합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청년들 역시 '청년' 담론 속에서 청년이 사라지고 타자화되는 지점을 생각하는 것. 저희 세션 말고 (오늘) 메인 세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했을 것 같다. 청년을 세대로 가뉘어서 특정한 연령대를 청년 혹은 청년정책의 대상으로 보았을 때 갈등이 유발되는.

질문자 4: (종합 토론) 청년연구를 하면, 청년이라는 언표에 애정을 느끼면서 '신화화'의 위험도 생길 것 같은데, 연구자로서 어떻게 긴장을 유지하나?

발표자(김예은): (청년이라는) 연구대상을 신격화하지 않되 그 안에서 저항성이나 전복성을 발견하고 싶은데, '삼포 세대론'이나 '리퀴드 러브'에 대한 대항 담론을

만들고 싶은 것이 있다. 연구자는 제 생각에 특정한 실천을 맥락화하고 의미화하는 작업, 그 과정을 기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인 것 같다. 이번 페이퍼를 준비하면서 대항담론으로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일상성’이 얼마나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기존 담론을) 반박하고 무조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그런 맥락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치 않을까 한다. 전복성과 저항성 사이를 그렇게 외줄타기 하는 것.

발표자(김선기) :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연구대상으로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청년이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 청년이라는 연구주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와 고민이 많다. 분명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주제를 ‘내가 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저도 (청년의) ‘저항의 가능성’이나 ‘대항 담론’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글을 읽으면 쉽게 반박거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의 가능성을 쉽게 찾기보다는, (거대 담론 속에서 청년의 접합과정을 보는 것.) 청년과 어떤 개념들이 접합이 되었지만 매 순간 무언가가 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저항의 가능성은 매 순간 열려 있는 것 아닐까.

[3회차] - 청년X정책

발표1: 박경국, 채태준(고함20 청년연구소)

“청년정책 들여다보기”

발표2: 천주희(<우리는 왜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가> 저자)

“부채로 본 청년/세대”

질문자 1: (첫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젠트리피케이션’과 ‘젠트리파이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표자(채태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웃음) ‘젠트

리피케이션'은 계급적으로 노동자/프롤레타리아의 공간 속에 자본가 계급이 침투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공간을 떠나야 하는 개념이다. '젠트리파이어'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추동할 수 있게 동력을 제공하는 행위자다. 예술가 집단, 하위문화 계통의 창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간에 자본이 유입할 수 있을 만한 문화적 특이성을 가진 집단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정책이 주도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도 한다.

질문자 2: (첫 번째 발표에 관한 의견) 1) 창업지원이 어떻게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2) 정책과 이론 사이의 괴리 3)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1) 사회적 자본이 한국은 거의 부재상태에 있다 보니 청년들은 (지식기반 산업에 대한) 창업을 꺼려하고 비교적 적은 인력과 적은 돈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직종에 몰리게 된다. (...) 결과적으로 청년 창업이나 취업정책은 재창업이나 스타트업 위주-정보사회와 연관되어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취업지원도 병행해서.

2) 현실과 정책 사이의 괴리는 청년층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 청년층의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어져서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년층이 정치/정책에 개입해야지 현실과 정책 사이 괴리가 줄어들 것 같다.

3) 앞으로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은 더 줄어들 것 같다. (...) 대학을 가니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취업은 안 되고, 취업했는데 빚을 갚으니까 재대출을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대학 자체가 사회적 경제적 지위 상승에 메리트가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부채세대의 자식들은 대학 진학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대학은 스스로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을 불가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발표자(박경국):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바에 동의한다. 다만, 창업생태계에 있어서 지식기반 산업의 수요를 늘린다고 해서 창업환경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주목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소멸' 단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재기의 경험이 사장되어 버리고 있는 현실들. 또 투표율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2010년 이후의 증가율이 많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게 청년들의 요구안과 많이 맞닿아 있었냐에 대

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일하고 모호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린다기보다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접근했기에 정책의 효용성이 없지 않았나, 라고 느낀다.

발표자(천주희): (첫 번째 발표에 관하여) 질문이 두 개 있고, 다른 하나는 코멘트 같은 것인데.

1) 경제적 약자로 청년을 의미화하는 것을 한계라고 지적하셨고, 마지막에는 청년빈곤의 세분화를 이야기하셨다. 여기서 약자와 빈곤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피해자화’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반감이나 담론에 대해 저항하고 싶은 마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인 듯한데, 경제적 약자를 빈곤으로 바꾼다 하여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2) 유독 담론의 장 안에서 기성세대/청년세대의 충돌이 일어나거나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있는 듯하다. 연구자들의 경우 다소 이 문제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듯하다. 그게 세대 간 투쟁으로 의미화되면 안 되는지 사실 의문이 든다. 아랫세대가 계속해서 투쟁을 요구하는 것은 윗세대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언론이 키워드를 자극적인 것으로 속이는 과정 속에서, 부채, 경제 주거와 같은 문제에 대해 각 세대들이 진지한 토론이나 합의를 끌어내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저는 좀 싸워도 된다고 생각해서.

3) 코멘트의 경우, 청년세대 내부의 하위집단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만 분리시키는 때도 있고, 이게 어떻게 경합하는지를 보는 장도 있어야 하는데 발표에는 그게 없는 듯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하는데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속한 단체들과 비/자발적으로 모여서 의제화하는 장들이 어느 선까지는 정책으로 통과가 되고 어느 선까지는 안 되는지. 혹은 그 경합의 장을 구성하는 주체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주목과 관심으로 가지 않나. ‘배제’라는 말은 항상 쉬운 듯해서이다. 그 안에서 누가 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청년들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배제된 집단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

질문자 3(김선기): 제가 느끼기에는 ‘청년정책’이라는 범주는 청년들이 표를 많이 주고와 상관없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유행을 탔던 부분이 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서 느낀 것은 지금 상황엔 ‘담론’에 대한 제대로 된 생산자가 없다는 느낌이다.

청년에 관련된 정책을 분야별로 하는데, 청년과 평생교육, 부채, 주거를 카테고리를 말로 이어주는 게 사실 어려운 일.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것들은 기성세대를 치우고 ‘청년질’을 하는 것처럼 상상되니까, 청년이라는 말이 이미 유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을 만들어갈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 쓸 때도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런 배경이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천주희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 ‘연구자 레지던시’라는 부분에 굉장히 동의가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예컨대 청년 상권 활성화와 청년이 역일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권 활성화의 임무를 가지고 안 좋은 조건, 청년실업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서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는게 사실이다. 또 예술계 레지던시 역시 예술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이러한 레지던시는 지자체에서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정책의 가능성은 있는데 어떻게 좀 그것들을 정당화를 잘하고, 저희 입장에서 잘 맞는 것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이 있다.

질문자 4: (의견) 청년들이나 기성세대나 서로 억울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청년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학자금대출 다 받아서 상환하기엔 월급이 너무 적다. 나는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갚아야 할 게 이만큼이니. 기성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로는 ‘니네들이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내면을 보면 기성세대는 정말로 ‘교육’이란 것 자체가 없었을뿐더러 우리 세대보다 더 심하게 노동착취를 당했던 세대다. 그게 당연했었고 기술 하나만 가르쳐 달라고 그런 식으로 배웠던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서로 교류가 너무 없다. 중간에 업데이트가 안 되었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세대가 바뀌어도 이야기를 안 하면 막힐 수밖에 없기에 세대 간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4회차] - 청년X주거

발표1: 마민지(한예종)
“도시/공간의 고현학(考現學)”

발표2: 구승우(경희대)
“도시 이주 청년들의 ‘방살이’ 경험과 감정구조”

질문자 1: (첫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마민지 선생님을 문화연구캠프에서 2012년에 뵈었다. 성북동 재개발, 밀려나야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작업이 인상 깊었다. 이번 기획은 자신에게 렌즈를 돌린 것 같다. 자신에게로 렌즈를 돌린 계기가 궁금하다.

발표자(마민지): 우연하게, 아버지가 부동산 브로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어머니도 부동산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계셨다. 부모님이 그동안 하셨던 집 장사에 대한 사적인 기억들로부터 질문이 시작 됐고, 집 장사가 어떻게 돈을 벌게 해주었는지에 대해 자료조사나 리서치를 진행했다.

질문자 2: (첫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고현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두 가지가 궁금하다. 하나는, 고현학의 장점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논문을 낼 때 쉽게 정당화가 안 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론으로서 정당화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고현학을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다.

발표자(마민지): 연구자가 아니라 작업하는 사람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훑은 다음에 작업을 한다. 고현학이 질적 방법론과 유사하지만 약간은 다르다. 본격적인 작업 전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카메라를 메고 나가서 바라본다. 그때 고현학이나 문화연구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바라보면 줄기가 보인다. 저에게는 고현학은 라포를 형성하기 전까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줄기를 파악하기 위해 들고가는 방법이다. 정당화나 그런 부분은 갈증이 있다. 이론 기반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다. 어떻게 논문이나 작업에 방법론을 연결

지어야 할지 고민이다.

질문자 3: (두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정민우 선생님의 논문이나 책과 접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민우 선생님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에 산 청년들에게 집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발표자는 방살이 경험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감정구조를 이야기하신 것 같다. 발표 끝나고도 첨언을 하셨는데, 두 연구 간에 명확한 차이점을 찾기 힘들었다. 정민우 선생님은 집의 ‘의미’를 발표자는 방살이 ‘경험’이라고 하셨다. 의미는 행위자가 행위를 해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면, 발표자가 말한 경험은 방의 공간적 규율에 대한 것이다. 주관적이고 의식적인 해석 밖에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방 꾸미기’ 경쟁에서 드러나는 아비투스(habitus)가 있을 것 같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의 위계, 상징적 분화를 행위자의 주관적 해석뿐 아니라 그 외의 것, 이를테면 무의식, 제도적 규율까지 포괄하기 위해서 제시했다. 이런 논의를 끌어낸 것처럼, 발표자가 의미가 아닌 경험에 방점을 찍은 것이 정민우 선생님과 구별되는 차이점인지 궁금하다.

발표자(구승우): 정민우 선생님의 글을 읽고 “고시원만 이럴까?”란 생각이 들었다. 체념의 정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거 상향 사다리와 관련지어 생각했다. 고시원에서 원룸, 원룸에서 오피스텔, 오피스텔에서 빌라, 빌라에서 아파트 이런 상승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 정민우 선생님의 연구는 고시원이 연속과 불연속의 공간이라 했는데, 고시원 외의 공간에서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라는 최초의 질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방 안에서 공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정민우 선생님의 논문과 매우 흡사했다. 정민우 선생님 논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집에 대한 규범적인 의미가 균열된다는 분석이 대안적 문화정치적 실천의 뉘앙스로 연결됐던 부분이다. 나는 그런 해석에는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균열이 꼭 대안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물질 조건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질 조건의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체념의 정서, 감정구조 등을 가져왔다. 이 논문을 썼던 ‘헬조선 담론’의 정서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랬던 지점에서 정민우 선생님과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계급분화가 면밀하게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자 4: (첫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마민지 선생님께 궁금한 것이 있다. 사는 곳 주변 공간에 관심 가지고 역사적인 흐름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공간을 대하거나 볼 때 연구를 한 이후에 관심이 변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발표자(마민지): 젠트리피케이션을 성북구에서 작업을 했었다. 마을에 문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다. 재전유를 위해 참여한 지역 활동가들도 있었지만, 고유하게 있던 많은 것들이 황폐화되었다. 그런 관심을 거쳐서 최근에는 복제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다. 제비다방이 사라지고 다시 다른 곳에 생기고, 비슷한 것들이 사라졌다가 또 다른 곳에 생긴다. 젠트리피케이션과 복제의 관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

질문자 5: (종합 토론) 옛날 청년들도 큐브에 살았다. 큐브가 현재의 특수한 경험은 아니다. 청년 주거 정책을 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난감한 것은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반박이다. 과거와의 비교 속에서 청년 주거 정책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또 있다. 공간이라는 것도 관계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옆집과의 관계, 서울과의 관계 등등. 이렇게 우리는 공간에 있을 때 항상 어딘가에 접속되어 있다. 이런 관계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

발표자(구승우): 청년 주거를 생각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집/방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대학가 주변의 주택 건물주들이 실제로 어디 살고 있고 임대료 수익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조건으로서의 방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다. 대학가 주변 원룸의 임대료도 학교를 걸어서 갈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임대료 역시도 (주변 환경과의) 다른 관계성에 걸쳐 있다. 또 다른 관계의 측면에서 금융화, 도시형 생활주택 혹은 건물주들 간에 어떤 식의 커넥션(관계)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주거를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많은 부분이 얽혀 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공공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마민지): 주거사다리의 과정이 끊어졌다는 사실이 이번에 작업하는 다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부모님은 열악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내게 땅을 사주

졌다. 사다리가 끊어졌음에도 공간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체화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땅을 사준 것이다. 세를 주고 있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입장에 공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체화의 차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해야 한다.

질문자 6: (첫 번째 발표에 관한 질문) 제목 ‘버블패밀리’의 ‘패밀리’란 단어가 흥미로웠다. 자식에게 땅을 사주고 만만치 않은 보증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중산층의 꿈이 붕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정상가족’에 대한 열망이 이런 행태와 상관관계가 큰 것 같다. 지금 청년세대에 있어서 정상가족, 중산층 가족을 꾸리고 싶은 욕망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열망이 부모세대와 비교해서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발표자(마민지):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정상가족이 붕괴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미 붕괴된 상태이고 앞으로는 더 망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5세션] - 청년X진단

발표1: 김지수(경희대)

“냉소로 생존하기: 청년들의 ‘자소서’ 작성경험 분석을 토대로”

발표2: 최태섭(성공회대, <잉여사회> 저자)

“10년간의 ‘청년질’은 무엇을 남겼나”

질문자 1: (종합 토론) 청년은 연구대상으로서 무엇이고,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청년연구가 나아지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초에 했던 청년 기획도 청년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총선용 기획이었던 것 같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경험적 분석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로만 남아있는 것 같다. 청년이라는 단어를 좀 더 쪼개서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단어라는 말로 변화한 삶의

구체적인 결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발표자(최태섭): 작년 11월에 <한겨레>와 <경향>에서 전화가 왔다. 신년특집으로 청년을 할 것인데, 의견을 달라고 했다. 나는 그만하라고 대답했다. 특집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힘든 것이 아니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들었다. 언론에서 조명할 수 있는 종류의 부분은 다 조명했다고 생각한다. 말을 할 수 있는 해법도 이미 많이 말했다. 담론 자체에 힘이 실리지 않을 뿐인 것 같다. 다만, 청년들을 모아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일 수는 있을 것 같다. 대체로 사이가 안 좋다(웃음). 억울하다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사람들도 많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관심도 많이 없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공통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잘 없다. 그런 자리를 만들려면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다. 나는 1년에 천만 원 번다. 현실적인 문제, 지니고 있는 힘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운동과 담론 모두 힘을 못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의 대중적 관심이 적으며, 정책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헛소리다. 학회는 어르신들 소유가 아닌가. 젊은 연구자들은 단독으로 발표도 못 한다.

질문자 2: (종합 토론) 지수 선생님의 발표에 나온 인터뷰이의 이야기에 많이 공감했다. 나도 자아가 분열되는 느낌이 있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촛불집회에 나갔는데, 이 경험은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도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 경험도 쓸 수 없을 것이라 자기검열을 했다. 기업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자기검열을 체화한 사람을 기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촛불집회를 나가면 백만 명이 하나의 시민이 아니라 다 각자라는 생각이 든다. 학생, 청소년 모두 점이다. 우리들끼리 연대하고 있지 않다. 청년이 정치세력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세력화가 되어야 할까?

발표자(최태섭):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게 시대정신이 된 것 같다. 억울함이 무서운 게 연대와 연민이라는 감정을 막아버린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한다. 청년문제에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든다. 청년 당사자

들의 분열이나 싸움의 양상은 자신만의 억울함의 싸움이다. 모두 각자의 억울함이 있는데, 내 억울함밖에 안 보이는 것이다.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개개인의 심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런 감정구조가 생긴 것 같다. 나의 억울함에 집착하고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들 생각한다).

질문자 3: (종합 토론) 최소한으로 합의된 ‘각자도생’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시민들이 임계점을 넘어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게 또 다른 각자살기가 될지, 아니면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공통점이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대의 길로 유도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표자(최태섭): 혁명을 해야 한다고 칼럼에 썼지만, 결국 시스템의 재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건 세월호 이후다. 게다가 게이트 비리가 터지는 와중에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 재조직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쌓아온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을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모두 마음을 먹는다면 지금부터가 0월 0일 0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혁명, 혹은 그것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라면 박근혜가 퇴진해도 나라는 절단날 것이다. (시민 간) 대화의 의지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6회차] - 청년X운동

발표1: 류연미(서울대)

“시민성 학습 기획으로서의 청년 활동: ‘서울시청년허브’의 경우”

발표2: 정보영(중앙대)

“사회운동의 프레이밍 전략에 따른 제도담론의 변화: 청년유니온의 사례”

주제1: 청년운동 관련 논의

질문자 1: 앞으로의 세대는 과거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집단 의식이

약화될 것이다. (...)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사회운동이 과거에는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단체 중심 깃발로부터의 탈피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개인의 고민이나 노동조건을 해결하거나 개인 단위로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이번 촛불집회 역시 깃발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모래알과 같은 개인들 중심으로 이들 사이에 어떤 연결을 조직해서 해 나가야지, 어떤 조직을 중심으로 해 나가는 건 전략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발표자(정보영):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전의 촛불집회에서는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촛불에서는 노동조합이나 개인 단위의 시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다고 느낀다. 깃발을 흔들고 앞에서 이끌려고 하면 시민들은 당연히 거부감이 있다. 이제는 조직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노총 계신 분과 이야기해 보면 이번의 전략으로 삼은 것이 이끌고 나가는 노조가 아니라 반 발짝 정도만 앞서서 판을 만들거나 제시를 하는 정도로, 혹은 같이 가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매주 대규모 인원이 시위를 나오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 저는 여전히 조직 중심에서는 벗어났지만, 조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느끼고, 계속해서 이런 대규모 집회를 통해 변화의 가능성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제도변화까지 이끌어내려면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 앞으로도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자 2: 개인의 참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해 주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응집력이라는 것을 조직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직이 중심을 잡아 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조직이 있으면 개인이 따라가는 것이 종속적이고 느낌 자체가 그쪽을 추종할 정도로 따라가는 느낌이라면 요즘의 개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지 조직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다.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되 개인의 역할에 따라 맞춰줄 수 있어야 하지만 아예 없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질문자 3: 저는 ‘조직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다. 조직이라는 개념이 사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디어 플랫폼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조직이라는 단어나 기표 사용의 자체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느낀다. 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식으로 상상을 해보면 이해가 갈 수 있을 듯하다.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을 이념, 최소한의 동의선 아래에서 협동조합 처럼 같이 움직이는 맥락이었다면, 조금 그 상태를 탈피해서 우리가 로그아웃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주체가 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가 변화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상이 어려웠으나 이 시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자(김선기): 각자 조직에 들어있는 운동가가 아니더라도 사회운동에 조금씩 참여하고 있지 않나. 단체활동을 하기도 하고 광화문에 나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질문자 3: ‘느슨한 연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개인의 결심과 사회운동이 뭐가 다른가라고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 조직에 소속되거나 규율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함께하면 되고 그 외에는 혼자 하면 되고. 그렇게 개인이 결심하는 부분에, 자신의 신념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조직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깃발이 되어간다’는 시가 있는데,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대로 소신껏 행동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가 되고, 그런 조직이 어떤 이념을 두고 내 뜻에 동의하라면 동의하라고 할 수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조직, 지금과는 다른 또 다른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발표자(류연미): 저희가 지금 다 놀랐지 않나, 지금 사태에 대해서. 동시에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 사안처럼 정말 온 국민이 합심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못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232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 평화시위라는 프레임에 집회 나오는 국민뿐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다 지지하고 있다. 운동의 일환으로 경찰버스에 꽃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를 떼려는

행위가 평화시위를 지키기 위한 사후적 노력인가 이전 운동방향과의 단절인가 말이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만 보고 안전하고 착하고 정해진 틀 속에서 길들여진 시민들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 전략이 먹혔으니까. (...) (운동가들이) 이전에는 이곳에 나온 시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가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232만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면 이 전략은 사실 통하지 않는 것.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평화시위라면 먹힌다’는 관념이 박힐 위험이 있다. (...) ‘순수성’ 관련된 논의와도 연결되는데. 그건 중요한 사안이 맞지만 기존의 집회를 주도하던 조직 위주의 주체들이 ‘불순’한 건 아니지 않나. 이 사이에서 우리들끼리 논의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이번 사건의 여파가 큰 나머지 앞으로의 청년들, 학생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될는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질문자 4: 말씀해주신 바에 공감하고 있다. 양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치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주시하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압박이라던가, 시민들의 연대적인 압박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사회운동들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평화시위 프레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는 조금. 고민을 같이 해봐야 할 것 같다. ‘관심의 연대’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

질문자 5: 지역에서 청년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은 소도시에서 청년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다. 근데 아까 서울시청년허브나 청년유니온과 같은 것들 저는 되게 생소하고, 저희 같은 경우 강릉시 예산을 보니 청년에게 분배되는 예산이 0원이었다. 아예 없다. 청년에 관심도 없고. 그러한테 지난 총선 때도 정책 변화를 이끌어보자 해서, 청년으로만은 50명이 모이기 힘들어서 중고등학생까지 홍보해서 어떻게 끌어서 50명으로 원탁회의를 했는데. 시청과 교내에 홍보를 했지만 아무도 와주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청년’이란 이름을 버리지 않는 것들이 이점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청년’을 빼고 저희가 지역을 위해서 문화, 예술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관심을 개인적으로나마 갖는 경우가 있었다. 이게 도시와 지방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사회자(김선기): 말씀을 들어보니 크게는 그런 문제가 있는 듯하다. ‘청년’으로 했을 때는 못 받았지만 ‘지역’이나 ‘문화예술’로는 (지원을) 받았다. 청년운동만의 문제기도 하지만 사회운동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물질적인 것이 필요할 때 결국은 공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 상황들이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

발표자(정보영): 저는 청년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지 않기보다는 오히려 청년이 정치적 주체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제왕적 지자체장의 구조는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그걸 이용하려면 선거를 통해 어쨌든 당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 3: 조직화된 조직이 아니라 이걸 해보고 싶은데 혼자 힘은 없으니까 같이 해 줄 사람이 필요해, 지금 우리가 같이 <녹색평론> 읽기 이런 걸 하고 있다. 함께 읽어주고, 다른 사람이 뭐 해보고 싶다고 하면 같이 해보고. 지역에서 시국 대회를 매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무원이 연설할 때 우리가 피켓을 들고 가서 서 있는다거나. 작은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 과정을 통해 조금씩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예술행동 등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 운동이라는 게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청년들이 더 단합이 잘 되고 모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게 조금은 못마땅하긴 하지만(웃음) 그런 문제를 통해서 조직이 또 다른 항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주제2: ‘청년’이라는 말이 과연 효과적인가? 사회 및 제도권과의 관계에 있어 청년이라는 말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가?

발표자(류연미): 청년이라는 말에 너무나 많은 기의가 붙어있는 게 힘든 면인 듯하다. 예컨대 청년수당에서 청년이라고 했을 때 밖에서 청년을 일단 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지 않다. 안쪽의 정책들은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보았을 때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노숙자나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과 동질한 집단으로 전혀 보지 않고. 이미 ‘청년은 역사에 맞서고 불의에 굴하지 않고’ 이런 의미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잘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책과 기사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다들 공감하지 못한다. 모두가 청년이라는 말에는 이런 기의가 있고 너도 이런 기의이길 바라며 쓰고 있다고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질문자 5: 저는 청년이라는 기표가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젠더불평등이라고 하지 않고 여성불평등이라고 하는 이유, 평등권이 아니라 동물권을 쓰는 이유와 비슷할 것이다. 그 단어 때문에 싸워야 할 일들이 활동력을 소진시키는 듯하다. 특히 시간의 묶음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이로 범주화되면서 나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거기에서 오는 청년은 이래야 돼라는 딱지.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겨지고, 뭔가 ‘낄끼빠빠(웃음)’처럼 약자로 호명되는 집단을 적극적으로 호명해야 하고 이것을 나이와 묶어서 생기는 오류들을 분별 있게 대응하여야 하지 않을까.

사회자(김선기): 제가 석사논문을 '청년' 담론으로 쓰면서 마지막 제언에 '탈-청년'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때의 심사평은 '너 청년연구 안 할거니?' 라는 내용이다. 그때 저는 오히려 '청년이라는 말을 없애야 한다'는 쪽이었다. 그 사이에서 청년연구자 분들이 사실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다. 한 연구자의 경우 최근 보니 청년정책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말씀하신다. 저 같은 경우 내가 쓰지 말자고 해서 청년이라는 말을 안 쓸 수 있냐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나의 선택지는 어려울지라도 말을 잘 사용하는 것에 기여할 수밖에 없지 않나.

[7회차] - 청년X대학

발표1: 김선기(연세대)

“대학원생을 연구한다는 것의 의미”

발표2: 김민섭(<대리사회> 저자)

“청년 연구자와 대학 노동”

사회자(정보영): [종합 토론] 자신의 경험이나 정책의 방향 등 어떤 것이든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우리 스스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질문자 1: '슬픈 대학원생의 초상'을 보며 대학원생에 대한 낙관이 깨지고 대학원생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생각이 들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임금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학생회, 노동조합과 같은 어떠한 단체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규모가 적은 대학원생들이 단합을 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뭉칠 수 있을까? 대학원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학생, 연구자로 인식을 하지 노동자로 인식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 대학원생으로서 노조를 하면 주위의 불편한 시선이 따라오기에 가능할까?

발표자(김민섭): 개별단위의 학생회는 대학을 상대로 무엇을 얻어낼 수 없으며, 얻어내더라도 한시적이기에 제도화가 되어야 한다. 모든 대학이 일괄적으로 적용 받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이다. (현재도)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전원협이라는 학생회 연합이 있지만 많지 않다. 7~10개 대학이기에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도'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에게 더 이상 장학금,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면 안 되고, 일하는 학생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동의한다. 대학원생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드라마에 나오는 대학원생. 고난은 공부에 대한 고난이지, 노동에 대한 고난이 아니다.

한 가지 더, 대학이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청년 시간 강사는 단기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근로기준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다. 대학이 법을 해석하기 나름이다. 주당 6시간 근무라고 했을 때 6학점을 하는 선생님은 강의준비, 강의 후 면담, 채점 및 첨삭 시간을 합치고 강의를 위해 연구해온 시간을 합치면 단순한 주당 6시간이 아니게 된다. 우리가 구축해야 할 전선은 '대학은 위법을 하지 않지만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고, '대학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서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자 2: 조교노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설립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대학 내 학생운동이나 다른 노동에 비해 지식 노동자 운동만은 왜 조성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다른 분야에서는 문제의식 공유가 잘 되는데 왜 학내 노동자와는 안 되는가 하는 고민이 든다.

발표자(김선기): 뻔한 대답이지만, 환경 자체가 노조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인 것 같다. 대학원이 봉건적이라고 느끼는데, 그 봉건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있어서 정당화의 수사가 많다. 예를 들어 돈을 버는 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이 “너는 왜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니”라는 언사. ‘너는 노동자가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환상, 혹은 내가 지켜가고 싶은 것을 건드리며 도덕적인 정당성의 수사로 이런 관계로 옮겨간다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고. 노조 결성이 힘든 이유는 대학원생들 간의 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 대학원생 인터뷰를 할 때도 내가 학교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 공간에 애정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여기(대학원)가 꿈인 경우 여기서 나갈 방도를 찾기 힘들어진다. 대안적인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학 외에 나의 연구, 공부에 준거를 둘 수 있는 대안적인 것들이 성장했을 때 역으로 대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레지던시의 사례처럼. 나름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대학 외 다른 연구 공동체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협상력이 (대학원생들 혹은 연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발표자(김민섭): 왜 지식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지 않는가? 첫째로, 지식노동자들은 노동자라는 감각이 부족하다. 장학금이 노동자라는 감각을 지운다. 따라서 조교도 노동자라는 감각이 들어와야 한다. 해외의 경우 노조가 있고, 대학 안에서 노동하는 청년들은 모두 노동자라는 인식이 있다. 대학이 이러한 상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이러한 구호들이 대학 안으로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노조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다. 둘째는 두려움이다. 교수들의 눈 밖에 나면 교수가 논문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교수들의 눈 밖에 났을 때 동료들에게도 버림을 받는다. 지도교수에게 갑으로서의 권력이 집중된 것이 한국 대학의 현실이기에, 많은 것들이 무시되고 있다. 셋째는 비겁함 때문이다. 인문학자로서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눈앞의 똥은 피하며 남들 똥은 잘 평가하는 것. 저 역시 두

려움과 비겁함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질문자 3: 이 강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교수 상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이 하는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엔 대학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도 있다. 이런 제도들에 대한 토론회에 가든 어딜 가든 대학의 사회제도는 정말 최악이다. 최저임금이라던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시간강사 분들도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보며, 대학 안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 어떻게 되었길래 대학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고민이 많았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많이 든다.

발표자(김민섭): ‘어떤 싸움이 있었을까’라고 얘기했지만, 싸움은 없었을 것이다. 내가 청년 노동자가 되었을 때 공부를 했을 때 수련을 하는 느낌이었다. 수업료를 내지 않고 스승의 밥, 옷 빨래, 안마해주고 수련을 하는 식. 마치 대학원이 이런 현장이다. (...)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바꾸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학원생이나 시간강사들이 몇 사람 앞으로 나아갈 텐데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한다. 자기가 겪었던 균열에 대한 것들을 자신이 중심으로 한 발 나아갈 때 균열을 메워버리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따라서 청년연구자에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점은, 지금 보는 균열들을 계속 바라보고 자신이 (중심에) 한발 가까워졌을 때 그 균열을 고치려 해야 한다. 균열을 보는 ‘경계인’으로서 계속 균열을 메우기 위해 바라봐야 한다.

발표자(김선기): 요즘 생각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으며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 때는, 협상력이 생긴다. 교수가 값이 아난, 행정부가 값이고, 임금도 싸지만, 대학원생들의 입장에서는 대학 내보다 많은 이득을 얻는.

발표자(김민섭): 김선기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안을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대안들은 사실 없어져야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중고등학교 학부형들 보면 대안학교에 자신을 보내 인정을 받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사실 ‘각자도생’이기도 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을 탈주하는데, 대학을 정상화 하는 것이 먼저고, 이후 대안을 찾는 것이 순리인 것 같다.

발표자(김선기): 대안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대안학문공동체에 대해서도 (...) 교수님과의 관계와 같이 부정적인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들었다. 하지만 학내 문제에 대해서 대학 안에서 방법이 없다 느껴지니 대안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다. 법을 이야기하신 부분이 좋았다. 자생적인 연구공동체보다 차라리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지자체에서 청년연구자, 독립 연구자, 일반인 등에 연구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확대시킴으로써. 나는 운이 좋게 그런 것들을 수혜 받았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 같다. 대안적인 통로들이 적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므로써 학교 안에서는 내가 할 일까지 다른 이들이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제도들이 대학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질문자 4: 저는 대학에서 일찌감치 나왔고. 연구공동체에서 10년간 있다가 최근에는 책을 가까이했던 사람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가장 공감했던 것은 ‘사회인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사회적 사이클에 맞지 않는 사람의 초상이랄까.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꼬맹이(아이)가 있었다. 부모님이 박사를 가라 했지만 시간도, 돈도, 미래도 없어 학위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인정욕구, 성과의 힘이 크다고 생각한다. 교수라는 직위와 욕구가 없으면, 밖에서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논문 작성의 동력이 떨어진다.

발표자(김민섭): 대학 밖에서 무엇을 먹고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 글이나 강연이 있다. 허나 지금은 대학 밖에서의 그런 삶 역시 대학만큼 흑독하지는 않은가. 나도 대학 나와서 처음 느낀 것은 막막함과 외로움이었다. 그간 할 줄 아는 것이 논문과 글인데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라는 선생님과 비슷한 고민이 있다.

〈부록2〉 어머 이 책은 읽어야 해! (추천도서)

| 저자 | 책 제목 | 출판사 | 출판 년도 | 추천자 |
|---------|---|-----|----------|-----|
| 청년유니온 외 | 이런 시급 6030원: 2016년 최저임 금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 북콤마 | 2015 | 정보영 |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다. 2016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초로 청년-대표자로서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포함되었다. 이 책에서는 청년 유니온이 어떻게 최저임금 운동을 해왔는지, 그동안 불투명하게 진행되어왔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유니온 | 레알 청춘 | 삶장 | 2011 | 정보영 |
|---|-------|----|------|-----|
| 이 보고서를 보고 청년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은 청년유니온 구성원들이 종합격투기 선수, 연극배우 지망생, 임용고시 준비생 등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모았다. 2011년에 출간된 책이라 시차는 약간 있지만 청년연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것이다. | | | | |

| 곤노 하루키 | 블랙기업 | 레디셋고 | 2013 | 정보영 |
|--------|------|------|------|-----|
|--------|------|------|------|-----|

‘블랙기업’이란 일본에서 등장한 용어로 ‘청년’을 불법적으로 고용해 일회용품처럼 쓰다 버리는 악덕기업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전형적인 블랙기업의 운영원리를 고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안정노동이 ‘청년’에게 심각한 문제인 만큼 블랙기업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를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을 흥미롭게 읽었다면, 〈블랙기업을 썩라!〉, 〈이 회사도 블랙기업일까?〉 등의 블랙기업을 다룬 후속 도서들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 정희진 | 페미니즘의 도전 | 교양인 | 2005 | 박경국 |
|---|----------|-----|------|-----|
| 교차성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책. 청년-여성만 다루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정체성이 교차하여 경험하는 현실이 '여성'이라는 공통의 생물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매우 다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청년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 | | | |

| 폴 윌리스 | 학교와 계급재생산 | 이매진 | 2004 | 박경국 |
|-------|-----------|-----|------|-----|
|-------|-----------|-----|------|-----|

폴 윌리스는 체제에 대한 저항이 계급 재생산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자기계발과 체제에 대한 저항 사이에서 저항을 선택하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저항이 꼭 희망찬 미래를 보장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최서윤 외 | 흠흠 청춘 | 세창미디어 | 2016 | 채태준 |
|--|-------|-------|------|-----|
| 16년 6월 출판되었다. 〈월간인여〉 최서윤 편집장을 포함해서, 대학원생, 웹툰 연구자, 시간강사 등의 필자들이 함께했다. '청년'과 합치하거나 거스르는 각자의 구체적 기록 | | | | |

이 담겼고, 청년이 등장하거나 청년의 것으로 여겨지던 문화 텍스트들을 분석했다. 여기에 청년세대론에 대한 비판적인 고민과 대안까지 이야기한다.

| | | | | |
|-----|-------------------|-----|------|-----|
| 엄기호 | 이것은 왜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 | 푸른숲 | 2010 | 김지수 |
|-----|-------------------|-----|------|-----|

청년을 대상으로 한 '탈정치' '속물'과 같은 기성의 여러 가지 호명들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반박했던 저술이다. <이청말>을 시작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청년 세대를 재단했던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적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88만 원 세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강의실에서 일상의 학생들과 소통하고 때로는 그들의 생산물을 직접 인용하는 엄기호의 작업은, 현실담론에 대한 개입적이고 비판적인 청년 문화연구의 시론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
|-------|--------|-------|------|-----|
| 김수환 외 | 속물과 잉여 | 지식공작소 | 2013 | 김지수 |
|-------|--------|-------|------|-----|

국문학과 사회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속물'과 '잉여문화'라는 주제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를 재해석한 논문들의 모음집이다. 이 작업들의 의의는, '속물'이라는 호명이나 '잉여'라는 코드가 마치 현대 사회 2-30대 청년들만이 향유하거나 부여받는 '세대적 코드'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87년 체제 이후'로 설명되는) 한국 사회의 역사성 속에서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임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 | | | | |
|-------------|---------|----|------|-----|
| 조한혜정, 엄기호 외 | 노오력의 배신 | 창비 | 2016 | 구승우 |
|-------------|---------|----|------|-----|

이 책은 '헬조선'이라 호명되는 지금 여기의 청년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그 미래에 대한 진단,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눈여겨볼 점은 작업의 수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업은 약 1년간 연구자들간의 집중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문제의식을 버려내고, 지금 여기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 주체들의 삶의 경험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듣고자 했다. 또한 이 책은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의 비공개 포럼을 통해 나온 청년 당사자들의 생경한 목소리를 엮어낸 책으로, 청년 당사자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지,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대안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과 청년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련의 문화연구자들의 진단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미스핏츠 | 청년, 난민 되다 | 코난북스 | 2015 | 구승우 |
|------|-----------|------|------|-----|

대만, 홍콩, 일본, 한국의 청년들이 마주한 주거 문제에 대한 미스핏츠의 탐사보도를 엮은 하나의 르포르타주 성격의 책이다. 이 책은 단순한 수치와 통계를 넘어, 지금 여기의 청년들이 마주한 주거 문제를 저자들 자신 그리고 그들이 만난 청년들의 생경한 목소리를 통해 풀어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당연한 말이지만 청년 주거 문제에 있어 당사자인 청년들의 경험과 청년 주거와 관련하여 대안을 모색해 온 단체들, 그리고 저자들의 경험을 교차하며 지금 여기의 청년들에게 주거, 즉 집의 의미에 대해 묻고자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책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탐구하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주거 경험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의미를 탐구함에 있어 좋은 하나의 경험적 자료가 될 것이다.

| | | | | |
|-----|--------|-----|------|-----|
| 정민우 | 자기만의 방 | 이매진 | 2011 | 구승우 |
|-----|--------|-----|------|-----|

이 책은 고시원을 비롯한 원룸텔, 리빙텔, 그리고 옥탑방과 반지하와 같은 주거빈곤에 처한 '집 없는 청년'들의 집에 대해 세밀한 시각으로 풀어낸 작업이다. 이 작업은 저자와 저자가 만난 다양한 '집 없음'의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집에 대한 열망과 불안, 그리고 균열하는 한국 사회 내 규범적인 집의 의미에 대해 풀어낸 글이다. 이 책은 특히 고시원이라는 대표적인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경험을 통해 이들이 써나가는 독립의 서사와 '집'이라는 대상이자 규범에 대한 균열의 의미를 세밀하고도 유려하게 풀어낸 작업으로, 청년들의 주거와 공간, 그리고 독립과 정상가족에 대한 의미의 균열과 그로 인해 발현되는 문화정치적 함의를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이 책은 청년들의 주거 공간과 점점 해체되어가는 정상생애에 대한 규범성에 대한 귀중한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카를 만하임 | 세대 문제 | 책세상 | 1929/ 2013 | 김선기 |
|--------|-------|-----|---------------|-----|

세대(generation)을 논의하는 아마도 세계의 거의 모든 저자들은 인용이든 비판이든 만하임의 세대사회학 이론으로부터 출발한다. 세대 문제에 관한 거의 첫 번째 논문이었던 1929년 만하임의 논문은 오늘날의 세대 현상이나 '청년' 문제를 이해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청년' 문제를 조금 더 사회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연구자라면 가장 먼저 읽어봄 직한 책이다. 길어도 길지 않고, 값도 싸다.

| | | | | |
|-------|------------|-------|------|-----|
| 박경숙 외 | 세대갈등의 소용돌이 | 다산출판사 | 2013 | 김선기 |
|-------|------------|-------|------|-----|

세대의 개념을 연령 코호트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또 대규모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하여 세대별 평균치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양적 방법으로 진행된 세대 연구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세대 차이를 선형적으로 전제하거나 작은 차이라도 세대 간의 가치관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흔적 없이 나타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세대 연구의 표본이라고 여겨진다.

| | | | | |
|-----------------------|------------|----|---------------|-----|
| 울리케 유라이트, 미카엘 빌트 (역음) | '세대'란 무엇인가 | 한울 | 2005/ 2014 | 김선기 |
|-----------------------|------------|----|---------------|-----|

만하임 이후 세대사회학이 이론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청년'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 왔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 된다. 독일에서 이루어져 온 세대에 관한 연구의 (그나마 가장) 최신 버전의 글들이 실려 있다.

〈부록3〉 어머 이 논문은 읽어야 해! (추천논문)

| 저자 | 논문 제목 | 발행처 | 발행 년도 | 추천자 |
|-----|-----------------------------------|-------|----------|-----|
| 전상진 |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 세대개 념의 분석적 구분 | 한국인구학 | 2002 | 구승우 |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세대사회학 연구를 위한 시론적인 연구로 세대개념에 내재된 다의성과 모호함을 개념의 사용맥락에 따라 분석적 구분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사회변동과 혁신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학적 범주로서 세대개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형성의 역사적 과정, 그리고 사회영역의 특성에 따른 기존 세대개념의 체계적 정리를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세대개념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던져준다는 지점에서 그 의의를 갖으며, 한국 사회에서 청년문제, 그리고 세대 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념적인 측면에서 나름 유용한 참조점이 될 수 있는 논문이다.

| | | | | |
|-----|--------------------|--------------|------|-----|
| 천주희 | 대학생은 어떻게 채무자가 되는가? | 연세대학교 대학원 | 2015 | 구승우 |
|-----|--------------------|--------------|------|-----|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 그중에서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영역의 구성과 그를 통한 사회 재생산에 대해 부채 메커니즘을 통해 풀어내고자 한 작업이다. 천주희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학력주의의 흐름 속에서 '채권-채무'의 새로운 권력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과 그로 인한 '학생-채무자' 주체의 형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구조적 맥락에서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갖는 의미와 대학을 강요하는 사회적 흐름과 그러한 과정에서 채무자가 되는 대학생 주체들의 삶의 경험을 직조하며 '학생-채무자' 주체라는 새로운 주체성을 탐구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 | | | | |
|-----|--|------------------------|------|-----|
| 장민지 | 유동하는 세계에서 거주하는 삶: 20, 30대 여성청년 이주민들의 '집'의 의미와 장소화 과정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 2015 | 구승우 |
|-----|--|------------------------|------|-----|

이 연구는 여성청년 이주민들의 '집'의 의미와 장소화 과정에 대해 주목한 작업이다. 이 논문은 청년들의 이주와 장소화 과정을 젠더적 관점을 통해 바라보고자 했다는 지점에서 그간 등한시되어왔던 청년과 주거, 장소화, 그리고 젠더적 관점이 결부된 작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여성청년 이주민들의 경험과 그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의미에 집중하여 집에 대한 일상적이고 구체화된 경험에 대한 문화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나아가 장소화 과정을 미디어 수행성의 측면과 연결해 바라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통찰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 | | | | |
|-----|--|--------------|------|-----|
| 정민우 | 청년세대의 주거와 이동, 정체화의 불/ 연속성: 고시원 사례를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대학원 | 2011 | 구승우 |
|-----|--|--------------|------|-----|

이 연구는 주거빈곤에 처한 '집 없는 청년'들의 삶과 그 의미를 고시원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풀어낸 작업이다. 연구자인 정민우는 청년들의 정체화를 분석하는 것에 있어 '독립'의 서사가 구축되는 방식에 주목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이 고시원이라 불리는 공간에 거주하게 되는 구조적 맥락과 경험, 그리고 그를 통해 '집'이라는 관념이 의미화되는 방식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 작업은 청년들의 주거 경험과 '집', 그

리고 독립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특히 이 연구는 고시원이라는 공간과 '집'에 대한 의미를 세밀하게 탐구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을 중층적으로 관찰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청년들의 구체적인 주거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집'에 대한 욕망과 불안, '집'이라는 대상이자 규범에 대한 의미가 균열되어가는 과정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주거와 이동, 그리고 주거 경험을 통한 정체화의 불/연속적인 국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 | | | |
|-----|----------------|-------|------|-----|
| 김세균 | 한국의 정치지형과 청년세대 | 문화/과학 | 2010 | 정보영 |
|-----|----------------|-------|------|-----|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연구인 김세균의 연구는 한국 정치지형의 역사와 그 속에서 탄생한 '청년'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연구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청년세대를 바라본 연구를 찾고 있다면 추천한다.

| | | | | |
|-----|----------------------------------|--------|------|-----|
| 이병희 |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 산업노동연구 | 2011 | 김지수 |
|-----|----------------------------------|--------|------|-----|

청년실업의 원인을 '눈높이 조절 실패'로 진단하는 기존 해석들에 대한 반박비평과 기사글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작업처럼 연구문제의 차원에서 정면으로 반박을 가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저자는 의중임금과 수락임금의 현실적 통계자료를 비교/분석하면서 실증적으로 실업의 원인이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했음을 밝혀낸다.

| | | | | |
|-----|---------------------|---------|------|-----|
| 정준영 |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 월간 복지동향 | 2016 | 김지수 |
|-----|---------------------|---------|------|-----|

저자는 현재의 청년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청년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청년실업 문제들을 새롭게 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단순히 '양적/단기적 성과 중심 정책'을 서술적으로 비판하는 기존 연구들에 반해, 청년정책 담론이 견지하는 시각 전반을 가장 핵심적으로 짚고 굽게 접근했던 주목할 만한 비평이다.

| | | | | |
|----------------------------------|--|----------|------|-----|
| 이기형, 송동욱, 구승우, 정준, 김지수, 이단비, 박주화 | 청년주체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중심으로 한 구직 경험의 문화적인 분석 | 한국언론정보학보 | 2015 | 박경국 |
|----------------------------------|--|----------|------|-----|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구직자의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을 분석한 논문이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경험과 그로부터 형성된 감정구조를 '신자유주의'로 환원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전시된 경험과 실제 경험 사이에서 괴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순과 합리화 과정이 흥미롭다.

| | | | | |
|----------|-------------------------------------|-------|------|-----|
| 정민우, 이나영 | 청년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학 | 2011 | 박경국 |
|----------|-------------------------------------|-------|------|-----|

<자기만의 방>이 길어서 읽기 힘들다면 이 논문을 추천

| | | | | |
|-----|----------------------|-------|------|-----|
| 박찬주 | 청년세대의 노동현실에 대한 의미생산과 | 서울여자대 | 2016 | 박경국 |
|-----|----------------------|-------|------|-----|

| | | | | |
|---|--|------------|------|-----|
| | 해석적 위치 : 드라마 <미생>을 중심으로 | 학교 | | |
| 해석적 위치에 따라 청년이 <미생>을 받아들이는 양태가 다르다. 청년은 '수용자' 위치에 일차원적으로 고정되어 않고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재전유한다. | | | | |
| 장민지 | 유동하는 세계에서 거주하는 삶: 여성청년 이주민의 장소만들기 | 문화연구 | 2016 | 정보영 |
|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여성청년'들의 장소화 과정을 다룬 연구이다. '청년'의 주거를 빈곤의 관점에서만 파악해왔던 기존의 연구에서 주체적으로 장소성을 만들어나가는 '청년' 주체들의 모습을 조명한 것이 흥미롭다. 같은 주제로 작성된 연구자의 학위논문에서 더 폭넓은 논의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함께 추천한다. | | | | |
| 이재경, 장지연 | 한국의 세대불평등과 세대정치: 일자리 영역에서 나타나는 정책주도 불평등을 중심으로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 2015 | 정보영 |
|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세대갈등이 정책으로 인해 정치화되는 과정을 탐구하고 있는 연구이다. 특히 일자리문제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있으므로 일자리문제와 세대론을 교차시켜 보고 싶다면 추천한다. | | | | |
| 박재홍 | 세대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 | 한국인구학 | 2001 | 채태준 |
| 세대 개념의 모호함과 이로 인해 생기는 연구 과정에서의 문제, 세대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쟁점들을 다룬다. 시론적 논의이지만 여전히 세대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에서 범하는 오류들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 | | | |
| 김영, 황정미 | 요요이행'과 'DIY'일대기 :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 한국사회 | 2013 | 채태준 |
| 청년의 노동을 연구한 결과물들 중 질적 방법론을 차용한 보기 드문 연구다. 청년들이 노동경험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특히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경험을 생애 서사의 차원에서 다룬다. | | | | |
| 류연미 |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 서울대학교 | 2014 | 채태준 |
| 청년허브의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활동가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새로이 등장한 '활동'이라는 실천을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스스로 정체화하는지를 분석한다. 담론, 제도, 실천의 차원에서 활동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 | | | |
| 배은경 | 청년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 젠더와 문화 | 2015 | 채태준 |
| 3포세대를 위시한 '청년' 담론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실현 불가능의 서사로 진단한다. 물젠더적인 '청년' 담론을 젠더화하는 것이 해당 연구의 목적이다. 젠더화를 위해 여성 주체들을 가시화하는 방법이 아닌, 오늘의 '청년' 담론을 남성성 이론을 통해 분석하며,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아닌 대안적 남성성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 | | | |

| | | | | |
|-----|---------------|-------|------|-----|
| 김선기 | 세대연구를 다시 생각한다 | 문화와사회 | 2014 | 채태준 |
|-----|---------------|-------|------|-----|

세대사회학 및 세대연구자들의 성찰적인 접근을 주장하는 연구. 그동안의 세대사회학의 연구, 혹은 세대를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 담론으로서의 세대를 실재하는 것을 과장한 뒤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연구는 담론으로서의 세대에 관해 고찰하며, 세대담론을 생성하거나 승인하는 행위자로서의 세대연구자의 성찰을 요구한다.

| | | | | |
|----------------|-----------------------|----------------------------------|------|-----|
| Jonathan White | Thinkings Generations |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 2013 | 김선기 |
|----------------|-----------------------|----------------------------------|------|-----|

영국에서 오늘날 세대담론이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배경과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그러한 현상을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흥미로운 연구다. 이 연구에는 세대주의(generationalism)라는 개념이 제시되는데, 오늘날의 세대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 | | | |
|--------------|--|----------------------------------|------|-----|
| Karen Foster | Generation and discourse in working life stories |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 2013 | 김선기 |
|--------------|--|----------------------------------|------|-----|

화용론적 관점에서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언술에서 어떠한 세대담론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다. 일상생활 속에서 세대의 개념과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25세부터 86세까지 52명의 캐나다인들을 인터뷰했는데, 흥미로운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 | | | | |
|-----|---|---------------------------|------|-----|
| 전상진 | 경제민주화와 세대 : '연금을 둘러싼 세대들의 전쟁' 레토릭에서 나타나는 세대 의미론과 활용전략의 변화 |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294-324쪽) | 2013 | 김선기 |
|-----|---|---------------------------|------|-----|

오늘날 세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것처럼,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를 경제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논의가 많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노인연금과 관련된 논의는 청년들에게 매우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담론이 실질적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의의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그러한 담론이 정치적으로 '쓰이는(use)'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 | | | | |
|---------------|--------------|----------|------|-----|
| 원용진, 이동연, 노명우 | 청소년주의와 세대 신화 | 한국언론정보학보 | 2006 | 김선기 |
|---------------|--------------|----------|------|-----|

이 연구는 '청년'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청소년'에 관한 연구이다. 그러나 사실상 해외에서 youth라는 단어가 한국의 '청년'보다는 '청소년'이라는 단어에 더욱 부합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또 '청년'에 관한 사회적인 이해와 '청소년'에 관한 사회적인 이해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년'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청소년'에 관한 문헌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주의에 관한 논의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청년에 관한 어떠한 관점과도 거의 완전히 부합하는 점이라는 면에서 '청년' 연구자들이 이 논문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 | | | |
|-----|-------------|-------|------|-----|
| 신광영 | 세대, 계급과 불평등 | 경제와사회 | 2009 | 김선기 |
|-----|-------------|-------|------|-----|

〈88만원 세대〉가 제시한 ‘세대가 곧 계급이다’라는 공식에 대해서 이 연구는 실증적인 방식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반박한다. 연구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보다 오히려 세대 내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라고 언급한다. 오늘날의 세대 현상 혹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대와 계급이 어떻게 교차하여 불평등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보아야 할 논문이다.